

팜플렛 ‘노동자의 사상’을 발행하며

우리는 처음으로 발행되는 이번 팜플렛 ‘노동자의 사상’에서 주로 사회주의와 관련한 세 개의 글을 싣고 있다.

첫 번째 글은 「쏘련 사회주의의 붕괴 - 계획과 시장의 문제를 중심으로」이다. 이 글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이론지 『노동사회과학』 제3호에 기고한 글이다. 이번 팜플렛에서는 이 기고 글에서 간략하게 다루고 있는 유고 시장 사회주의의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수정주의의 전위, 유고 시장사회주의」라는 제목의 보론을 실었다.

두 번째 글은 『노동자정치신문 43호(통합 55호)』에 실린 「맑스주의 방법론과 원리를 포기한 사노련의 국가자본주의 비판 - 쏘련사회에 대한 전면 분석에 앞서」란 글이다.

세 번째는 『노동자정치신문 53호(통합 65호)』에 실린 「한국전쟁, 남북전쟁인가? 계급내전인가? - 사노련 국가자본주의의 몰역사성과 물계급성, 반동성」이라는 글이다.

첫 번째 글은 맑스주의 경제학의 관점으로 사회주의에서 시장-상품관계 같은 수정주의의 강화가 쏘련 사회주의 붕괴의 원인이라는 것을 분석하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은 레닌 당시에 취했던 ‘신경제정책’을 수정주의의 근거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레닌의 ‘신경제정책’은 내전과 제국주의의 공격으로 인해 취해진 전시 공산주의 정책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는 자본주의적 요소에 대한 불가피한 ‘후퇴’인 동시에 사회주의 진지를 강화하기 위한 자본주의적 요소와의 ‘계급 투쟁의 수단’이었다. 이 글은 수정주의자들의 근거가 얼마나 맑스-레닌주의에 반하는 정책이었는지, 그것이 결국에는 사회주의의 내적 붕괴로 몰아갔는지를 폭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또한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분석의 전제로 맹목적으로, 또는 반공주의적으로 ‘스탈린주의 관료주의’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반

비판하고 있다. 역사 발전은 진공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재를 짓누르고 있는 과거의 유산 속에서 그 유산을 계승하거나 단절하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건설도 역사적으로 제한된 조건 속에서 무수한 오류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유물론자가 아니라 공장 속에서 현실의 역사를 평가하고 만들어 가려는 관념론자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역사는 해결할 수 있는 과제만을 제시한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역사적, 과학적 관점에서 이른바 ‘스탈린주의’에 대해 바라봐야 한다. 과연 쏘련에서 사회주의 건설은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오류와 한계는 무엇이고 그것이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 글은 ‘쏘련 사회에 대한 전면 분석에 앞서’라고 부제를 달고 있는 두 번째 글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좀 더 심화시켜서 쏘련 사회주의 생산과 분배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글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쏘련 사회주의에 대한 평가의 문제는 한 개인과 집단만의 몫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이고 집단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것은 또한 현실의 노동자계급의 투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그것은 철저히 맑스-레닌주의의 정치사상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론에서는 사회주의 국가 최초로 노동자 자주관리와 시장 사회주의를 도입하였던 유고 사회주의의 경험을 통해 사회주의 붕괴의 교훈을 찾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유고의 시장 사회주의가 사회주의 ‘수정주의의 전위’였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주의의 중앙집중 계획을 비판하고 민주적 계획, 분산화 된 계획을 주장하는 정치 세력들은 결국 유고의 시장 사회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 사회주의’는 그 자체로 성립될 수 없는 형용모순(形容矛盾)이다. 자본주의는 시장이 지배적인 사회이지만, 사회주의에서 시장은 사

회주의 발전과 함께 궁극적으로 사라져야 할 대상이다. 물론 높은 수준의 공산주의로 발전하기 이전의 사회주의에서는 시장적 요소를 단박에 없앨 수는 없다. 자본주의의 유산으로 남아 있는 사회주의에서의 시장적 요소는 부분적으로는 활용의 대상이지만 사회주의 생산의 원리인 계획이 중심이 되어 시장과의 투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그런데 ‘시장 사회주의자’들은 시장의 부분적 활용에서 시장 사회주의로, 시장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시장으로 넘어가 자본주의에 최종적으로 굴복해버렸다. 결국 유고에서 시장사회주의의 형용모순은 결국 화해할 수 없는 실재하는 모순으로, 적대적인 모순으로 변해버렸던 것이다.

두 번째 글은 맑스주의 철학의 원칙과 방법론으로 쏘련 사회를 국가자본주의라고 비판하는 사노련을 중심으로 해서 트로츠키주의 진영 일부에서 제기하는 국가자본주의 이론을 비판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실 사회주의를 국가자본주의로 보는 국가자본주의 진영은 “맑스의 자본론의 원리와 방법으로 쏘련 사회를 분석해 보라는 지극히 원칙적이고 과학적인 비판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세 번째 글은 국가자본주의론이 비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의 구체적인 역사에서 얼마나 반동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해방 이후의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역사와 현실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과학적 이론과 역사인식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글을 통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의 사상’을 대략 3달여에 걸쳐 한 번씩 발행하게 될 것이다.

청산주의와 몰과확성, 물계급성이 판치는 우리 운동의 현실에서 이 팸플릿 ‘노동자의 사상’이 맑스-레닌주의의 과학성과 혁명성을 살리는 노동자의 전투적 무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0년 3월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쏘련 사회주의의 붕괴 - 계획과 시장의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괴롭고 쓰라린 진실을 솔직히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의 난관들을 극복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V. I. 레닌)

쏘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에 그것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와 투쟁이 진행되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트로츠키주의 정치세력 중에서 국가자본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활발하게 규명이 진행되었다. 이들은 1928년 집산화를 계기로 해서 30년대부터 스탈린주의 반혁명 세력에 의해서 쏘련이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복귀되었고, 따라서 1991년 쏘련의 붕괴는 사회주의의 붕괴가 아닌 단지 국가자본주의 체제의 붕괴에 다름 아니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쏘련 사회주의의 붕괴를 진정한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는 계기라고 보면서 환영했다. 조정환 등 자율주의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세력들이 이 주장을 중심으로 해서 쏘련 사회 붕괴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국가자본주의는 맑스의 《자본론》의 원리로 쏘련 사회의 자본주의성을 규명해보라는 원칙적인 입장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지극히 비과학적인 이론이다. 그리고 사회 성격을 그 사회의 구체적인 현실에 근거해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자본주의라는 도그마를 가지고 현실을 갖다 맞추는 독단적이고 종파주의적인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쏘련 붕괴를 계기로 제국주의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주장과 결과적으로 동조하게 되는 지극히 반공주의적인 입장이다. 이로 인해 이들의 주장은 70년 이상에 걸쳐 강력하게 현실로 존재했고, 여전히 일부 국가에서 존재하는 사회주의를 부정함으로써 이상적인 사회주의를 일구는 새로운 계기가 아니라 사회주의가 원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회의주의와 청산주의를 가져 오는데 일조하고 있다.

쏘련 붕괴 이후에 쏘련의 사회성격을 ‘국가 사회주의’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PD경향의 세력들도 있는데 그들은 사회주의가 발전할수록 국가가 소멸로 가야하는데 국가권력이 강화됐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이들은 제국주의의 포위와 내부의 계급투쟁 속에서 사회주의 국가권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회주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그러한 비현실적인 비판 외에 이들에게는 쏘련사회에 대한 어떠한 과학적인 분석도 기대할 것이 없다.

한국사회에 강요된 반공주의와 지적 식민주의, 지적 게으름과 탐구 정신의 부족 등으로 인해 이러한 독단적이고 비과학적인 주장이 여과 없이 받아들여져서 만연하게 되었다. 최근에 와서는 쏘련사회의 붕괴 원인에 대해 과학적으로 규명하고자하는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아니, 쏘련의 붕괴 이후에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이뤄진 이론적·실천적 시도들이 이제야 겨우 한국사회에 받아들여지면서 주체적 고민으로 수용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쏘련사회의 붕괴 이유에 대해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대체로 두 가지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그리스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전 세계의 주요한 정치세력들은 쏘련의 몰락이 스탈린의 사망 이후에 20차 당대회로부터 시작된 흐루시초프 수정주의 흐름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주장



한다. 맑스-레닌주의 독일공산당(MLDP) 같은 마오주의적 경향을 가진 맑스-레닌주의 정치세력들은 흐루시초프의 수정주의 반혁명 쿠데타로부터 쏘련사회가 새로운 유형의 국가독점 자본주의로 변모했으며 쏘련은 이를 바탕으로 사회제국주의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수정주의적 흐름을 쏘련 붕괴의 주된 원인으로 사고한다는 점에서는 그리스공산당의 입장과 유사하지만 이때부터 쏘련이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 사회라고 본다는 점에서는 국가자본주의 입장과 유사하다. 다만 이들은 반혁명의 시기가 스탈린 이후인 흐루시초프 집권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점에서 국가자본주의 입장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흔히들 역사에서 레닌만큼 사회주의 적대자들로부터 적대와 시기, 규탄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한다. 또 사회주의의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레닌만큼 찬사와 존경을 받는 사람도 없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은 스탈린만큼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람들로부터 적대와 시기, 찬사와 존경을 동시에 받는 인물은 없을 것이다. 스탈린은 제국주의자나 사회주의 적대자로부터 심지어는 파시스트 히틀러와 동일한 사악하고 악마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바로 이 스탈린에 의해서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쏘련 사회주의의 전제와 억압이 시작되었다는 비난이 이뤄지고 있다.

물론 제국주의자들은 이것의 뿌리는 레닌과 볼셰비키의 러시아 혁명으로부터 시작되며 맑스와 엥겔스는 이러한 사회주의 독재의 이론과 원리를 제공했다는 언사도 빠뜨리지 않는다. 그러나 일정한 왜곡과 편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조류의 사회주의 진영으로부터 레닌은 스탈린 처럼 적대와 저주를 받고 있지는 않다. 스탈린은 스탈린과 그 정치체제를 타도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트로츠키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사민주의와 유로 코뮤니즘 세력들로부터도 비난과 적대를 받고 있고, 이른바 ‘개인숭배’와 ‘공포정치’를 이유로 사후에 들어선 흐루시초프 세력들로부터 시작해서 ‘신사고’를 외치며 쏘련 사회를 직접적으로 붕괴하게 만든 고르바초프 정치집단들로부터도 극도의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반면에 스탈린은 당시 전 세계의 공산당들과 인민들로부터 레닌 사후에 러시아 사회주의의 기초를 다지고 파시즘과의 투쟁 속에서도 러시아 사회주의의 거대한 발전을 이룩하고 식민지 해방을 이루는 데 결정

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되기도 한다. 스탈린은 쏘련 붕괴 이후 실업과 착취의 강화, 빈부격차의 확대 등 자본주의의 적대적 모순들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쏘련 인민들로부터 다시 존경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스탈린주의’를 바라보는 역사적, 과학적으로 올바른 방법

스탈린이 시기와 적대, 동시에 존경과 극찬의 대상이 된 것은 러시아 혁명 이후 30여 년 동안 사회주의를 건설한 실질적인 건설자라는 데 이유가 있다. 스탈린과 당시의 러시아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세력들로부터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비판은 ‘스탈린주의 관료주의’가 쏘련 몰락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스탈린주의’ 비판은 사회주의에 적대적인 자본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반공주의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사회주의의 건설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주의 체제의 오류, 부정적인 측면도 한몫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스탈린주의’ 비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롭게 과학성을 회복해야 한다.

첫째, 가장 먼저 반공주의로부터 최대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인 반공주의는 심지어 대다수 대중들한테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의 반공주의는 그 어느 국가보다 더 극심한데 이로 인해 반공주의적 이데올로기와 정보 왜곡, 역사 왜곡, 부르주아 이데올로기 등으로 인해 사회주의 역사에 대해 지극히 잘못되고 편향된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심지어 반공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그것도 극악한 반공주의가 판치는 분단된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사회주의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의식적으로 극단적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인 반공주의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특히 트로츠키 진영 내부의 가장 극단적인 기회주의자들이라 할 수

있는 정치세력들은 쏘련을 국가자본주의라고 봄으로써 쏘련과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북과 쿠바 등의 사회주의에 대해 타도해야 할 착취체제, 반동체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의 반쏘·반공주의는 우리에게 부지불식간에 영향을 미치는 반공주의와 달리 마치 국가자본주의 관점이 진정으로 올바른 혁명적 관점이라고 착각함으로써 능동적으로 반공주의를 내면화하고 있다는데 더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내면화된 반공주의는 강요된 반공주의보다 훨씬 더 극복하기 어렵다. 이들 좌익연하는 반공주의자들은 국가자본주의 비판에 대한 과학적 비판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하고 있지 못한데 그것은 이들 스스로가 얼마나 비과학적인 독단과 맹목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둘째, ‘스탈린주의’ 비판이 개인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점은 스탈린을 악마화하는 제국주의 진영뿐만 아니라 흐루시초프의 ‘개인숭배’ 비판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다.

제20차 당대회는 그러나 부정적인 정치적 현상에 대해서 표면적이고 형식적으로 접근했다. 그것은, 집단지도 및 기타 민주집중제 원칙의 붕괴, 국가기관 내의 관료제의 성장, 출세주의, 당의 간부나 지도부에 의한 권력 및 지위의 남용, 사회 전체에 걸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원칙의 위반과 같은 모든 현상의 원인을 단순히 스탈린 ‘개인숭배’에 돌렸다. 이러한 현상들, 특히 국가와 당 조직 사이의 경계선이 모호해진 것이나 당 자체 내부에서 관료주의적 경향이 성장한 것과 관련한 현상들의 구조적 뿌리를 찾아내려는 어떤 시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만 아자드 저, 채만수 역, 《영웅적 투쟁 쓰라린 패배》, 노사과연, p. 130.)

개인숭배의 문제는 일면적으로 제기해서는 안 된다. 개인숭배의 문제는 핵심 지도자에 대한 권위와 신뢰의 표현일 수 있는데 이것을 일면적으로 제기한다면 레닌에 대한 그것 역시도 ‘개인숭배’라고 할 수

있다. ‘개인숭배’는 소련에서 사회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노동자와 인민의 삶을 거대하게 향상시킨 기초를 다지고, 파시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지도력의 중심에 서 있었던 스탈린의 권위와 능력, 헌신에 대한 존경과 신뢰의 표현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과도하게 나타나고 당내 활발한 토론과 민주주의를 제한한다면 극단으로 흐른다면 부정적인 현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개인숭배’ 현상은 집단적 지도체제의 약화의 한 표현일 수 있다. 그러나 ‘스탈린 개인숭배’에 대한 흐루시초프의 비판이나 자본주의 국가의 반공선전은 물론이고 ‘스탈린주의 비판’에서 나타나는 비판은 맑스-레닌주의적 비판이 아니다.

소련 공산당 내부에서의 당내 투쟁은 가장 먼저 일국사회주의를 둘러싼 논쟁에서 비롯됐다. 트로츠키를 비롯해서 지노비예프 등 반대파들은 세계혁명이 되지 않으면 러시아는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고 결국은 자본주의로 복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일국사회주의는 국제주의 정신을 저버린 것으로 소련 사회주의를 민족주의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스탈린은 이에 대해 독일에서의 혁명 패배로 사실상 세계혁명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농민과의 강력한 동맹과 자체 산업발전으로 러시아 내에서 사회주의를 충분히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탈린은 반대파의 주장이 가능성 없는 세계혁명에 기대는 모험주의적인 것이고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패배주의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의 성공적인 사회주의의 건설을 통해 세계혁명의 진지를 구축하고 다른 나라에서의 혁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세계혁명을 추구한다면 일국혁명과 세계혁명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스탈린은 일국사회주의가 승리한다 해도 제국주의가 버티고 있는 한 ‘사회주의의 최종적 승리’는 아니라고 했다.

이러한 스탈린의 주장은 대단히 현실주의적인 것으로 레닌 당시 독일과의 브레스트 조약 체결 과정에서도 유사하게 당과 러시아의 운명을 앞에 두고 당내에서 격렬한 논쟁이 촉발된 바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 논쟁에서 부하린은 좌파 사회혁명당과 결합하여 러시아 혁명이 패배하는 한이 있더라도 세계혁명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로츠키는 이 논쟁에서 ‘전쟁도 평화도 아닌’ 입장에 서 있었는데 부하린과 당내에서 트로츠키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굴욕적이더라도 즉각적인 강화조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레닌의 입장에 대립했다. 레닌은 러시아 혁명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첨예한 당내 논쟁에서 혁명 러시아는 독일과의 전쟁을 수행할 조건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고, 당분간 독일혁명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전쟁을 하자는 것은 극단적 모험주의로 이는 러시아 혁명의 운명을 내건 눈먼 도박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일국사회주의 논쟁 이후 당내에서의 논쟁은 사회주의 건설의 문제였다. 소련의 급속한 공업화 정책과 농업 집단화 정책은 후진적인 러시아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해야만 하는 역사적 필요성 때문에 제기되었다. 이것은 격렬한 당내 논쟁을 유발하였고, 이 당내 논쟁에서 스탈린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사회주의 경제계획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과정에 대해 마치 스탈린의 권력욕의 문제라든지, 당내의 트로츠키와의 경쟁심에서 비롯됐든지 하는 관점은 운동진영 내에서의 소련사회 분석에서도 심심찮게 등장하는데 이것은 물역사적이고 부르주아적인 역사관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소련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가로막는 지극히 비과학적인 입장에 불과하다.

셋째, 국가자본주의 진영의 비판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들은 완전한 사회주의 상을 원리적으로,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현실의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소련을 국가자본주의 사회였다고 비판한다. 이들의 소련 사회에 대한 비판은 비과학적이고 종파주의적일뿐만 아니라 방법론적으로 변증법적 부정이 아니라 전면 부정, 완전 부정의 태도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이런 국가자본주의 입장에 서서 오류와 한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현실의 사회주의가

일궈낸 거대한 성과를 전면 부정한다.

20차 당대회에서 흐루시초프에 의한 스탈린 격하운동이 벌어진 이후에 중국에서는 이것을 두고, 스탈린 시대에 대한 전반적 분석이 결여되어 있고, 자아비판이 없었다는 점, 사회주의 우당들과 사전에 상의하지 않고 제국주의 첩보기관과 언론기관에 먼저 이 내용을 흘린 점 등을 들어서 이러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우리는 스탈린을 역사적 관점에서 보아야 하며, 그가 어떤 점에서는 옳고 그른가를 알기 위해 적절하고 모든 방면에 걸친 분석을 해야 하며 그로부터 유익한 교훈을 끌어내야 한다. 그가 행한 옳고 그른 일들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현상들이었으며 그 시대의 각인을 지니고 있다. (1956년, 중국 《인민일보》 논설 중에서)

쏘련의 1차적인 책임으로 인해 사회주의 국가 간의 국제주의는 심각하게 위협을 겪고 사회주의 국가는 분열되었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사회주의 국가 간의 이러한 분열과 갈등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이후 중국 공산당이 쏘련을 독점자본주의, 사회제국주의로 과도하게 규정했거나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격하 운동에 대한 비판적 관점은 정당한 것이었다.

레닌은 물론이고 수십 년 동안 사회주의를 건설한 주도자였던 스탈린의 경우에도 역사적으로 제한된 현실을 뚫고 모순 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졌던 러시아 사회의 봉건주의적인 잔재와 생산력의 낙후 여기다가 제국주의의 침략과 내전으로 인한 극단적인 어려움, 소농민적인 생산의 지배, 민중들 절대 다수의 문맹과 기술적, 문화적 후진성, 세계 혁명의 실패와 고립 등 극단적인 어려움 속에서 사회주의 건설이 시작되었다. 더욱이 독일 파시즘의 침략으로 인해 쏘련은 2천만 명의 인민들이 죽거나 다치고 산업기반이 폐허가 된 속에서 다시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했다.

이러한 극단적인 조건 속에서도 쏘련은 고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했고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노동시간 단축, 여성의 권리 개선, 문화적 발전 등 노동자인민에 대한 거대한 복지를 일궈냈다. 하지만 동시에 역사적으로 제한된 조건에서 주어진 극단적 외부상황은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엄청난 오류와 한계, 시행착오를 겪게 만들었다. 따라서 우리는 스탈린을 개인이 아닌 역사적 관점에서 보아야 하며, 그 시대의 성과와 한계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모든 방면에 걸친 사심 없는, 과학적인 분석을 하고 그로부터 실질적인, 혁명적인 교훈을 이끌어내야 한다. 파시즘에 대한 승리와 사회주의의 비약적 발전이라는 거대한 성과는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오류와 성과는 쏘련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산주의 건설의 역사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었고, 그것들은 그 시대의 각인을 지니고 있었다. 맑스의 말대로 인간은 살아 있는 세대의 머리를 짓누르는 따라서 현재를 강력하게 규정하는 과거 세대의 역사적 조건, 제한된 상황 하에서 그 자신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명한 역사적 원칙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공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의 오류가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오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의 객관적인 법칙을 어길 수는 없지만 인간의 주체적인 노력, 사회주의에서는 노동자계급의 전위인 당과 인민들의 주체적인 노력 속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는 해결할 수 있는 과제만을 제시한다는 맑스의 또 다른 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스탈린 시대의 오류는 역사적으로 제한된, 지극히 극단적인 객관적인 조건 속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난 점도 있었고, 주체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주체의 오류로 인해 극심하게 나타난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1929년부터 시작된 농업 집단화와 강력한 공업화는 NEP의 거대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문제가 첨예하게 나타난 시점에서 시작되었다. 농업 집단화와 강력한 공업화는 스탈린 개인의 머리나 ‘스탈린 관료집단’의 머릿속에서 인위적으로 착상된 것이 아니었다.



러시아에서의 내전은 공업생산과 운송수단을 철저히 파괴했고 농촌에서도 파종면적을 대폭 축소시키고 옳친 데 덮친 격으로 심각한 가뭄까지 겹치면서 흑독한 기근이 일어났다. 1920년의 곡물수확은 1909-13년 평균의 54%

밖에 되지 않았다. 1921년의 수확량도 3760만 톤으로 전전(前戰) 시기 총수확량 평균의 43%에 머물렀고, 가뭄 피해지역의 수확은 훨씬 좋지 않았다. 그러나 서서히 NEP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농업생산이 늘어나게 되면서 1923년에 와서는 농업에서의 파종면적은 전전(前戰) 수준의 90% 수준을 회복하고 농촌에서의 식량부족도 일정 정도 해결되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농업의 회복과 성장에 비해 여전히 공업은 전전(前戰)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내전으로 인해 철저히 파괴되었던 공업기반시설이 아직 다 복구되지 못하고 원료와 운송수단의 부족에다가 숙련된 노동자의 부족, 경영능력의 미숙까지 겹쳐서 공업의 성장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농업생산의 증가는 농업생산물의 가격을 상대적으로 낮추게 한 반면 공업생산의 부진은 공업생산물의 가격을 폭등하게 했다. 1923년 10월 경에는 높은 공업생산품과 낮은 농업생산품의 상대적 격차의 심화를 말하는 ‘협상가격차’ 위기가 정점에 달했는데 공산품 가격은 1913년의 276%였고, 농산물 가격은 89%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부농은 물론이고 농민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곡물을 시장에 내놓으려 하지 않았다.¹⁾

1) 신경제정책이 정점에 달했던 이 시기의 협상가격차 위기에 대해서는 알렉 노브의 <쏘련 경제사>(창작과 비평)를 참고하였다.

이로 인해 도시의 노동자들은 식량위기를 겪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신경제정책으로 인한 자유로운 거래의 확대로 인해 네프맨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부르주아 계급이 형성되고, 부농 역시 강화되면서 이들이 식량을 독점하고 투기를 일삼는 등 도시에 원활하게 식량공급을 하지 않았다. 이로써 공업용 곡물이 공급되지 않아 공업이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주의 경제의 근간이 되는 공업이 발전하지 않는 한 수출, 자재, 내수를 공급하지 못하고 농촌에 공업소비품과 트랙터와 기계 등 생산수단과 비료 등의 원료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업발전과 농촌에서의 집산화가 필연적으로 요구되었다. 또한 공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한 농업에서의 농산물을 도시로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의 식량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셰비키당 내에서는 1925년부터 집산화와 강력한 중공업육성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날카롭게 일어나고 있었다. 프레오 브라젠스키를 중심으로 하는 트로츠키주의 세력들은 이 논쟁에서 당시 당내 좌파로 분류되는데 농업에서의 사회주의적 원시적 축적을 바탕으로 해서 중공업을 강력하게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우익으로 분류되는 부하린 일파는 NEP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공업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심지어 “부자가 되라”고 하면서 농촌의 지속적인 물질적 발전이 사회주의 공업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하린의 주장은 농촌에서의 부농과 새로운 자본가들의 대두로 심각해지고 있는 계급모순을 간과한 주장이었다. 부하린은 중공업기술을 서방에서 무역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주장은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이 쏘련을 고립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성이 없고 성사 된다고 하더라도 쏘련이 서구 자본주의에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정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스탈린은 이 논쟁에서 처음에는 좌파의 입장이 노농동맹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다가 이후에는 강력한 공업화와 농업 집산화를 주장하는 좌파의 입장을 수용했다. 이에 대해 스탈린이 처음에는 좌익 반대

파의 입장을 비판하다가 나중에는 “좌익 반대파의 옷을 훔쳤다”고 비판하는 세력들도 있다. 실제 스탈린에 의해 취해진 28년 정책은 좌익 반대파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1928년 강력한 중공업 발전과 농업 집산화 정책이 마련되면서 프레오브라젠스키를 포함한 좌익 반대파들은 이때 스탈린 쪽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스탈린은 이에 대해 25년도에 강력한 공업화와 집산화가 추진됐다면 때 이른 모험주의 정책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한다. 영국의 맑스주의 경제학자인 모리스 돕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만약 1925년에 그것이 틀렸다면, 3년 후에도 역시 틀린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만약 1928년에 옳았다면 1925년에는 그 비난이 오류였다는 것이 이로써 증명되지 않았는가? 그러나 1928년 혹은 1929년에 실천 가능한 것이, 공업과 농업이 더 허약했던 이전 시기에도 필연적으로 실천 가능했다고는 볼 수 없다. 혹은 1928년 상황에서는 절박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 농촌과 곡물시장에 대한 부농의 영향이 더 작았던 시기에도 똑같이 요구된다는 식으로 결론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모리스 돕 저, 임희철 역, 《쏘련경제사》, 형성, 1989, pp. 238-239.)

NEP로 인해 나타난 경제적 문제에 대해 전면 부정하는 당내 세력들은 없었고, 다만 이러한 위기를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돌파하는가의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여 동안 당내에서 격렬한 논쟁과 준비를 거쳐서 강력한 중공업 발전과 농촌 집산화를 중심으로 하는 제1차 5개년 계획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이때부터 파시즘의 대두로 인해 애초에 계획되었던 소비재 산업의 투자계획이 삭감되고 그 만큼을 철도건설로 돌리고 군수산업에 집중하는 강력한 중공업 우선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제1차 5개년 계획에 대한 최종적인 계획은 1928년에 완료되고 29년부터 실제적인 정책으로 실시되었는데 1930년에 나찌당은 독일 제2당이 되었고, 1932년에는 제1당이 된 데 이어서 1933년에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하였다. 따라서 알렉 노브처

럼 독일 파시즘의 대두에 대해 당시는 미약한 우려에 불과했다고 말하는 것은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의도적 왜곡에 불과하다.

결국 강력한 중공업 발전 정책과 농업 집산화는 레닌 당시의 전시공산주의와 신경제정책처럼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추진되었다. 맑스가 생산수단 생산부문이라고 했던 제1부분 즉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공업을 우선 발전시키는 정책을 취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었다. 일부에서는 경공업 발전을 통해서 인민들의 물질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경공업에서의 생산물 생산 역시도 중공업의 발전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농촌 집산화는 공업에 필요한 공업용 곡물원료와 도시 노동자에게 식량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초였기 때문에 양자는 동시에 수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객관적 필요가 그 추진 방식을 합리화하는 것은 아니다.



스탈린은 농촌 집산화의 과정에서 농민과의 동맹이라는 레닌주의적 원칙에서 이탈했다. 물론 부농이 집단농장으로 자신의 곡물과 가축을 징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곡물을 감추고 가축을 집단도살하고, 집단농장에 대한 방화와 농촌에서 집산화를 추진하던 당 요원들에 대해 테러를 가했다는 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광범위한 중농조차도 집산화에 반발했던 것을 보았을 때 이러한 저항은 과도한 집산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실제 7주 만에 농민 인구의 절반이 집단농장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은 이 정책이 얼마나 단시간 내에 과도하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

집산화 이전에 스탈린 스스로도 빈농과의 강력한 동맹을 축으로 해서 중농과의 협조, 부농과의 투쟁이라는 노농동맹의 정신과 강압이 아닌 설득과 모범의 창출로 집산화를 해야 한다는 레닌주의적 원칙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집산화 초기의 문제점이 극단적으로 나타나자 스탈린은 “성공에 취하여”라는 글을 발표하여 집산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스탈린이 정점에 서서 집산화를 계획하고 독려했기 때문에 집산화에서 나타난 극단적인 문제점에서 스탈린이 자유로울 수는 없다. 실제 스탈린이 집산화의 문제점을 내부 비판한 이후에 집산화에 대한 일정 정도의 자율성이 이뤄지자 집단화된 농민의 비율이 3달 만에 55%에서 23%로 떨어졌다는 것은 집산화에 강제가 동원됐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농촌에서의 집산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사회주의 농촌에서의 계급투쟁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부농은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 생사를 걸고 반동적인 저항을 했던 것이고, 빈농들은 계급투쟁이 가져온 열정과 열광이 지나쳐서 당이 공식적으로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농의 재산을 빼앗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계급으로서의 부농은 소멸했다. 이 농촌 집산화 과정에서 부농은 추방당하고 기근까지 겪으면서 수백만이 죽었다는 통계가 있다. 물론 이 통계는 콘퀘스트 등 반동 우익 역사가에 의해 왜곡되고 과장된 수치기는 하지만 과도한 집산화의 방식이 재앙적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알렉 노브처럼 당시의 계급투쟁을 자유주의적 휴머니즘적 관점으로 묘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반면에 모리스 돕처럼 당시의 오류를 위대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불가피한 산고의 과정 정도로 인식하는 것도 동의하지 못한다.²⁾

2) 알렉 노브와 모리스 돕은 각각 《쏘련경제사》라는 같은 제목의 책을 썼는데 쏘련사회를 바라보는 당파적 입장은 정반대의 관점에서 있다. 알렉 노브는 쏘련사회에 대해 비판적이고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주장하는데 비해, 모리스 돕은 맑스주의적 관점에서 계획경제를 철저하게 옹호하고 있다.

“꿀호츠에 함유함으로써 자신의 운명을 피하고자 할 꿀라끄는 ‘자본주의의 앞잡이가 아니라 겁에 질린 자포자기한 사람들에 불과하였다... (뒤늦게 1936년에 우크라이나를 찾은

이 집산화와 강력한 중공업 우선 발전 정책으로 인해 러시아는 사회주의 건설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중공업 우선 정책으로 인해 소비재산업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축소되기는 했으나 이 부분의 총생산량은 87%나 증가했다. 노동자계급이 임금 외에 사회기금으로부터 무상으로 보장받는 각종의 소비기금까지 합쳐, 쏘련 노동자 인민들의 물질적 생활수준은 훨씬 더 높아졌다. 쏘련 인민들은 물론 당시의 생산력 발전 수준의 한계로 인한 질적 한계는 있었지만 무상교육, 무상주택, 무상의료 혜택을 받게 되었고, 기업에 부설된 판매장과 식당의 현저한 증가로 인해 노동자의 생활수준이 크게 높아졌다. 여기에 자본주의 어느 국가보다도 짧은 노동시간과 각종 요양소, 휴양소, 연금 등 거대한 사회주의의 물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에 대한 집중적인 기술교육 등으로 노동자계급 출신이 기술자, 생산관리자, 경영자가 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 사회주의의 강력한 중공업 발전은 십여 년 뒤인 1941년 독일 파시즘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산업적 기반을 다지게 하였다. 또한 이 산업적 기반 위에서 국영농장과 집단농장에 트랙터, 콤파인 등 생산수단을 광범위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흐루시초프 당시 성장률이 대폭 낮아지고, 브레즈네프 시절에는 성장률이 정체상태를 겪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시기의 비약적인 성장이 쏘련 사회주의 인민이 누리게 되는 복지정책의 근간을 마련하도록 했다. 쏘련의 비약적인 성장과 실업의 해소,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은 비슷한 시기에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미증유의 세계 대공황으로 노동자계급이 죽음과 같은 고통

한 동료는 어떤 마을에서 아이들 두 명이 명백히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나에게 말하였다. 그는 그 사정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꿀라끄 아이들이쥬’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기묘한 계급투쟁으로 차라리 일방적인 것이었다.” (알렉 노브 저, 김남선 역, 《쏘련경제사》, 창작과 비평사, pp. 251-252.)

“탄생을 위한 고통은 실로 가혹했고 그 산고는 더없이 거칠고 잔인했다. 그러나 이 수 개월간의 격동이 20세기 유럽과 아시아의 경제사에서 하나의 전환점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모리스 돕 저, 임희철 역, 《쏘련경제사》, 형성, 1989, p. 262.)

을 당하고 있는 시점이기에 더욱 빛이 났다.

그러나 이 집산화 과정에서 중농 일부에게까지 가해진 강압행위와 기근 등으로 인해 막대한 인명손실이 발생하고 이즈음 당 내부에 가해진 숙청은 일부 그것이 당내의 제국주의자와 반혁명 분자들의 테러행위 등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비롯됐지만 무고한 당원들의 목숨을 빼앗기도 하면서 당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왜곡했다. 공업화와 집산화 과정은 그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희생이 반드시 불가피한 것은 아니었다. 더욱이 과장과 왜곡이 더해지기는 했지만 이러한 스탈린 시대의 과오가 두고두고 제국주의자들에게 반공주의 선전의 소재를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흐루시초프를 비롯해서 쏘련 내 수정주의자들에 의한 분산화 된 계획과 시장 요소의 과도한 도입 등 수정주의 정책의 빌미가 됐다.

넷째, 스탈린은 레닌 사후 수십 년 동안 쏘련 사회주의의 실질적인 건설자였다. 레닌 생전의 전시공산주의와 NEP(신경제정책)의 시기를 지나서 계획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쏘련 사회의 생산의 실질적인 조직 체계를 비롯한 법적관계 등 상부구조가 스탈린 시대에 그 주춧돌을 놓았기 때문에 쏘련 사회의 문제를 논할 때 스탈린주의라고 말하고 쏘련에 대한 비판이 ‘스탈린주의 비판’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고 있다.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개인숭배’ 비판을 중심으로 한 수정주의적 흐름은, 이른바 ‘스탈린주의’ 비판을 중심으로 해서 이뤄졌다. 흐루시초프의 스탈린주의 비판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가는 과정을 ‘평화로운 이행’이라고 하고, 평화공존론은 ‘제국주의와의 협조’ 정책으로 변질됐다. 국가의 문제에 있어서도 흐루시초프는 1961년 10월 제22차 당대회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전 인민의 국가’라고 선언하였다. 도시와 농촌의 대립,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이 남아 있고,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서 여전히 생산력 발전이 뒤떨어지는 사회주의 내부 모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회주의의 최종적 승리’를 선언하는

것은 극단적인 주관주의이고 조급한 것이다. 또한 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주의 내부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한다. 게다가 여전히 제국주의 국가의 쏘련 파괴공작과 고립말살 시도가 강력하게 펼쳐지고 있고, 쏘련 내부에서 사회주의 생산을 약화시키기 위한 저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노동자계급의 지도성을 폐기하는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여기서 더 나아가 ‘신사고’라는 이름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찬양하고, 이른바 부르주아 국가 내에서의 복지정책과 국가의 개입에 대해 사회주의 계획을 ‘수렴’할 수 있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맑스주의 국가론을 전면 부정하는 고르바초프 시대의 ‘신사고’는 계급투쟁과 계급모순을 철저히 해체시키고 계급협조를 추구했다.

전 지구적인 대결의 상황 하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모순은 분명히 주요한 모순의 지위로 격상되었습니다. 이 모순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첫째의 이 모순은 피하기 어려운 것이며 필연적으로 격렬한 대립의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고는 올바른가? (E. 프리마코프 외, “마르크스-레닌주의는 현실에 대한 창조적 인식을 요구한다”, 《사회주의 대개혁의 논리》, 풀빛, p. 301.)

고르바초프 시대의 ‘신사고’는 맑스-레닌주의 계급성과 과학성의 철저한 해체이며 부르주아 국가와 자본가 계급과의 화해사상이다. 흐루시초프의 ‘전 인민의 국가’ 사상은 고르바초프 시대에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적 이해와 전 인류의 이해를 대립시켜서 계급성을 해체하고 부르주아 휴머니즘을 주장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갔다.³⁾

3) 계급투쟁 보다 ‘전 인류적 가치의 추구’를 우선시하는 쏘련 공산당의 수정주의 노선에 대해 당시 공산주의 진영 내에서 우려를 표시하면서 비판적 입장들이 다수 제출되기도 했다. 1988년 3월 ‘세계 맑시스트 비평’(WMP)의 당경험교환위원회는 쏘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산하 사회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대제를 중심으로 각국 공산당 지도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진행했다. 이 토론에서는 쏘련 공산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공산당도 있었고, 반면에

맑스·엔겔스는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국가란 지배계급의 개인들이 그들의 공동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형태”라고 하였는데 프롤레타리아 독재 시대에 있어서도 여전히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적 이해를 중심에 세워야 한다. 다만 프롤레타리아 독재 시대의 국가는 한 줌도 안 되는 독점자본이 지배하는 부르주아 국가와 달리 대중국가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노동자계급의 이해가 전체 사회의 이해이며, 개인의 자유와 전체 사회의 자유가 대립되지 않는다. 맑스주의를 배반하는 계급협조사상은 마침내 정치적 다원주의라는 명목 아래 부르주아 정당을 포함하는 다당제의 도입에서 자본주의 시장전면 공개, 사유화까지 나가면서 사회주의의 붕괴를 촉진시켰다. 자본주의 독재자 엘친의 등장과 쓰련의 최종적 해체는 이미 내적으로 붕괴된 사회주의의 마지막 형식마저도 내던져버리고 공개적이고 노골적인 형태로 자본주의의 복귀를 선언하는 형식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스탈린 시대의 문제를 변증법적으로 지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신랄하게 비판하는 공산당들도 있었다.(현대세계와 공산주의 - 세계 공산당 지도자들과의 대화, 「사회주의 대개혁의 논리」)

“나는 넓은 의미에서 ‘문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 인종주의자들이 우리 인민에 대한 식민지적 억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데올로기와 현실 정책, 조직구조에서 공산주의자와 여타 세력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에슈 파하드, 남아프리카 공산당)

“인간의 보편적 가치의 우위성을 다루는 주제를 제기했다는 사실은 계급투쟁을 여러 세력들에 의해 지탱되는 합치된 입장의 수렴이 혁명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보다 우위성을 가지는 추상적 휴머니즘의 차원으로 옮겨놓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자이메 바리오스, 엘살바도르 공산당)

“나는 평화유지가 우리들에게 특히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나는 유향 정책이나 이런저런 나라 혹은 지역에서 계급투쟁을 완화함으로써 평화 보장될 수 있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나는 평화수호가 우리가 우리 조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반적인 계급투쟁 내에 통합된 한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도날드 라모타, 가이아나 인민진보당)

“쓰련은 평화를 유지하고 군비감축을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나는 쓰련공산당이 추구하는 이념, 예를 들면 민족해방전선이 보편적 평화와 군축을 위해 자신들의 무기를 버리거나 칠레 공산주의자들이 피노체트 체제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견해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헥토르 무지카, 베네수엘라 공산당)

전면 부정하는 수정주의가 사회주의를 붕괴로 몰아갔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탈린 이후 흐루시초프 때부터 고르바초프가 ‘스탈린주의’ 비판이라는 이름으로 이에 대해 적대적이었고, 스탈린시대와 다른 수정주의 정책을 취했는데 쓰련 사회 전체시기를 통틀어 ‘스탈린주의’라고 과연 부를 수 있는지 다시 평가해 봐야 한다.

다섯째, ‘스탈린주의 관료주의’가 쓰련 사회 몰락의 원인이라는 관점의 문제다. 이러한 관점은 쓰련을 붕괴로 몰아간 경제적 토대에 대한 분석이 빠져 있고, 관료주의에 대한 본질적인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물론 관료주의의 문제는 사회주의 경제를 조직하는데 있어 막대한 해악을 끼치지만 관료주의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을 번성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관료주의는 사회주의에서도 금방 사라질 수 없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이 상부구조에 반영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리는 자본주의경제의 분업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맑스·엔겔스는 “물질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의 최대의 분업은 도시와 농촌 간의 분리”(맑스·엔겔스, 《독일 이데올로기》)라고 했다. 사회주의에서도 관료주의는 끈질기게 살아남을 수 있는데 사회주의 생산



조직화에 있어서도 착취자적 성격은 없어지지만 경제의 관리가 필요한데 이것이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리를 낳도록 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주의는 계획경제를 의식적으로 조직하기 때문에 대중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구상과 실행의 분리가 고착화되면서 관료주의가 번성할 수 있다. 맑스와 엔겔스는 자본주의 노동분업의 흔적이 남아 있는 사회주의를 지양하고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고 사회가 전반적인 생산을

조절하는 높은 수준의 공산주의를 이렇게 묘사하였다.

아무도 배타적인 영역을 갖지 않고 각자가 그가 원하는 어떤 분야에서나 스스로를 도야시킬 수 있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사회가 전반적인 생산을 조절하기 때문에, 사냥꾼, 어부, 양치기, 혹은 비판가가 되지 않고서도 내가 마음먹은 대로 오늘은 이것을, 내일은 저것을, 곧 아침에는 사냥을, 오후에는 낚시를, 저녁에는 목축을, 밤에는 비판을 할 수 있게 된다. (K. 맑스·F. 엥겔스, 《독일 이데올로기》, 두레, pp. 74-75.)

레닌은 《국가와 혁명》에서 대중들이 구상과 실행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말한바 있는데 막상 혁명 이후에 노동자계급 출신의 기술자, 전문가들이 없어서 자본가들한테 양보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로부터 나오는 관료주의를 지극히 경계했다. 따라서 이러한 관료주의와의 투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계급의식의 무장을 위한 계급의식 고양과 문화혁명이 필수적으로 전개되어야 하고 관료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대중들이 국가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술적, 정치적, 문화적 훈련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관료주의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개인숭배’로만 현상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관료주의에 대한 투쟁을 약화시킬 뿐이다.

수정주의의 문제

우리는 흐루시초프의 수정주의적 흐름을 시작으로 해서 결국 고르바초프 때 가장 극대화된 형태로 나타난 수정주의, 개량주의가 장기간에 걸친 쏘련 사회주의 붕괴의 내적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공세는 쏘련의 사회주의 건설을 어렵게 하는 외부적 요인이었고 이러한 내적 원인을 더 심화시켰다. 이러한 쏘

련의 자본주의 복귀 과정은 중국에서 모택동 사후 4인방과의 투쟁을 거쳐 중국 사회주의의 지도자가 되었던 유소기나 등소평을 시작으로 해서 수십 년 동안 개혁개방 정책을 추구한 중국 사회주의가 마침내 자본주의로 변모했던 과정과 유사하다. 그러나 마오주의 공산당 진영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러한 수정주의 경향이 단지 수정주의자들의 계획된 쿠데타나 자본주의 복귀를 위한 반혁명 음모에 의해서 나타났다는 주관주의적 분석에는 동의하지 못한다. 이들은 수정주의에 대한 주목할 만한 분석⁴⁾이 있지만 대단히 주관주의적 경향이 있다.

흐루시초프 집권 이후부터 수정주의적 경향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이때부터 쏘련사회를 독점자본주의, 사회제국주의로 보는 이들의 관점에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이들은 국가자본주의와 동일한 오류에 빠졌다. 이들은 스탈린집권 시절에 관료주의와 투쟁을 했지만 위로부터의 투쟁을 하였고, 스탈린 사후 쏘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이었던 말렌코프 같은 이는 관료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이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봤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들은 모택동의 문화대혁명이 관료주의와 자본주의자들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가장 원칙적으로 올바른 투쟁을 했다고 주장한다. 모택동 당시의 문화대혁명은 흐루시초프의 평화공존론 같은 계급협조주의와 수정주의, 중국 내부의 유소기나 등소평 같은 수정주의와 관료주의를 아래로부터 척결하기 위해 진행됐다. 하지만 그것의 지나침과 주관주의적 오류, 경제적 혼란의 야기 등은 수정주의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택동 사후 수정주의자들이 그 정책을 추진하는 강력한 빌미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원칙적으로 올바른 투쟁을 했던 중국에서 모택동 사

4) “쏘련에서의 자본주의의 부활”은 맑스-레닌주의 독일공산당(MLPD)의 《혁명의 길》(《혁명의 길》은 출판사 ‘새로운 길’이 시리즈로 1권부터 계속 출판한 책이다)에 발표된 글로 1971년부터 1988년까지의 쏘련사회에 대해 분석하였다. 쏘련사회의 붕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이 글은 독일어판 번역본으로 국내에 소개하기 위해 번역됐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출판되지 않았다. 필자 개인적으로 독일어판 번역본을 입수했지만 공식적인 번역 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인용할 수 없고, 번역자를 밝힐 수 없는 상황이다.

후 등소평과 유소기를 중심으로 하는 수정주의 세력들이 개혁개방이라는 이름으로 수정주의의 길을 걷다가 오늘날에 와서는 이 흐름이 극단화되어 중국을 자본주의로 이르게 한 원인을 어떻게 해명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수정주의의 흐름은 이들의 사상적 경향의 문제도 있지만 스탈린이나 모택동 시기의 오류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이들 수정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분적 오류, 불가피한 오류, 실제적 오류나 시행착오를 해결하는 것을 맑스-레닌주의의 원칙에 서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극단적인 수정주의의 방향으로 치닫게 되었던 것이다. 사회주의에서 수정주의의 문제는 음모와 쿠데타의 문제가 아니다. 맑스와 엥겔스, 레닌은 공히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소부르주아적 상품생산과 교환의 문제가 사회주의 수정주의의 물질적 토대가 된다고 보았다. 낮은 수준의 공산주의 즉 사회주의에 있어서는 이 수정주의의 경제적 토대는 단 한 번의 공격만으로, 법령과 명령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강제적인 방식은 종교를 단박에 없애려면 할수록 종교가 끈질기게 저항하고 변성하는 것처럼 수정주의를 도리어 강화한다.

이 수정주의의 경제적 뿌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집요한 폭로와 사회주의 사상 교육, 성실한 설득과 모범의 창출을 통한 사회주의 원리의 생활화, 경제적으로 우월한 사회주의의 집단적 생산의 조직화가 절실하다. 따라서 우리는 수정주의의 문제를 분석함에 있어서 사회주의 경제, 즉 사회주의 생산과 분배의 조직원리, 작동방식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해야 한다.

맑스는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이룬 물질적 발전을 활용해서 현실을 바꿔 나가는 진보적 운동이라고 규정하면서 원론적인 수준에서 사회주의 상을 언급했다. 쏘련 노동자계급과 인민들은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가 아니라 봉건제의 후진적 잔재가 경제, 문화, 관습 모든 곳에 뿌리 내린 러시아 자본주의에서, 내전과 제국주의의 공세 속에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했다. 하지만 우리에게 70년 이상 존재했던 사회주의의 구체적 현실이 주어져 있다. 이 현실은 지나간 과거로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의 오류나 시행착오를 넘어설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한다.

쏘련 사회주의가 아무도 간 적이 없는 눈길을 걷는 것처럼 전인미답의 길을 걸어가면서 거대한 성과와 더불어 오류와 한계,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집단적 역사 경험이 있다. 더군다나 후진적인 러시아에서 사회주의를 일궈야 했던 과정에서 고통 받아야 했던 사회주의자들의 노고를 벗어던질 수 있을 만큼 자본주의가 일궈 놓은 거대한 물질적 성과가 있다. 관료주의가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전문가들에게 양보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지적, 기술적으로 뛰어난 노동자 계급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인 조건이 사회주의 건설을 무조건적으로 수월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발전한 국가독점자본주의인 한국사회에서 혁명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세계혁명이 진척되지 않으면 상당 기간 제국주의의 침공과 고립화, 압박이 존재할 것이며, 반혁명적인 반동 집단의 단발마적인 발악으로 인해 유혈적인 내전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혁명 이전은 물론이고 혁명 이후에 과거의 오류나 한계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적 역량을 쌓아야 한다. 이른바 새로운 사회의 지도계급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생산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준비된’ 계급이 되어야 한다.

96, 97년 노동법 개정 총파업 투쟁에서 현대자동차 노조의 정갑득 위원장은 “생산도 투쟁이다”라고 했는데 투쟁을 회피하고 파업을 파괴하기 위한 기회주의 논리와 역사적, 상황적 논리가 다르지만 우리 역시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생산을 조직화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을 충분히 키워야 한다. 레닌은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후에 “혁명을 성공시키는 것은 새털을 드는 것만큼 쉬웠다”라면서 혁명

의 성공 보다 혁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이 된다고 했다.

레닌은 “소비에트 정부의 즉각적 임무에서” 사회주의 생산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는 “단호함만이 아니라 회계와 적절한 분배의 능력까지도 요구하는 행정의 조직화가 정치경제적 임무의 중심”이라고 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혁명적 파괴자의 열정뿐만 아니라 혁명 이후에는 사회주의의 능력 있는 건설자, 합리적인 경제의 조직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주의 혁명의 역사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생산과 분배 과정에서의 계획의 원리나 당시 발전수준에서의 시장의 활용, 노동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경제적 자극, 성과분배의 문제 등에 정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쏘련의 몰락 이후에 한국의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생산과 분배의 조직화 문제에 별다른 관심을 쏟지 않았다.

사회주의에 있어서 근본적인 경제법칙의 문제, 이 법칙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문제, 사회주의 계획은 어떻게 이뤄졌고, 계획과정에서 부딪치는 난관들, 계획을 중심에 세우되 상품-시장 관계를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또 사회주의 계획과 상품-화폐관계의 문제는 사회주의 강화와 붕괴의 문제를 규명하는데 핵심적인 문제라는 점을 철저히 간과했다. 따라서 사회주의 경제의 조직화에 있어서 계획과 시장의 문제(정확히 말하면 사회주의 시장과 상품, 가치법칙의 문제는 자본주의와 달랐기 때문에 상품-화폐관계라고 하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일 것이다)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해야 한다.

과거의 유산이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역사적, 집단적 경험, 인류의 지성과 지혜, 오류와 시행착오의 거대한 역사적 성과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더 멀리, 더 깊이 역사발전을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은 쏘련 사회의 경제적 조직화의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하지만 아직 살아서 투쟁하는 북한과 쿠바의 살아 있는 경험, 유

고와 중국의 시장사회주의의 구체적 사례, 21세기 사회주의라는 남미 볼리비아 혁명의 경험과 사례 등의 연구를 통해 훨씬 더 풍부해져야 할 것이다. 이 글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사회주의 경험에 대한 지극히 일부의 규명에 그칠 것이다. 이 글은 그 규명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방법론과 원칙에 대한 제시에 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맑스-레닌주의 원칙과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더욱 장기적이고 집단적인 총체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쏘련 사회주의에서의 시장, 가치법칙의 문제

맑스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생산물을 상품으로서 생산한다. 상품을 생산한다는 사실이 이 생산양식을 다른 생산양식으로부터 구별하는 점은 아니지만, 그 생산물의 지배적이고 규정적인 성격이 상품이라는 것은 이 생산양식을 다른 생산양식으로부터 구별하는 점이다”⁵⁾라고 했다. 이처럼 자본주의는 상품생산이 지배적인 사회다. 심지어 노동자의 노동력조차도 자본주의에서는 상품이다. 물론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에서도 상품시장이 존재했다. 하지만 그 수준과 범위는 미약했다. 자본주의 이전 생산의 대부분은 타인에게 판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산자가 직접 생산물을 소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것의 극히 일부만이 판매됐다.

자본주의 사회의 상품은 이와 달리 대부분의 생산물이 자신이 소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이러한 상품교환 과정에서 자본가들은 이윤을 실현한다. 그런데 이윤이 실현되는 것은 상품시장에서 생산물이 판매된 이후지만 이윤이 만들어지는 것은 자본가가 노동자를 고용해서 생산과정에서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을 통해서이다.

자본이 생산을 하는 것은 바로 이윤을 위해서다. 자본은 이윤이 되

5) K. 맑스 저, 김수행 역, 《자본론》 3권, 비봉출판사, p. 1067.

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인류에게 절박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생산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를 만들어가는 근본 법칙은 이윤추구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윤추구가 근본법칙이고 본질이라면 시장은 그것의 현상이고 이윤실현의 기구이자 통로이다. 자본주의 상품은 개별 자본가의 이윤추구 욕구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전 사회적으로 사전에 계획된 생산이 아니라 무계획적이고 무정부적으로 이루어진다.

각자는 자신이 우연히 가지고 있는 생산 수단을 갖고서, 자신의 특수한 개인적 교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위해 생산한다. 어느 누구도 자기 것과 동일한 품목의 상품이 얼마나 시장에 나올지, 도대체 그 가운데 얼마나 사용될지를 알지 못하며, 어느 누구도 자신의 개별 생산물이 실제적 수요를 발견할지, 그 비용을 회수할지, 또는 도대체 판매될 수 있을지를 알지 못한다. 사회적 생산의 무정부 상태가 지배한다. 그러나 다른 모든 생산 형태와 마찬가지로, 상품 생산은 특유한, 내재적인, 자기 자신과 떼어놓을 수 없는 법칙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법칙들은 무정부 상태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무정부 상태 속에서, 이 무정부 상태를 통하여 자신을 관철해 나간다. (F. 엥겔스, 《유평피아에서 과학으로의 사회주의의 발전》,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이하 《저작선집》) 5권, 박종철출판사, p. 460.)

그런데 이러한 자본주의의 무정부적 생산은 개별 공장 내에서의 계획적인 생산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회 내에서 무정부적 생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윤추구 욕구에 의해 추동되는 무정부적 생산과 경쟁으로 인해 자본주의에서는 과잉생산 공황이 발생하는데 이 공황은 빈곤으로 인해 노동자가 충분히 소비할 만큼의 구매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더 극심해진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이 공황을 통해 전체 사회의 격렬한 혼란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과잉자본을 해소하고 공황에서 몰락하지 않은 경쟁력 있는 자본은 더욱 더 시장에 대한 지

배력을 강화해 나간다. 자본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인 소유를 통해 노동자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배자가 된다. 생산은 사회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그것의 결실을 독차지하는 것은 자본이다.

엥겔스의 말대로 자본주의는 무정부 상태에도 불구하고 무정부성을 통해서 자신의 경제법칙을 관철해 가는데 이것이 자본주의의 가치법칙이다. 생산이 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사적생산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생산물의 자유로운 교환이 이뤄지는 시장과 교환이 존재하는 한 가치법칙은 작동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무정부적 생산과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상품교환이 이뤄지는 자본주의와 달리 사회주의에서의 가치법칙은 존재하는가?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 노동자계급이 생산수단을 장악하여 전체 사회를 위한 계획적이고 균형적인 생산과 분배를 조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맑스는 사회주의가 발전하여 높은 수준의 공산주의가 달성되면 상품생산은 사라지고 이에 따라 가치법칙 역시 소멸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엥겔스 역시 높은 수준의 공산주의에서는 상품생산이 제거되고 생산자에 대한 생산물의 지배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철폐되고 사회적 생산을 조직하는 사회에서 상품생산과 가치법칙은 사라지는가? 과연 자본주의에서의 가치법칙과 다르게 공산주의에서 가치규정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맑스는 “고타강령초안 비판”에서도 가치규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생산수단을 공유 재산으로 하는 것에 기초를 둔 조합적 사회 내부에서는 생산자들이 자신의 생산물을 교환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생산물에 사용된 노동이 이 생산물의 가치로, 즉 생산물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물질 특성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와는 반대로 개인적 노동이 더 이상 우회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총노동의 구성 부분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기초 위에서 발전한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라 거꾸로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겨난 공산주의 사회이며, 그러므로 그 모태인 낡은 사회의 모반이 모든 면에서, 즉 경제적, 윤리적, 정신적으로 아직도 들러붙어 있는 공산주의 사회이다 ... 상품교환이 같은 가치물의 교환인 한, 여기서는 분명히 상품 교환을 규제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가 지배한다. 내용과 형식은 변하는데, 그 이유는 변한 사정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노동 이외에는 어떤 것도 줄 수 없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적 소비 수단 이외에는 어떤 것도 개별적인 소유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별 생산자들 사이의 소비수단의 분배에 관해 말하자면, 상품 등가물의 교환에서와 동일한 원리가 지배하여, 어떤 형태의 동일한 만큼의 노동은 다른 형태의 동일한 만큼의 노동과 교환된다. (K. 맑스, “고타강령초안 비판”, 《저작선집》 4권, 박종철출판사, pp. 375-376.)

맑스는 자본주의의 생산과 분배의 흔적이 남아 있는 낮은 수준의 공산주의, 즉 사회주의에서는 자본주의의 사적 노동의 생산물 교환과 다르지만 가치규정은 존재한다고 하고 있다. 심지어 사회적 생산이 유지되는 한, 몇 가지 점에서 가치규정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철폐된 뒤에도 사회적 생산이 유지되는 한, 가치규정은 다음과 같은 의미— 즉 노동시간의 규제, 각종 생산분야로의 사회적 노동의 분배, 그리고 이것에 관한 부기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된다는 의미 —에서 여전히 지배적이다. (K. 맑스 저, 김수행 역, 《자본론》 3권, 비봉출판사, p. 1035.)

그렇다면 쏘련에서 가치법칙은 존재했는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자본주의의 경제법칙과 어떻게 다른가? 쏘련에서도 사회주의 사회 고유의 법칙은 존재하는가?

계획과 시장의 문제는 사회주의 경제의 조직화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 때문에 가장 치열하게 토론된 부분이다. 스탈린은 계획이 중심이

되는 사회주의에서도 다른 어느 사회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경제법칙은 존재한다고 했다.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의 본질적 특징과 요구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식화할 수 있을 것이다: 높은 기술의 토대 위에서 사회주의적 생산을 부단히 성장시키고 개선함으로써 전체 사회의 부단히 성장하는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최대한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는 것, 호경기에서 공황으로 또 공황에서 호경기로, 이렇게 중단되면서 생산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이 부단히 성장하는 것, 사회의 생산력의 파괴를 동반하면서 기술 발전이 주기적으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기술적 토대 위에서 생산을 부단히 개선하는 것이 곧 그것이다. (J. 스탈린,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경제의 제문제》)

맑스와 마찬가지로 스탈린 역시 사회주의에서도 자본주의의 가치법칙이 존재한다고 했다.

상품과 상품 생산이 있는 곳에는 가치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 가치 법칙의 작용 범위는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상품 유통 즉 매매를 통한 상품 교환, 주로 개인 소비 상품 교환에 미치고 있다. 물론 이 분야에서는 가치 법칙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조절자의 역할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가치 법칙의 작용은 상품 유통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 작용은 생산에도 미친다. 물론 우리 사회주의적 생산에서는 가치 법칙이 조절적 의의는 가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은 역시 생산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생산을 지도함에 있어서 그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그렇다고 하여 이 모든 것은 가치 법칙의 작용 범위가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주의 하에서와 같다거나 가치 법칙이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의 조절자로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에 있어서 가치 법칙의 작용 범위는 우리 경제 제도 하에서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국한되어 있다. (스탈

린, 같은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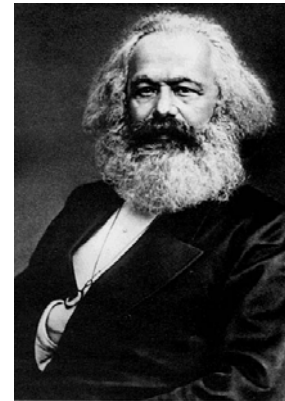
이처럼 사회주의에서도 가치법칙(엄밀하게 말하면 법칙이라는 말 자체에 한 사회를 지배하는 규정적인 힘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할 것이다)은 존재한다. 하지만 가치법칙이 존재하지만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과 가치법칙이 한 사회를 지배하는 조절자의 역할을 하는 경제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다. ‘스탈린주의 비판’이 아무런 과학적, 역사적인 판단 없이 횡횡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학문적, 운동적 풍토이므로 맑스의 주장을 다시 한 번 검토함으로써 이 문제를 논의해보자!

자본주의에서의 가치법칙은 사회주의와 달리 무정부적인 생산이 지배적이므로 사전에 생산과 분배의 계획에 의해서 생산이 이뤄지지 않는다. 가치법칙은 가장 먼저 자본주의 상품의 생산과 교환, 노동력 분배를 규제하는 조절자의 역할을 한다. 자본주의 상품은 그 상품을 생산하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동일한 노동시간이 들어간 상품과 상품이 서로 교환된다. 그런데 실제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상품의 가치와 시장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수요보다 상품이 너무 많이 생산되면 그 상품의 시장가격은 가치에 근접하거나 내려가면서 생산은 축소되고, 일부 자본가들은 다른 생산 부분으로 이전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생산수단과 노동력 사용이 줄어들게 되면 다시 상품생산이 줄어들게 되어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게 된다.

반대로 상품이 적게 생산된 생산부문에서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치 보다 시장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생산이 확대되고 생산수단과 노동력에 대한 사용이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생산물의 가격은 외형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되는데 시장가격이 가치를 중심으로 위 아래로 변동하기 때문에 그 가격을 배후에서 결정하는 중심축이 바로 가치이다. 이 가치가 배후에서 생산과 분배를 규제하고

생산의 조절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치법칙이라고 하는 것이다.

가치법칙은 또한 자본주의 생산력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한 생산부문에서 신기계 도입과 기술개량과 혁신으로 한 상품을 생산하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량이 더 적게 들어가게 되면 가치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시장에서 상품의 가치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 자본가는 더 적은 가치가 들어간 생산물을 같은 사회적 가치로 판매하기 때문에 특별잉여가치를 얻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치법칙은 단순상품 생산자를 분해하여 자본가와 임노동자로 분화시킨다. 더 월등한 생산수단과 생산방법을 채용한 자본가에 비해 그렇지 못한 단순상품 생산자는 상품을 만드는 데 더 많은 노동시간이 들어가므로 경쟁에서 견디지 못하고 노동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가치법칙이 지배하는 사회인 것이다. 맑스는 위에서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철폐된 후에도 가치규정이 지배적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자본주의 가치법칙처럼 전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맑스는 노동시간의 규제, 각종 생산분야로의 사회적 노동의 분배, 그리고 이것에 관한 부기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여전히 지배적이라고 했다. 이 말은 자본주의에서의 가치법칙의 전면적 적용과 다르게 가치규정이 제한적인 의미에서 작용한다는 말이다.

먼저 사회주의에서는 자본가계급에 의한 착취는 없지만 여전히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한 만큼 분배받는다. 다만 여기서도 노동의 대가를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생산확장을 위한 기금, 노인이나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한 기금, 결국은 노동자 자신에게 돌아갈 사회적 복지를 위한 기금 등을 제외하고 노동시간에 의해 사회에 공헌한 만큼 분

배 받는다. 이런 점에서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등가교환의 원리가 작용한다. 그러나 맑스는 그 내용과 형식이 자본주의와는 다르게 변한다고 했다. 그것은 자본주의에서는 타인의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고 다른 자본가로부터 생산수단과 소비수단을 공급받는다라는 측면에서는 사회적 노동이지만 사전적 계획 없이 개별적으로 행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수요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사적노동의 생산물이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 그 유용성이 증명될 때만 상품이 판매될 수 있다.

반면 사회주의에서의 노동은 직접적으로 사회적 노동으로 생산수단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면서 지난해의 생산과 수요를 바탕으로 하여 사전에 사회적 필요를 엄밀하게 예측하고 계산하여 생산한다.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사회적 노동을 재분배한다. 사회주의는 수십만 가지의 생산물 계획을 사전에 정확하게 계산하고, 균형적인 생산과 분배를 위하여 계산과 조정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 보다도 부기(簿記)가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사회적 노동의 배분과 부기는 사회적 노동이 유지되는 높은 수준의 공산주의 사회라 할지라도 여전히 필요한 것이다.

쏘련에서는 혁명 뒤에 주요 생산수단과 금융기관을 국유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상품교환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먼저 농민을 비롯한 광범위한 소생산자들과 소상인들의 교환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남아 있었다. 러시아에서 국가는 대외무역을 독점했는데 다른 나라와의 상품과의 교환이 존재하고 있었다. 신경제정책 당시에는 부농과 네프멘(신경영자)들에 의한 상품생산과 교환비중이 전시 공산주의 당시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러시아 농촌에서는 집단화 뒤 국영농장(소프호즈)과 협동조합 형태의 집단농장(콜호즈)이 남아 있었는데 국유화된 기업의 공업제품과 집단농장 생산물의 상품교환이 이뤄졌다. 그러나 공업제품 중 생산수단은 국가의 소유권이 변하지 않은 채로 집단농장에 임대되었기 때문에 상품이 아니었다. 그러나 흐루시초프 집권 시절인 1958년

기계 트랙터 공급소(MTS)를 폐지하고 집단농장이 기계를 몇 년에 걸쳐 구매하여 직접 생산수단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상품관계가 확장되게 되었다.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상품-화폐관계의 확대는 자본주의적 요소가 강화되고 쏘련 사회주의를 붕괴로 몰아가는 주요한 원인을 제공했다.

레닌의 신경제정책과 그것의 자본주의적 해석

자본주의적 생산의 조직화, 공장제 수공업을 거쳐서 대공업으로의 발전은 생산에 박차를 가하게 했고 자연스럽게 시장을 활성화 하였다. 봉건제 내부에서의 자본주의적 생산의 확대를 기초로 한 시장의 확대는 봉건주의를 무너뜨리고 자본주의로 발전하게 하는 경제적 원동력이었다. 과거 원시 공동체의 교환은 상품형태를 발전시켰고 이것이 원시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일정한 대상들에 국한되긴 하지만 사적소유는 이미 이 공동체 내부에서, 처음에는 외부인들과의 교환 속에서, 상품 형태로 발전한다. 공동체의 산물이 상품 형태를 취할수록, 다시 말해 그것들 가운데 생산자 자신의 사용을 위해 생산되는 것은 적어지고 교환이라는 목적을 위해 생산되는 것이 많아질수록, 공동체 내부에서도 교환이 본래의 자연 성장적 분업을 밀어낼수록, 개별 공동체 성원들의 재산 상태는 점점 더 불평등해지면, 낡은 토지 공동 소유는 점점 더 무너지며, 공동체는 점점 더 급속히 해체되어 분할지 농민들의 촌락으로 전화한다. (F. 엥겔스, 《오이겐 뒤링 씨의 과학 변혁》, 《저작선집》 5권, 박종철출판사, pp. 178-179.)

원시공동체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지만 공동체 내부에서 생긴 잉여 생산물을 먼저 외부 공동체의 잉여생산물과 교환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공동체 내부에서도 상품교환이 발전하면서 붕괴되기 시작했다. 안

데스 고원 지대의 공동체는 외부의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침투 속에서 상품교환 관계가 활성화 되면서 연합한 공동체가 분열하고 결국은 붕괴했다.

원시 공동체와 역사적 조건이 분명히 다르지만 사회주의의 붕괴 역시 상품-시장관계, 자본주의적 생산과 시장이 점차적으로 증대하다가 결국은 사회주의 생산과 분배를 완전히 포기하고 자본주의로 넘어 갔던 것이다. 실제 유고나 소련 사회주의에서의 자본주의적 경제관계의 지속적인 강화는 인민들 내부, 관료와 인민들 내부, 연방국가 간의 빈부격차를 확대시키고, 연방 공동체 내부의 가속화된 분열과 해체로 이어지면서 마침내 자본주의의 복귀를 낳았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과 토지소유권을 박탈당했다.

레닌 역시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이런 식의 자본주의 부활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였다.

자유로운 교환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거래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자본주의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자유로운 교환과 거래의 자유는 소소유자들 간의 상품유통을 의미한다. 최소한 맑스주의의 기본(elements)을 공부한 우리 모두는, 이 교환과 거래의 자유가 상품생산자를 자본의 소유자와 노동력의 소유자, 즉 자본가와 임노동자로 분화시킨다는 것, 즉 자본주의적 임금노예제를 부활시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걸쳐 정확히 농업적 상품경제로부터 생겨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 (V. I. 레닌, “러시아 공산당(불) 제10차 대회”, 1921년 3월 8-16일, 《민중민주주의 경제론1: 레닌의 노동자통제 및 국유화론》, 백승욱 편/해설, 새길.)

계획과 시장의 문제에서 시장과 가치법칙을 강조하는 것은 수정주의자들의 주요한 특징인데, 수정주의자들은 처음에는 계획을 중심에 두고 시장과 가치법칙의 부분적 활용을 주장하다가 점차적으로 시장에 대한 강조에서 나중에는 시장사회주의를 사회주의 경제 조직화에 있어

서 필연적인 과정으로 주장했고 결국에는 계획을 폐기하고 시장을 수용했다. 소련 사회주의의 계획의 포기과 시장자유화, 사유화가 사회주의 붕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스탈린 당시의 계획논쟁에서 우파들의 입장에서 출발하여 흐루시초프, 브레즈네프, 가장 극단적인 수정주의자인 고르바초프에 이르기까지, 중국에서 덩소평 같은 수정주의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레닌주의 원칙으로의 복귀를 주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신경제정책이다. 수정주의자들은 불가피한 후퇴, 우회로를 통한 사회주의의 강화를 위한 자본주의적 요소의 도입과 활용을 위한 일시적 정책이 마치 사회주의 경제발전의 보편적인 법칙인양 주장하고 있다.

덩소평의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 초급단계라고 중국사회를 규정하면서 이 단계는 1백여 년에 걸쳐 계속될 것이고 그 동안에 급속한 생산력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바로 덩소평의 유명한 ‘흑묘백묘론’이다. 쥐를 잡기 위해서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상관없다는 말이다. 즉 사회주의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사회주의에서는 인민의 복지를 높이고 높은 수준의 공산주의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생산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역시 생산관계가 생산력 발전과 부조화하게 되면 이것이 사회의 붕괴를 가져온다. 공산주의적 생산관계가 더 확립되면 될수록 사회주의는 높은 수준의 공산주의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레닌의 신경제정책은 잘 알다시피, 제국주의 개입과 제국주의의 후원을 받는 반동분자들과의 내전으로 인해 생산이 황폐화되고, 식량징발로 인한 농민의 불만고조와 이로 인한 크론슈타트 반란 등으로 농민과의 동맹이 위태롭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고안되었다. 신경제정책은 내전을 수행하기 위해 잉여식량을 징발했던 것을 현물세로 대체하고 남은 잉여곡물을 그 지역시장에서 자유로이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핵심이었다. 이것은 자유교환을 확대함으로써 자본

주의 발전에 대한 일정 정도의 용인이었다. 그러나 레닌에게 있어서 신경제정책은 불가피한 일시적 후퇴이지만 그것은 자본주의 복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진지를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레닌은 러일전쟁 때 일본의 ‘노기’장군의 예로써 신경제정책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당시 일본군은 여순항을 점령하기 위해 제1단계로 격렬한 강습의 단계를 거쳤으나 그것으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입으면서 병력의 손실을 입게 되었고 제2단계는 그보다 더 어렵고 완만한 포위공격을 했다. 그러나 격렬한 강습을 통해 거대한 희생을 당했지만 그것으로 인해 적의 저항력을 시험하고 아군의 실력을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전술마련의 계기가 되는 영웅적 행위이고 유일하게 가능한 전술이었다고 했다. 레닌에게 제1단계는 전시 공산주의를 의미하고, 제2단계는 신경제정책을 의미한다. 이렇게 레닌에게 신경제정책은 보다 더 어렵고 힘든 자본주의적 흐름에 대한 포위의 시기였다. 레닌은 신경제정책을 통해 자본주의적 요소를 활용하되 그와 동시에 사회주의 생산관계를 강화하여 그것을 포위하여 섬멸하려 했던 것이다. 신경제정책은 자본주의적 요소에 대한 일시적 후퇴이지만 동시에 장기적 공세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신경제정책을 전략적 후퇴의 측면에서만 보는 것은 기회주의적이고 수정주의적 노선인 것이다.

레닌은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프롤레타리아의 주도성과 농민과의 확고한 동맹을 강조했다. 신경제정책이 자본주의로의 후퇴의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공세일 수 있는 것은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의 문제다. 이와 같은 ‘누가 누구를’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에트 정치권력의 확고한 주도성과 주요 산업과 은행, 토지 국유화, 대외무역의 국가독점을 통해 사회주의적 산업을 틀어쥐고 있는 것과 협동조합을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신경제정책은 자유로운 교환을 허용하는 동시에 자본주의 복귀의 위험성에 대비해 국가에 의한 전국적인 회계와 통제, 계획이 가능하도록 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강화하는 침예한 계급투쟁의 문제였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란 프롤레타리아가 정책을 지도하는 것이다. 지도 및 지배계급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는 가장 긴급하고 ‘곤란한’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정책을 지도할 수 있어야만 한다. 현재 가장 긴급한 문제는 농민경제의 생산력을 즉각적으로 증대시킬 정책을 취하는 것이다. 오로지 이러한 방식으로만 노동자의 상태를 개선하고 노동자와 농민의 동맹을 강화하며,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V. I. 레닌, “현물세 — 신정책의 의의와 그 조건들”, 1921년 3월 말-4월 21일, 《신경제정책(NEP)론》, 백승욱 편/해설, 새길, p. 71.)

자본주의의 발전(일정 정도까지 그리고 얼마 동안은 불가피한)은 국가 자본주의의 궤도로 향하게 하는 올바른 방법들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국가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전환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조건들로 국가자본주의를 포위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같은 책, p. 74.)

레닌은 신경제정책을 시행하면서 이것은 “프롤레타리아 국가권력과 국가자본주의 간의 협정이고 동맹이며 블록이다”라고 했다. 레닌은 이 협정을 프롤레타리아 권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계제 대공업을 발전시키고 무정부적인 소소유자적 관계에 대한 국가규제적 경제관계를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레닌은 신경제정책이 자본가에 대한 이권양도와 같다고 했는데 그 협정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에게 유리하게 되는 그러한 기준과 조건은 역관계에 달려 있으며 투쟁 속에서 결정된다. 왜냐하면 이권양도 또한 투쟁의 한 형태이며 다른 형태의 계급투쟁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은 계급투쟁에 대한 계급화해의 대체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천이 투쟁의 방법을 결정할 것이다. (같은 책, pp. 75-76.)

신경제정책에 대해 오토 바우어 같은 제2인터내셔널의 기회주의자는 “보라, 이제 그들은 자본주의로 후퇴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이 부르주아적이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다”며 저발전한 국가에서의 혁명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로 삼으려 했다. 뿐만 아니라 부르주아 언론에서도 러시아에서 자본주의가 복귀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레닌은 이것을 비웃으면서 신경제정책이 자본주의와의 경쟁이 아니라 격렬한 투쟁이라고 했다.

이것은 경쟁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격렬하게 필사적인 투쟁이며, 최후의 투쟁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에 가까운 생사를 건 투쟁이다. (같은 책, p. 188.)

신경제정책에 대한 레닌의 태도를 볼 때 수정주의자들이 레닌의 신경제정책을 운운하면서 자신들의 수정주의를 은폐하는 것이 얼마나 가당치 않은 논리인지를 알 수 있다. 레닌이 신경제정책을 실시할 때와 달리 수정주의 정책을 출발인 흐루시초프가 집권할 당시에는 파시즘과의 전쟁 후에도 러시아에 사회주의 생산관계가 완전복구 된 시점이었다.

사회주의가 발전하고 점차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시기에 사회주의의 원리를 이미 생활 속에 형성된 공산주의의 특징과 변증법적으로 결합시키는 일, 그리고 물질적 생산력의 발전을 촉진하는 모든 수단을 통일시키는 일은 특히 중요하다. 1952년에 스탈린의 저서 《소련의 사회주의의 경제적 문제》가 이 원리로부터 이탈하게 됨으로써 문제의 해결은 방해받게 되었다. 이 저서는 공산주의로의 이행이라는 조건 아래 사용된 생산수단은 상품의 성격을 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했다. 사회주의에서 상품생산 범주의 이용을 강화하는 것은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로부터의 이탈로 제시되었다. (소연방과학아카데미, 《맑스주의 변증법의 역사 II — 레닌적 단계》, 한울림, p. 261.)

위에서 흐루시초프의 집권 이후 기계 트랙터 보급소(MTS)의 폐지에 대한 잠깐 언급했는데 그 이후 소련에서 생산수단은 상품의 성격을 띠었다. 스탈린 시대에 생산수단은 상품으로써가 아니라 국가에 의해 집단농장에 공급하는 것을 통해 사회주의적 관계를 강화하는 주요한 고리였다. 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해 집단농장에 생산수단과 원료를 제대로 공급하고 생산수단의 수리와 갱신을 보장함으로써 집단농장 생산물의 가격을 낮출 수 있게 하고 이것은 프롤레타리아 국가에서 노동자 농민의 동맹의 굳건한 경제적 기초가 될 수 있었다. 스탈린은 사회주의에서 가치법칙을 활용할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았는데 마치 시장 자체를 전면 부정한 것으로 왜곡하여 생산수단마저 상품으로 돼야 한다는 것은 수정주의적 입장에 불과한 것이다. 이 글은 브레즈네프 시절에 쓰였는데 실제 브레즈네프 시대에 와서는 더욱 더 사회주의 상품-화폐관계에 대한 수정주의적 입장이 강화되었다.

스탈린 사망 이전인 1952년 5차 계획에서는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인민의 소비수준을 높이기 위한 소비재 생산에 대한 강조가 높아졌다. 흐루시초프는 56년 20차 당대회 이후 실질임금을 대폭 인상했다. 이것은 물질적 생산력이 높아짐에 따라 인민의 욕구가 크게 증대했기 때문이고, 인민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치만 놓고 보면 적절한 것이다. 그러나 소비재 산업 자체와 소비재 생산의 증가에 있어서도 역시 생산수단과 원료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중공업 발전을 통한 노동 생산성 향상이 우선하면서 소비재 산업과 균형적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생산이 성장하지 못하면 소비공급도 한계에 부딪치기 때문이다. 흐루시초프는 이러한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소비재 산업의 가속적 발전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하면서 성장률은 대폭 떨어지기 시작했다.

소련 경제의 성장률이 떨어지게 된 주요한 이유는 중앙계획의 약화와도 관련이 있는데 흐루시초프는 1957년 중앙 계획위원회(고스플란)

를 지역 계획기구(소브나르호제)로 대체했다. 이 결정은 과도한 중앙 집권화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급속한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역 자체 내에 자기 완결적인 경제구조를 갖추도록 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경제의 통일성을 약화시키고 국가 전체의 이해보다는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지역과별주의를 강화시켰다. 이와 함께 1958년에는 집단농장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기계 트랙터 보급소(MTS)를 폐지하는 법령을 공포했다. 그런데 MTS의 폐기는 집단농장에 자율성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단농장이 생산수단을 구매하고 그것을 스스로 관리하고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도리어 집단농장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했다. 뿐만 아니라 집단농장 생산물의 생산비용을 높임으로써 생산물의 가격을 치솟게 하였다.

호루시초프 때의 1956년-60년의 6차 5개년 계획은 1년 만에 중지되고 1957년 4월에 다시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당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1961년의 새로운 계획은 '상품-화폐'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지역뿐만 아니라 개별기업의 독립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다. 이 새로운 계획은 기업이 자신의 순수입의 더 많은 부분을 개별기업 노동자의 생산자극을 위해 사용하고 다른 기업과 직접 생산 및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1959년-65년의 7개년 계획은 분산화된 경제계획으로 인해 지역주의가 강화됐는데 이러한 가운데 경제적 혼란이 계속되었고 1963년-64년에는 소련 경제에서 처음으로 8%미만의 성장을 하였고 1963년에는 농업 흉작과 가뭄으로 인해 미국 자본주의로부터 곡물을 수입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경제적 혼란의 책임을 지고 호루시초프는 사임하였다.

호루시초프 사임 이후 등장한 브레즈네프의 시대를 소련 경제의 정체기라고 부른다. 브레즈네프 시기에 제8차-10차에 이르는 경제계획기간 동안에 경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는데 10차에서는 5%미만의 성장을 기록했다. 이렇게 되자 브레즈네프는 분산화된 계획을 철회하고 다시 중앙집권화 된 계획으로 일시적으로 복귀하기도 했다. 그러

나 이러한 복귀는 경제적 후퇴로 인해 계획을 강조하는 주장에 밀려서 취한 일시적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소련 경제의 분권화는 지속적으로 추구되었다.

한편 1962년 9월 2일 《프라우다》지에 리베르만 교수의 “계획, 이윤, 상여금”이라는 논문이 발표됐는데 이 논문은 사회주의 계획에 있어서 자본주의 이윤요소를 적극 도입하고 상여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리베르만 방식은 중앙계획을 줄이고 수익률 지표에 의해 15%-20% 정도를 기업별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에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생산달성 목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생산물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극복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다. 이 논문이 발표되자 소련 내에서는 그것을 찬성하는 입장과 계획경제를 약화시키는 내용이라는 반대입장이 첨예한 논란을 벌였다. 당시에는 이 방식이 자본주의로의 후퇴라는 다수의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되면서 공식적인 입장으로 채택되지는 못했다.

브레즈네프 시대인 1965년 9월에는 당시 수상이었던 코시킨이 중심이 되어 리베르만 방식을 적극 채용하는 ‘코시킨 개혁’이 채택되었다. 이는 개별 기업에 자치를 부여하고 이윤원리를 도입하여 기업에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이는 개별기업의 수익성을 강조하는 자본주의의 이윤논리를 적극 채택한 것이었다. 과거에 기업은 노동자에게 임금형태로 생산기여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전체 사회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는데 이제는 개별 기업에 성과를 귀속시키는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기업에 귀속되는 수익은 날로 증가되었는데 코시킨 개혁 이후인 1969년에는 39%의 수익이 기업에 귀속되었다. 이 개혁은 국가에서 공급하는 생산수단과 원료에 대해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기업이 직접 다른 기업에서 사서 낭비를 극복하고 생산을 개선하자는 취지였는데 이러한 자본주의적 원리 도입을 통해 시장을 강화시켰다.

사회주의에서 기업은 수익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적자를 보면서도 전체 사회주의 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복무하는 기업도 있는데 기업의 수

익성을 중심으로 강조하면 저 마다의 기업이 수익률에 매달리면서 사회주의 경제의 균형적 발전은 위태롭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거에도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 남아 있는 상품 시장관계를 부분적으로 활용하기는 했으나 이제는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핵심인 계획과 시장요소를 절충적으로 사용하여 사회주의 계획을 혼란과 정체에 빠뜨렸다. 쏘련 내에서 계획경제 내에서도 상품-화폐관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계획화 초기부터 논란이 되었는데 이 주장은 흐루시초프와 브레즈네프 시기를 거치면서는 점점 더 시장적 요소를 강화하는 것으로 변해갔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쏘련의 계획경제를 약화시키고 경제를 침체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짧은 안드로포프 시대를 거쳐 1985년 3월 고르바초프가 쏘련공산당 서기장이 되었다. 고르바초프는 그해 4월 23일 쏘련공산당 4월 총회에서 페레스트로이카(근본적 쇄신)를 선포했다. 고르바초프는 이 4월 총회에서 기업의 독립성과 권리를 확대시키는 독립채산제로의 이행을 강조했다. 고르바초프는 독립채산제의 핵심을 기업의 손실을 기업에 책임지는 것으로 국가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기업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시장을 강화하는 조치였다. 1987년 1월 고르바초프는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회보고에서 계획경제를 비판하였다.

상품-화폐관계의 역할과 가치법칙의 운용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이질적인 것으로 여겨, 이것을 사회주의와 직접 대치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이 경제에 대한 주관주의적 접근, 독립채산제의 과소평가, '임금균등제' 등을 유도하고 가격형성에 있어서 주관주의적 원칙, 화폐유통의 파괴, 수요와 공급의 조절문제에 대한 무관심 등을 야기시켰다. ("페레스트로이카와 당간부 정책에 관하여", 1987년 1월 27일, 《사회주의 대변혁 핵심문헌 50선》, 동아일보사, p.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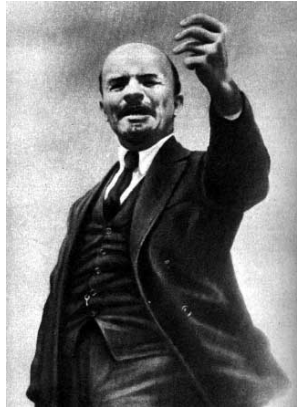
고르바초프의 주장은 대단히 위선적인데 위의 스탈린의 논문에서 언

급된 바처럼, 사회주의에서는 당시의 발전수준에서 상품-화폐 관계가 엄연히 존재하였고 이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가치법칙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낮은 수준의 공산주의에서는 자본주의의 분배론적인 임금차등제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적극 활용해서 생산에 자극제가 되어야 한다. 물론 이것이 자본주의적 요소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에게 개인에게 임금성으로 지급되는 부분보다 사회 전체에게 지급되는 각종의 무상서비스 비중을 점차적으로 더 높여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고르바초프는 마치 시장주의를 비판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왜곡하고 시장주의 정책을 합리화 하고 있는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집권 2년 반 만인 1987년 《페레스트로이카와 새로운 사고》라는 책을 출간했다. 그는 이 책에서 신사고가 레닌의 신경제정책을 본받은 것임을 강조했다.

민주주의적 과정은 페레스트로이카를 전반적으로 촉진시켰고 ... 이 과정은 경제문제에 대해 보다 폭넓은 시각을 갖도록 했으며 근본적인 경제개혁을 위한 계획을 추진케 했다 ... 주지하다시피 우리는 이 작업을 1987년 중앙위원회 6월 총회에서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 총회는 "경제관리의 근본적 페레스트로이카를 위한 기본과제"를 채택했다. 이것은 아마도 1921년 '레닌'이 그의 신경제정책을 도입한 이후, 우리나라에서 경제체제 개혁을 위한 가장 광범위하며 근본적인 개조 개혁이 될 것이다. (고르바초프, "페레스트로이카와 신사고", 1987년 11월, 《사회주의 대변혁 핵심문헌 50선》, 동아일보사, p. 57.)

고르바초프는 레닌의 신경제정책의 이름을 빌어 기업의 독자성 확대와 완전한 독립채산제 도입, 심지어는 기업의 자기금융제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는 노골적인 수정주의 정책을 은폐하려 했다. 고르바초프는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개인숭배 비판'을 용기 있는 행위라고 찬사를 보내면서 1930년대-40년대에 걸쳐 확립된 스탈린 시대의 중앙집중적 계획을 지령경제라고 비판하였다. 그런데 기업의 자치를 부여한다

는 명분으로 진행된 흐루시초프의 MTS 폐지가 계획을 약화시켰던 것처럼, 고르바초프의 기업 자치는 자본주의적 기업운동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사회주의에서 상품시장관계를 활용한다고 하던 페레스트로이카는 점점 더 ‘사회주의 시장을 폭넓게 이용하는 관리 방식’이라는 주장으로 노골화됐다. 이러한 극단적인 분권화 정책은 연방 내부의 갈등과 모순을 증폭시키면서 소련 내에서 민족분규를 고조시켰다.



페레스트로이카가 경제에서의 본질적인 개조, 혁신을 의미하는 수정주의 정책이라면 정치체제에서 글라스노스트(개방)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완전히 폐기하고 다원주의, 다당제 같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하는 정치부문에서의 수정주의였다. 고르바초프는 1990년 3월에는 마침내 당과 국가를 분리한다는 명분으로 부르주아 정치제도인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이 되었다.

소련 내적으로 이미 자본주의 복귀가 사실상 완료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1990년 7월 소련 공산당 제28차 대회에서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 의장이었던 옐친은 이른바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소련 공산당 내의 ‘보수파’들을 비난하면서 다당제 전환을 옹호하고 당의 이름을 민주사회주의당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르바초프 역시 이 당 대회에서 국유화와 독재는 소유와 권력으로부터 인간을 소외시켰다면 “총체적인 국유 폐지와 그 어떤 소유 형식의 강요를 반대한다”고 선언하면서 아직까지 남아 있던 사회주의 소유마저도 공격했다. 같은 해 10월 19일에는 시장사회주의에서 거추장스러운 사회주의를 떼어버리고 마침내 ‘시장경제로의 이행’이라는 자본주의 복귀를 노골적으로 선언하였다.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대신할 길은 없다. 세계의 온갖 경험들이 시장경제의 생명력과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 시장경제로의 이행으로 소련 경제는 세계경제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소련국민은 세계문명이 만든 모든 성과물에 접할 수 있다. (“국민경제의 안정화와 시장경제로의 이행의 기본방침”, 같은 책, p. 148.)

이 자본주의 복귀선언은 경제활동의 최대의 자유와 생산자간의 경쟁, 자유로운 가격형성, 경제의 개방화를 포함해서 사유화를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국립은행의 주식회사로의 재편도 기본방침으로 포함되었다. 1990년 12월 4일에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사회주의 명칭을 떼어 버리고 ‘주권 소비에트공화국 연방’으로 바뀌었다. 이로부터 1년 뒤인 1991년 12월에는 소련 연방마저도 붕괴되어 버렸다. 이로써 70여 년 동안 존재하며 인류 역사를 진보시켰던 소련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시장관계가 수십 년 동안 강화되다가 마침내 수정주의에 의해 내부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사회주의 계획의 원리와 본질

사회주의 경제관계에서 전체 사회의 생산과 분배의 새로운 조직화는 강력한 중앙집중과 계획에서 나온다. 그것이 아니면 자본주의의 무정부적인 생산을 대신해서 고도로 의식화된, 조직화된 계획을 세울 수 없다. 맑스주의의 창시자들은 자본주의 사적소유를 철폐하고 생산을 집중화시키는 것을 공산주의의 원칙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단 사적 소유에 대한 최초의 근본적인 공격이 일어나면 프롤레타리아트는,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 모든 자본, 모든 농업, 모든 공업, 모든 운송, 모든 교환들을 더욱더 국가의 수중에 집중시켜야 함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모든 정책들은 이를 위해 행해지는 것이다; 이 정책들은 프롤레타리아타의 노동에 의하여 나라의 생산력이 배가되는 것에 정

확히 비례하여 실현 가능하게 될 것이며, 또 그 집중화의 결과도 발전시킬 것이다. 끝으로 모든 자본, 모든 생산, 모든 교역이 국민의 손안에 집중된다면 사적 소유는 저절로 없어질 것이고, 화폐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며, 또한 생산의 훨씬 증대되고 사람들도 많이 달라져서 낡은 사회의 마지막 교류 형태들이 없어질 수 있을 것이다. (F. 엥겔스, “공산주의의 원칙들”, 《저작선집》 1권, 박종철출판사, p. 333.)

엥겔스가 말하는 원칙들은 발전한 자본주의 국가를 염두에 두고 있고, 이 원칙을 실현하는 방식과 과정은 각 나라마다의 특수성이 있을 것이고 “그 나라의 생산력이 배가되는 것에 정확하게 비례하여 실현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공산주의의 원칙은 국가의 수준으로 생산수단을 중앙집중화 시키는 것이다. 소련을 국가 사회주의라 비판하는 세력들은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아니라 사회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낮은 수준의 공산주의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강력한 프롤레타리아 국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무정부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사회주의에서 생산수단의 국유화는 국가소멸로 가기 전에 사회적 소유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레닌 역시 사적소유를 철폐하고 사회적 소유로 대체하고 계획경제를 실시하는 것이 사회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사회혁명은, 생산수단과 교환수단의 사적소유를 사회적 소유로 대체하고, 사회 전 성원의 복지와 전면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적 생산과정의 계획적 조직화를 실시함으로써 사회의 계급으로의 분열을 없애고, 그리하여 억압받고 있는 인류 전체를 해방할 것이다. (V. I. 레닌, “당강령 개정에 부쳐, 강령개정 초안”, 1917년 4월-5월, 《민중민주주의 경제론1: 레닌의 노동자통제 및 국유화론》, 백승욱 편/해설, 새길, p. 13.)

레닌은 사회주의 생산과 분배의 조직화에 있어서 중앙집중화를 반대

하고 공장위원회별로 자주관리를 주장하는 좌익 반대파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조합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는 행정의 참가라는 실제의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또한 달성된 성공이나 정정된 오류에 엄밀히 입각하여 이 경험을 더욱 발전시키려 하지 않고, 경제관리의 기관들은 ‘선출하는 생산자대회들 혹은 생산자대회’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리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노동조합에 대한 당의 지도적, 교육자적, 조직자적인 역할, 또한 반(半)뿌띠부르조아적이고 완전히 뿌띠부르조아적인 근로인민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똑같은 역할은 완전히 회피되고 배제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소비에트 국가에 의해서 시작된 새로운 경제형태들의 건설이라는 실제의 업무를 계속하고 시정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업무에 대한 뿌띠부르조아적이고 무정부적인 파괴를 목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파괴행위는 부르조아 반혁명의 승리로 귀결될 뿐이다. (V. I. 레닌, “러시아공산당 제10차대회의 결의 우리 당내의 생디칼리즘적, 무정부주의적 편향에 대하여의 최초의 초안”, 같은 책, pp. 215-216.)

공산주의 건설을 위해서는 노동을 전국적인 규모에서 가능한 최대로, 극히 엄격하게 집중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본의 위력과 노동의 무력함의 근원의 하나인 노동자의 직업적 분산 상태 및 지방적 분산 상태와 세분상태를 극복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V. I. 레닌, “러시아공산당(불) 강령초안”, 1919년 2월 23일, 같은 책, p. 25.)

공산주의는 전국의 대규모 생산의 최대의 집중을 필요로 하며 또한 전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모든 기업을 직접 관할하는 권한을 전 러시아의 중앙기관에 부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방의 중앙기관은 중앙기관의 생산전반에 관한 지시와 결정에 따라서, 지방의 생활조건 등에 따라서 그 직무를 결정한다. 일정부분의 모든 기업을 전국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직접 관할하는 권한을 전러시

아직 중앙기관으로부터 빼앗는 것— 위원회의 초안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지방주의적인 무정부적 생디칼리즘일 것이다. (V. I. 레닌, “국유화 기업 관리규칙 초안에 대한 의견”, 1918년 6월 2일 집필, 같은 책, p. 210.)

이러한 레닌의 입장은 1918년 11월 전시공산주의 이전이나 신경제정책을 결정하던 시기의 글에 다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단지 전시공산주의라는 특수한 조건에서의 일시적인 방책이라고 할 수 없다. 쏘련의 계획을 비판하는 세력들은 중앙집중화를 공격하면서 ‘스탈린주의 관료주의’라고 비판하는데 공장위원별 자치 계획을 주장하는 세력들을 지방주의적, 무정부주의적, 생디칼리즘적이라고 비판하면서 고도의 중앙집중을 옹호한 것은 바로 레닌이었다. 레닌은 이러한 행위를 파괴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를 방지하면 부르주아 반혁명의 승리로 귀결된다고 경고했다. 레닌의 이러한 경고는 나중에 현실화됐다. 이러한 세력들은 현실 사회주의 붕괴의 원인을 중앙집중화 된 계획으로 돌리고 그것을 가속화시킨 수정주의를 부지불식간에 옹호하는 것이다. 레닌주의에 대한 비판을 ‘스탈린주의 비판’으로 가장해 사회주의 경제의 원칙에서 이탈한 것이다.

중앙집중화된 계획을 비판하는 부르주아들은 물론이고 사회주의자라고 자칭하는 세력들도 부르주아적 쏘련 비판에 동참하고 있다. 노동해방실천연대는 ‘(가칭) 한국사회주의 노동자당 강령 초안 해설’에서 쏘련경제를 명령경제, 지령경제라고 비판하면서 “결합된 노동자 자주관리체들이 생산과 유통에 대한 생산자들의 의식적 통제를 실현하는”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연합’이라는 계획의 상을 제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SWP(영국사회주의노동자당)의 알렉스 캘리니코스도 민주적이고 분산화된 계획⁶⁾을 옹호한다.

6) 캘리니코스는 《반자본주의 선언》(정성진·정진상 역, 책갈피)에서 중앙의 강요가 아닌 생산자들과 소비자 사이의 분산되고 수평적인 관계에 기초한 팻 데바인의 민주적 계획모델을 옹호한다. 이 계획모델은 광범한 경제적 변수들은 전문가가 마련한 일련의 대안적

그런데 중앙계획과 참여는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중앙계획에 있어서의 관료주의와 비효율성이라는 부분적인 문제를 이유로 계획과 대립되는 분산화를 옹호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중앙의 행정적 명령 없이, 계획 과정 전반에 대한 당의 의식적 지도 없이 각자의 조합주의적이고 지방주의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누가 그것을 조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또한 분산된 자주관리체들의 수평적인 연합에 의해 수정주의적 요소를 강화될 때 누가 어떻게 의식적이고 수직적인 통제를 강화할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중앙계획의 오류는 그 반대인 분산화가 아니라 중앙계획 속에서 참여를 강화하는 계획이 되는 것으로 시정해야 한다. 이들은 “목욕물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버리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된 것이다.

만델은 “사회주의 계획의 방어”라는 글에서 알렉 노브 같은 시장사회주의를 비판하면서 계획을 방어하려 하고 있다. 만델이 제시하는 계획의 상 역시 “민주적으로 결합되고 집중화된 자주관리, 연합된 생산자들의 계획된 자기통제”이다. 그러나 민주적으로 결합되고 연합된 생산자들을 하나로 묶어세울 수 있는 집중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연합된 생산자들 스스로가 계획된 자기통제를 하는 것으로 중앙집중적인 계획이 이뤄질 수 있는가? 만델의 주장은 시장사회주의를 반대하고 있지만 도대체 집중화된 자주관리가 유고의 자치적 자주관리⁷⁾와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만델의 계획에는 참

계획에 기초해, 선출된 대표 회의체가 국가 수준에서 결정하되, 대부분의 경제적 의사결정들은 분산된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다. 이 계획모델은 계획에 있어서 중앙의 행정 명령을 거부하고 충분히 분산된 기초 위에서 경제적 결정들이 의식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7) 유고 사회주의는 티토에 의해 지도되면서 1940년대 후반에서 1950년 대 초반에 사회주의 진영 내부에서 가장 먼저 노동자 자주관리를 주장하면서 ‘시장 사회주의’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쏘련 경제의 명령적, 획일적 경제계획을 비판한다고 하면서 각 연방과 지역, 개별 기업에 광범위한 자치를 부여하는 ‘노동자 자주관리’를 실시했다. 유고의 시장사회주의 모델은 이후 헝가리, 폴란드의 수정주의 흐름의 출발이 됐다. 유고의 시장 사회주의 모델이 동구와 쏘련 사회주의의 붕괴의 출발이 됐고, 한때 국내에서도 쏘련 몰락 이후에 유고 시장 사회주의 모델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있었고, 지금도 시장 사회주의 모델을 추목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향후 독자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여와 자치는 있으되 중앙집중을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지가 구체적이지 못하다. 더군다나 만델의 계획에는 계획전반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의식적인 당의 역할이 빠져 있다.

유고의 시장사회주의는 사회주의 국가들 내에서 가장 먼저 수정주의 흐름을 개척했다. 티토를 중심으로 하는 수정주의자들은 이를 이유로 코민포름(국제공산주의정보기구)에서 제명됐다. 티토의 시장 사회주의는 노동자자주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중앙계획에 대한 반대이고 자본주의 시장과의 타협이었다. 그러나 시장 사회주의 원리에 의한 노동자자주관리는 노동자의 생산과정에서의 직접적 참여라는 지극히 원칙적인 주장과 주관적 소망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자주성을 자본의 발밑으로, 제국주의의 발밑으로 던져버리는 역설적 결과를 가져왔다.

자주관리는 결국 자본주의 시장관계를 강화하였고 이로 인해 유고 시장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극심한 인플레이, 제국주의 경제에 종속된 결과로 외채문제, 생필품 가격의 엄청난 인상, 복지의 후퇴와 대량의 실업사태, 빈부격차 등 자본주의 사회에 나타나는 고유한 문제가 그대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유고는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사회주의 연방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중앙집중 계획을 포기하고 기업과 개별 공화국에 광범위한 자치와 분산적인 계획을 하도록 하는 바람에 민족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부각됨으로써 이기주의, 민족 갈등이 극심해지게 되었다. 이것이 직접적인 유고 연방 붕괴의 계기가 되었고, 유고 연방의 붕괴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변모한 이후에 민족갈등이 극단적으로 부각됨으로써 내전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

분산화된 계획, 민주적 계획을 강조하는 세력들은 소련의 붕괴 원인

을 계획의 중앙집중성에서 찾으면서 분산화 된 계획을 옹호하고 있다. 유고를 비롯한 헝가리, 폴란드 등 동구 사회주의와 소련의 해체의 원인이 계획경제의 약화와 수정주의인데 수정주의 추종자들은 그것을 거꾸로 ‘스탈린주의 관료주의’의 지령적, 명령적 경제로 돌리고 소련 붕괴의 원인을 제공했던 수정주의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본질적으로 지령적이고 명령경제이다. 계획적 생산조직은, 말할 필요도 없이 중앙집권적 지향을 가진 지령적 성격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행정적 관리방식을 전제한다. 레닌이 강조했던 ‘중앙기관의 생산전반에 대한 지시와 결정’이 명령경제, 지령경제가 아니면 무엇인가? 지령경제, 명령경제는 사회 전체의 이해와 동의 속에서 고도로 사회주의 경제를 조직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것을 두고 경제조직의 계획적 체제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 반인간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것으로 보는 사고는, 계획경제 비판 중에서도 두드러진 지위를 점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하이에크는 경제의 국가적 규제를 ‘노예제로의 길’이라고까지 극언하고 있다. (짜골로프 외 저, 윤소영 편/해설, 《정치경제학 교과서》 II-1, 새길, p. 145.)

국민경제계획화는 지령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계획과제가 생산의 모든 수준(국민경제 전체, 콤비나트, 기업연합체, 기업, 공장 내 직장, 작업반, 작업조, 노동자 개인)에서 의무적이라는 것이다 ... 이와 같은 과학적 예견, 계획의 엄밀한 과학적 기초, 계획의 당적지령적 성격은 연합생산자 사회에서의 계획화의 본성,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짜골로프 외, 《정치경제학 교과서》 II-2, 새길, pp. 190-191.)

이들은 이러한 계획의 본성과 본질인 지령과 명령을 마치 언어가 가지고 있는 강압과 전제적 폭력의 이미지에 현혹되어 왜곡하고 있다. 물론 브레즈네프 시절 짜골로프 교과서에서의 계획에 대한 강조가 현

실에서는 다르게 나타났지만 지령과 명령이 사회주의 계획경제 조직화라는 경제관계의 본질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전 사회적 결의에 의해 자본주의를 대신해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생산과 분배를 조직하는데 있어서 중앙집중은 필수적인 것이다. 다만 이것이 레닌의 말대로 자치와 지방적 특수성, 창조적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적으로 조직화된 중앙집중화만이 중앙집중 계획에서의 관료주의와 비효율성을 떨쳐버리고 계획경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계획은 고도로 조직된 명령경제이고 지령경제인데 그렇다고 그것을 행정적, 경제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위에서 레닌은 정치의 우위에 대해 말했다. 그런데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위는 “경제적 토대 위에 상부구조가 들어선다”는 사적 유물론의 법칙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법칙을 인정하면서 법칙의 작용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계획경제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 계획과정 전반을 지도하는 중심은 노동자계급의 전위인 당이었다.

계획기구를 처음에 만들 때 트로츠키는 중앙계획기구에 집행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레닌은 트로츠키의 주장을 반대하면서 전문가 기구의 역할과 정책입안권과 집행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정치기구-국가최고기관의 역할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회주의 계획은 중앙집중적이고 통일적이어야 하는데 이 전체적 과정을 의식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분리주의와 관료주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계획은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전체를 통일시키는 것인데 각 지역별, 공장별 단위에서는 보다 많은 생산과 분배를 얻기 위한 이기주의적 이해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은 사회주의 경제에서 중요한 기반이 되기는 하지만 각 공장 노동자들의 물질적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 전체의 이해보다 각 공장의 조합주의적인 이해를 대변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계획은 전체 사회의 발전을 위한 계획이어야 하고 계획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성 오류를 최소화하고 각 공장, 지역별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이해를 조정하고 통일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은 계획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나 관료주의의 등장 등에 대해서 지도하는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쏘련에서 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기구는 국민경제위원회, 재정인민위원회, 교통인민위원회, 쏘련 국가계획위원회(고스플란)로 나뉘어 있었다. 이 중 계획기구는 고스플란을 중심으로 해서 개별연방 공화국 및 지성(地城)계획위원회, 그리고 부처별 계획기구로 중앙 및 개별공화국의 부처별 계획부서와 각종 생산조합 및 주요 기업체의 계획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계획의 입안은 연방 및 자치 공화국 내의 국가계획위원회, 지방, 지성 및 시 계획위원회 등 모든 계획기관의 동시 참여하에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쏘련 공산당과 사회주의 정부는 경제의 기본 목적과 목표들을 설정하여 계획의 초안을 잡는다. 그리고 조직체계는 정부 내의 여러 관련 행정부처로서 소관 사항 내의 계획을 주도했다. 마지막으로 이같이 형성되어 정부에 의해 승인된 계획은 국가계획위원회에 의해 실제 집행된다.⁸⁾

쏘련에서 계획은 당과 소비에트 국가의 최고경제기구에서 한 해의 중심적인 계획의 목표와 방향을 입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계획기구가 참여하여 계획초안을 마련한 뒤에 이를 지역적 계획기구에 내려 보내고 다시 각 공장별 논의를 거친 뒤에 다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을 취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류와 시행착오가 발생했지만 이를 근거로 계획 자체가 독재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왜곡하는 것은 부르주아적 논리와 악선동에 불과하다.

8) 쏘련의 구체적인 계획과정에 대해서는 “쏘련의 집권적 계획경제체제 개혁에 관한 연구 - 흐루시초프, 브레즈네프 시기를 중심으로”라는 이윤희의 1985년 8월 논문에서 인용하였다. 쏘련의 계획경제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Paul R. Gregory·Robert C. Stuart, Soviet Economic Structure and Performance, Harper & Row Publishers를 참고하기 바란다.

자본주의의 기본경제 법칙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라는 것이고, 상품의 자유로운 매매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기구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부르주아들은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를 자유와 인간성의 본질이라고 맹목적으로 찬양하고 있다. 그러나 무정부성과 무계획성을 특징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은 공황에서 그 폭력적, 야만적 본성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자본주의 생산과 분배의 조절자의 역할을 한다는 시장에서의 조절은 파괴와 약탈, 혼란과 무질서를 통하여 관철되는 지극히 야만적인 조절이다. 이 조절은 합리성과 과학, 공동체적 본성을 추구해야 하는 인간의 본성과 대립할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의 경제법칙은 생산수단의 전 사회적 소유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주의 생산관계를 중심으로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전체 사회의 물질적, 문화적 수준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다. 그 본질을 만들어내는 핵심기구가 자본주의 시장에 대립되는 고도로 중앙집중된 계획이다. 시장의 맹목성과 파괴적 본성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가 눈앞에 펼쳐지면서 대중을 죽음과 같은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 데도 여전히 부르주아 계급은 ‘대안 없음’을 이유로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행사하고 지배권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하는 자칭 사회주의자들 역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와 힘에 압도당해서 사회주의의 법칙과 그 법칙을 수행하는 기구인 계획경제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있다. 방어를 고사하고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어 계획의 본질과 원리를 공격하고 부르주아적 참여와 자치라는 공허한 수사에 매달려 있다. 그것은 ‘일정 부문의 모든 기업을 전국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직접 관할하는 중앙기관의 권한’을 빼앗는 무정부적, 생디칼리즘적인 일탈에 불과한 것이다.

사회주의 계획은 단순히 경제계획기구의 행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의 원리를 전 사회에 관철하는 총체적인 과정이자 노동자계급과 전위당의 고도의 정치적, 사상적, 문화적 투쟁이다. 사회주의와

계획을 옹호하는 것 역시 경제의 조직화에 대한 문제이자 정치투쟁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도 역시 맑스-레닌주의 사상에 철저히 입각하여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와 각종의 기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맞서는 투쟁이 절실한 것이다.

보론

수정주의의 전위, 유고 시장사회주의

우리는 위의 글에서 유고 시장사회주의는 “향후 독자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물론 이 글 역시도 유고 사회주의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은 아니다. 우리는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의 몰락의 주된 내적 원인이었던 사회주의 내에서의 중앙집중 계획의 약화와 자본주의적 시장-상품 관계의 강화에서 출발해서 시장 사회주의로 나아가다가 결국은 붕괴했던 경험을 분석했다.

소련에서 리베르만 방식은 브레즈네프 시절에 코시킨 개혁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생산에 관한 결정권과 이윤의 상당 부분을 기업단위에 넘기고, 당의 주도적 역할을 약화시키는 자본주의적 시장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소련에서의 이러한 자본주의적 시장 요소의 도입에 앞서 유고에서는 노동자 자주관리에 이어서 시장 사회주의가 가장 먼저 채택되었다. 유고는 사회주의 내에서 발생한 수정주의의 전위였다. 소련에서 자본주의적 시장 요소의 도입은 흐루시초프 시절에 시작되어 점차로 강화되다가 고르바초프 시절에 마침내 자본주의의 복귀로 나타났다. 반면 유고 시장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다. 소련과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로 번져갔고, 소련에서 흐루시초프의 수정주의의 등장 이후에는 더욱 더 탄력을 받고 진행되었다.

80년대 들어서 실업, 외채, 인플레이션, 과잉생산, 빈부격차의 증대, 지역, 연방 간 분열의 심화 등 자본주의 국가 내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격화되자 유고에서는 다시 중앙계획의 강화 등 사회주의 계획의 요소를 도입하려는 조치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이미 자본주의의 시장 요소에 포위된 유고 사회주의 내부의 모순을 극복하고 붕괴를 막기에는 불철저했고, 때가 늦었다. 우리는 이 글에서 소련과 동유

럽의 사회주의의 내적 붕괴 원인을 분석했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과 관점으로 유고 사회주의의 경험을 분석할 것이다.

유고사회주의는 민족주의적, 수정주의적 경향을 이유로 1948년 6월 코민포름(국제공산주의정보기구)에서 제명됐다. 이후에 유고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로 가는 유고의 길’로 당시 스탈린 시대의 중앙집중 경제와 다른 사회주의의 길을 가기 시작했다. 유고에서의 노동자 자주관리와 시장 사회주의의 실험은 1952년에 와서야 채택되기 시작하였고, 60년대 중반에는 체코슬로바키아, 68년에는 헝가리에서 도입되었다.

1. 맑스레닌주의 국가론의 왜곡과 폐기

유고 사회주의는 맑스주의 국가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시장 사회주의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려 했다. 1948년 7월 21일에 유고 공산당 제5차 대회에서는 ‘이행기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과 ‘당과 국가의 관계’ 등 맑스주의 국가론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을 시도했다.

“이 무렵 그들이 가장 중요시한 것은 맑스의 사상가운데 무산계급이 요구하는 것은 오직 ‘점차 사멸되어가는 국가’라는 것과 ‘생산자간의 자유연합’에 관한 부분이다. 그들은 이것을 과학적 사회주의의 핵심이자 실질로 간주하고, 현실 사회주의운동이 오직 이러한 방향으로 전진할 때만이 정확하게 맑스 레닌주의 원칙에 부합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맑스 레닌주의로부터 벗어난다고 보았다 반드시 국가권력의 중앙집권주의에 대해 비판과 역제의 태도를 취하여 가능한 빨리 국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자치는 노동인민이 사회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방식을 통해 ‘당이 없는 직접사회주의 민주주의 길을 실현’하고, ‘국가의 특정 기능들이 소멸하는 길’, ‘국가의 특정 기능들을 사회자치기능으로 전화시키는 길이라고 규정하였다.”(김정호 북경 인민대, 「연합노동의 좌절, 연방의 해체」, 레디앙 연재기사)

사회주의에서 당과 국가기관은 노조와 당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결합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에서도 역시 당은 노동자계급의 가장 선진화된 부위 즉 전위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이를 통해 국가 기구에서 주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전체 사회의 균형적 발전과 전체 인민의 물질적, 문화적, 계급적 발전을 위해 사회주의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다만 국가 기구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당이 곧 국가기구로 단순히 대체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당은 국가기구와 적극 결합하되 단순히 그것에 흡수되고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기구와 각종 대중조직을 지도하는 전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당의 국가와의 긴밀한 결합은 당이 지도단위임을 단순히 자임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당은 사회주의 경제와 정치, 이데올로기 투쟁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국가 기구와 각종 대중기구 내에서 지도력을 인정받을 때 당과 국가와의 결합은 제대로 실현되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국가 인민들의 계급의식이 상승하고 사회주의가 발전할수록 국가 기구 내에 비당원의 비중도 점차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당과 국가와의 결합에 있어서 관료주의적이고 인민들 위에 군림한다거나 대중들로부터 지도력을 인정받는 것을 행정적 명령이나 법령으로 대체

한다거나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결합방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고에서는 당과 국가, 또는 당과 프롤레타리아 대중들과의 올바른 결합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합 자체를 거부하고 당과 국가를 분리시켰다. 유고



는 1952년 11월 제6차 공산당 대회에서 당의 역할이 '지령'에서 '설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이유로 공산당이라는 명칭을 '공산주의자 동맹'으로 변경하고 당의 전국중앙위원회를 폐지했다. 뿐만 아니라 "당의 전국중앙위원회를 폐지하고, 각 공화국·자치성 공산연맹중앙위원회 통제하의 유고연맹주석단 및 그 집행국을 설립하였는데, 이로 인해 당중앙의 집중통일적 지도력의 급속한 약화가 초래되었다."(같은 글)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당기구의 분산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고 각 연방의 자치화라는 명목으로 국가 기구 자체를 분산화 하는 것으로 나아갔다.

유고에서는 맑스가 자본론에서 공산주의 사회의 경제적 조직화 원리를 언급할 때 묘사했던 '생산자 간의 자유연합'을 유고 사회주의 생산의 조직원리로 가져가려 했다. 맑스는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을 둘러싼 생산자들의 관계가 생산자와 생산자와의 직접적 관계가 아니라 상품을 매개로 나타나고 인간이 만들어낸 상품이 자본이 되어 인간을 지배한다고 주장했다. 인간이 자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결과 미지의 자연을 신으로 간주하여 종교를 만들고 자신이 만들어낸 종교를 숭배하는 물신숭배로 나타나는데 맑스는 이것을 빗대어 자본주의 상품 물신성이라고 했다. 맑스는 이 자본주의 물신성은 "인간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일상생활의 현실적 관계가 투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비로소 소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맑스는 비현실적인 몽상가가 아니었다. 맑스는 이러한 '자유인들의 연합체'가 사회주의 건설 초기에 즉각적으로 건설될 수 있다고 여기지 않았고 길고 고통에 찬 역사적 발전수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유인들의 연합체의 총생산물은 사회적 생산물이다. 이 생산물의 일부는 새로운 생산수단으로 역활하여 사회에 남는다. 그러나 다른 일부는 연합체 구성원에 의해 생활수단으로 소비되며, 따라서 그들 사이에 분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분배방식은 사회적 생산조직 자체의

성격에 따라, 또 생산자들의 역사적 발전수준에 따라 변화할 것이다 ... 사회적 생활과정[즉, 물질적 생산과정]이 자유롭게 연합한 인간들에 의한 생산으로 되고 그들의 의식적 계획적 통제 밑에 놓여지게 될 때, 비로소 그 신비의 베일이 벗겨진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회는 물질적 토대 또는 일련의 물질적 생존조건을 가져야 하는데, 이 조건 자체도 또한 하나의 길고 고통에 찬 역사적 발전의 자연발생적 산물이다.”(맑스, 자본론 I 상, 비봉출판사, 김수행 역, P.101-102.)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달리 기업들의 무정부적인 개별적 생산이 아니라 사회적 계획 하에서 생산을 계획하고 생산물을 분배한다. 사회주의에서는 개별 기업의 이윤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과 인민의 풍요로운 발전을 위해 생산과 분배를 집단적인 사회적 통제 하에 둔다. 이 사회적 통제를 사전에 기획하고 주도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국가이다.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 이전의 단계인 사회주의에서의 사회화는 핵심 기업과 금융기관의 국유화로 나타난다. 국유화는 사회적 생산의 주요한 형태이다. 이밖에 소련에서 사회화의 형태는 농업에서 나타난 국영농장(소프호즈)과 협동조합 형태의 집단농장(콜호즈)이 있었다.

사회주의에서 대다수의 기업은 국가 소유이다. 문제는 그 국가의 성격이 대중국가로서의 프롤레타리아 국가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유화는 사회화의 주요한 형태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 내에서 프롤레타리아의 주도성과 계급적 이해가 철저히 관철되는 프롤레타리아적 국가의 성격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에 자본주의에서 대다수의 기업은 자본의 소유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국유기업이 있지만 그것은 자본의 이해에 철저히 복무한다. 자본주의 국유화는 자본주의 초기에 독점자본이 형성되기 이전에 철도와 항만, 도로 등 거대자본이 들어가는 부분에 국가가 직접적인 자본투자를 하여 국유화를 하고 독점자본이 형성되면 이것을 독점자본에게 매각하는 사유화로 나타난다. 철도, 도로, 항만, 전기 등 이른바

사회간접자본을 이루는 기업의 국유화를 통해 국가는 자본의 생산과 물류비용을 줄여서 사적 자본의 자본축적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또한 공황기에 국가는 부도기업을 인수하여 국유화하고 다시 국유기업이 살아야만 독점자본에 사유화하는 것으로 독점자본의 이해에 복무하기도 한다. 자본주의 국가는 대중국가가 아니라 독점자본에 종속되는 자본가 국가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에서의 국유화가 진정한 사회화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소멸이 필요하다. 국가의 소멸과 함께 대중들이 진정으로 사회의 주체가 될 때 국유기업은 진정으로 사회화된 기업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은 즉각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발전의 수준에 달려 있는 것이다. 맑스는 이 과정은 “하나의 길고 고통에 찬 역사적 발전의 자연발생적 산물이다.”라고 했다. 소련을 비롯한 현실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은 발전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 후진적인 국가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더욱 더 길고 고통에 찬 역사적 발전의 과정이 필요했다.

레닌 역시 사회주의에서 프롤레타리아 국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급의 철폐는 오래고 곤란하고 또 집요한 계급투쟁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이 계급투쟁은 자본의 권력이 전복된 후에 부르조아 국가가 파괴된 후에,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확립된 후에(낡은 사회주의와 낡은 사회민주주의의 속물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형태가 달라질 뿐, 많은 점에 있어서 일층 더 가열하여지는 것이다 ... 계급을 폐절하기 위해서는 한 계급의, 즉 착취자들을 전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반항을 무자비하게 분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 모든 부르조아 이데올로기와 절연하고 자유와 평등일반에 관한 모든 시정배적 미사여구(사실에 있어서 이러한 미사여구는 맑스가 오래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상품 소유자들의 ‘자유와 평등’,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자유와 평등’을 의미한다)

와 절연할 수 있는 피억압계급 중의 한 계급의 독재의 시기가 필요하다.”(레닌,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하여』, 『헝가리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인사』, 도서출판 앞과 함, P.136.)

이처럼 국가의 소멸을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 국가에 의해 부르주아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사회주의 국가가 필요하다. 더군다나 한 국가에서 사회주의 생산관계가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제국주의 국가가 버티고 있는 한 프롤레타리아 국가는 제국주의 국가로부터 프롤레타리아 국가를 강화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더욱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유고에서는 이 과정을 사회주의 건설 초기에 즉각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 했다. 유고 사회주의는 착취자들의 저항을 제압하고, 사회주의적 생산을 조직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계급의 독재라는 무기를 스스로 내던져 버렸다. 국가의 폐지라는 목표를 위해서 역설적으로 지배계급으로 무장하고 조직화된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계급의 독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맑스-레닌주의 국가론이 아니라 무정부주의적인 국가론에 다름 아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국가의 완전한 폐지를 목표로 하지만, 국가의 사멸을 주도하는 사회주의 건설의 결과로 계급이 사회주의 혁명에 의해 폐지된 연후에만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후자(무정부의자/글쓴이 주)는 국가가 폐지될 수 있는 조건을 이해하지 않으면서 일시에, 그것도 완벽하게 국가를 폐지시키려 한다 무정부주의자들은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 국가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거부하기까지 하며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도 거부하고 있다.”(레닌, 국가와 혁명, 논장, 김영철 옮김, p.139-140.)

유고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국가권력을 타도했지만 “프롤레타리아트가 타도된 국가의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하고 어떻게 혁명적 권력을 행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저 모호하고 애매한 관념만을 지니고 있

을 뿐이”(같은 글, p.140)였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에서 국가가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노동자계급과 민중에 의한 자본가 계급에 대한 독재와 지배의 성격으로서의 계급국가의 성격이 소멸되는 것이지 일상행정과 경제의 조직화에 있어서 중심 기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유고는 사회주의 건설 초기에 당과 국가의 기능을 분산시키고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소멸을 경제와 행정의 조직화의 기능마저도 사라지는 것으로 왜곡했다. 이렇게 유고 사회주의는 맑스-레닌주의 국가론을 왜곡하고 폐기한 것처럼 사회주의 생산의 조직화도 왜곡하고 폐지시켰다.

2. 분산화와 시장의 강화가 초래한 자본주의적 모순의 침예화

유고 사회주의는 생산의 중앙집중화를 대신하여 ‘민주화’, ‘권력분산’, ‘노동자자치’ 등의 구호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1950년 6월 26일 유고연방공화국 인민의회는 <노동자의 국영기업과 고급경제연합조직의 집체관리에 관한 기본법령>을 통과”시키고, 노동자 자주관리를 실시하게 되었다.

“노동자 자치는 기업관리제도에 있어서의 일대 근본적인 변혁이다. <노동자자치 법령>이 규정한 중요한 조치사항을 보면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적절히 분리한 뒤 민주적으로 선발된 노동자 관리위원회가 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한다. 둘째, 기업경영권 가운데서 노동자집단의 주도적 지위를 확립하고, 기존 기업경영자의 지위와 역할을 변경, 기업경영자는 노동자집단의 일개 고용원으로서 더 이상 국가기구의 파견 대리자나 기업 내 정책결정권자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 셋째, 기업 내에 광범위하게 직접민주제를 실시, 기업간부와 노동자위원회 그리고 관리위원회 성원에 대한 민주선거제와 정기운번제를 시행한다.”(김정호 북경 인민대, 『연합노동의 좌절, 연방의 해체』, 레디앙 연재기사)

이러한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에 의한 자치적 생산의 확대와 함께 유고연방 내부의 개별 자치공화국 단위에서의 생산의 분산화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러한 자치와 분산화는 1, 2차 정치개혁을 통해 점차로 확대 실시되었다. 유고공산당(유고 공산주의 동맹)은 이러한 자치와 분산의 시행으로 인해 민족 간 모순이 줄어들고 기업 내부의 노동자들의 참여와 권리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노동자 자주관리법은 1950년 법령이 제정되고 52년부터 실시되었다. 노동자 자주관리는 맑스의 ‘자유롭고 평등한 생산자들의 연합’이라는 생산원리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이때의 구호는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에게’라는 1917년 러시아 혁명 당시의 구호를 빗대어 ‘권력을 생산자에게’였다. 이러한 구호에 입각하여 노동자 자주관리는 기업의 노동자총회에서 선출된 노동자평의회에서 관리위원회를 선출하고, 이 평의회와 관리위원회에 의해 기업이 관리되고 운영되었다.

노동자총회는 생산, 재정, 기업확장 계획, 기술변경 등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밀접한 문제들을 다뤘다.(조우현 엮음, 세계의 노동자경영참가, p.289. 참고) 그럼에도 이때까지는 여전히 중앙계획이 중심적인 요소였고, 시장적 요소는 부분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부터 시장 사회주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했다. 유고 공산주의 동맹 내부의 대표적인 시장 사회주의자인 카르텔은 “시장이 바로 노동에 따른 분배의 실험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인 것이다”(현대사회주의 비교연구, 최성 엮음, 학민사, p.252.)라고 주장했다. 유고 서기장인 티토는 카르텔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자치기관의 결정이 무시된다거나, 행정적인 개입이 행해진다거나 하는 경향이 흔히 보여 진다. 분배에 있어서도 경제연합 등에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결정되고, 기업의 결정권이 형식적인 것으로 되고 있는 것이 허다한데, 직접 생산자의 권리를 무엇보다도 확대해야

만 한다. 투자정책에 있어서도 정치기관이 거의 모든 자금배분을 결정하고 있는데, 생산기구 외적인 요소가 투자정책을 결정하는 한, 실로 효과적인 분업체제가 생겨날 수 없다.”(현대사회주의 비교연구, 최성 엮음, 학민사, p.252.)

이미 이때를 전후하여 유고 내에서는 식량품과 연료비등 물가가 수십 퍼센트 상승하고 무역수지 적자가 급증하면서 자본주의 시장 조치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유고 지도부는 이러한 문제를 더 확고한 시장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결과로 생각하고 더욱 더 시장조치를 강화해 나갔다. 이에 대해 유고 공산주의 동맹 내부에서는 랑코비치 부서기장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계획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격렬하게 대립하였다. 이러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65년에 유고는 각종 법령을 공포하여 시장 사회주의 조치를 강화해 나갔다. 이것은 국가의 보호 아래 있던 중공업 등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여 기업 스스로의 책임으로 돌리고, 기업 자체의 재정확충과 기업단위에 이윤의 상당 부분을 귀속시키는 조치 등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장 사회주의 조치의 강화로 인해 유고 사회주의는 한편으로는 높은 성장을 이룩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모순들이 더 극심하게 나타났다.

첫 번째는, 지역격차의 확대와 민족대립의 재현이다 ... 두 번째는, 사회적 투자의 약체화이다. 자금이 정치조직의 수중에서 기업으로 대폭 이전된 결과, 원료개발, 농업개발 등 채산성이 나쁜 산업부문과 교통, 수리, 교육, 보건 등의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문의 자금확보가 쉽지 않게 되어 신문 등에서도 그 폐해가 빈번히 취급되어졌다. 세 번째는, 생산의 무정부성이라 불리우는 제 현상의 심각화이다. 디노미네이션이 인플레이를 가속화시켜 데이날의 가치저하가 한층 빈번하게 매스컴에 실리는 만화의 소재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64년에 총노동인구의 2.5%였던 실업자는 67년에는 6.8%로 증가한 약 30만 명에 달했다 ... 기업은 자주적 결정권을 얻었지만, 동시에 경쟁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경제에 정통한 경영전문가층의 역할이 높아지고 노동자에 의한 자주관리는 오히려 형해화하는 경향이 눈에 띠게 되었다. 경제 전반에 있어서도 은행 등의 금융기관의 힘이 강화되어 기업에 종속되는 것으로 되었다.(같은 책, p.254-255.)

유고 사회주의에서는 기업 간, 지역 간, 노동자 간 빈부격차의 확대와 민족 간 대립이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알바니아인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코소보 메트비아 자치구와 크로아티아 공화국 등에서 민족대립이 더 극심하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68년에는 코소보 내 자치구에서의 시위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71년 크로아티아에서는 '크로아티아의 UN가입을!, 크로아티아 군 창설을!'(같은 책, P.256.)과 같은 민족주의적 구호를 내건 시위가 격렬하게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모순은 1980년대를 전후로 더욱 극심해지면서 이 때에는 수많은 기업의 파산과 130대 기업이 매상고의 70.1와 48.3%의 고용을 차지하는 독점의 심화 현상이 나타나고, 2%대의 낮은 성장과 13%-14%의 실업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사기와 뇌물 등 경제범죄도 증가했다. 또한 유고 시장 사회주의는 외채도 증가하기 시작하여 제국주의 국가에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1981년 외채규모는 201억 달러에 달해 이자 지불액만 해도 20억불에 달했다. 이러한 외채문제는 비단 유고뿐만 아니라 시장주의 개혁을 강화하고 있는 동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났다. 시장주의 개혁을 강화하고 있었던 소련, 중국도 마찬가지로 기업 파산의 증대 등 자본주의적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에 시장법칙을 받아들임으로써 경제에 활성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 개혁을 시도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주된 논리이다. 이러한 계획적 상품경제가 만병통치약이 아닌 사실은 1987년 소련 기업소간 상호결제 미납금이 190억 루블이나 되었고, 중국에서도 1986년 손실을 본 기업소들의 수는 1985년 대비 40%나 증

가하였다. 즉 확대된 상품시장에서 투자와 가격경쟁이 치열하게 되어 파산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같은 책, P.67.)

유고 시장사회주의 내에서 자본주의 모순이 첨예하게 나타나자 유고 내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게 되었다. 1982년 6월 유고공산당은 제12차 당 대회를 소집하고, 1984년에는 21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세워졌는데, 이 위원회는 1985년 7월에 중요한 문건인 <사회주의 자치정치체제 운영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하 약칭 <분석>)을 완성하였다.

"<분석>은 유고공산당 12차 당 대회 관점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면서, 일부세력들이 연방국가주의를 지향하는 중앙집권주의를 반대하였기 때문에 공화국과 자치성의 국가주의·지방주의·분위주의가 창궐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잘못된 경향에 기댄 국부적 이익의 옹호자들이 출현하고 <분석>은 신지도부의 그간 사회주의 자치이론의 실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총체적 자체반성의 산물이다. <분석>은 초보적으로 자치제도 자체의 결함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국가체계의 법제건설·유고공산당의 '연방화'경향'대표단체' 등 방면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한편, 자치이론 자체에 국가역할을 부정하는 사상이 존재함을 초보적으로 어렵게나마 인식하였다."(김정호 북경 인민대, 「연합노동의 좌절, 연방의 해체」, 레디앙 연재기사)

1986년 6월에 개최된 유고 공산주의 동맹 제13차 대회에서도 시장사회주의 조치의 실시로 인해 나타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1987년 1월, 연방 주식단은 연방의회에 <유고사회주의연방공화국헌법의 수정에 착수할 것에 관한 건의>를 제출하고, 1988년 11월 연방의회에서 이 초안이 통과되었다.(같은 글)

그러나 유고 내에서 중앙 집중성을 강화하는 이러한 조치들은 이미 각 공화국과 기업 단위에 분산화가 강화되어 있었고, 당의 주도적 역할을 상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고 사회주의 내에서 나타나는 문제

들을 해결하지 못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때가 늦었을 뿐만 아니라 유고 공산주의 동맹과 국가와의 당정 분리 원칙을 계속 유지하는 불철저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이후 부르주아적 다당제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고 공산주의 동맹은 해체하기 시작했고 1989년 하반기부터 1990년 2월에 걸쳐 유고에는 약 250여 개의 각종 부르주아적 정당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또한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이 심화됨으로써 파업과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민족분규가 더욱 더 심각하게 발생했다. 결국 1990년에는 보스니아와 마케도니아에서 반대당이 집권하면서 유고를 ‘느슨한 연방’ 혹은 ‘주권국가연방’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주장이 세르비아 공화국의 반대에 부딪치자 보스니아와 마케도니아 두 공화국에서는 국민투표를 통해 주권국가임을 선포하고 1991년 6월 25일 독립을 선포하였다.(같은 글) 뿐만 아니라 91년 6월에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역시 유고연방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하면서 유고 연방은 해체되었다.

3. 유고 시장 사회주의의 교훈

유고 시장 사회주의의 경험은 사회주의 붕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 그런데도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는 유고 시장 사회주의의 경험에서 사회주의 붕괴의 교훈을 찾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유고 시장사회주의는 당과 국가의 분리, 당의 전위성과 지도성의 상실, 중앙집중 계획의 약화와 자본주의 시장의 강화 등으로 인해 붕괴했다. 소련의 경험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현실 사회주의를 ‘국가 사회주의’로 보는 세력들은 유고의 경험을 무시하고 당과 국가의 일체화에서 사회주의 붕괴의 원인을 찾고 있다. 이들은 사회주의의 붕괴를 붕괴된 흩더미 속에서 찾는 어처구니없는 뻔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을 여전히 시장 사회주의의 모범적 사례로 간주하는 세력들이나

남미 볼리비아의 노동자 자주관리 경험을 ‘21세기 사회주의’라고 찬양하는 세력들도 마찬가지다. 또한 소련 등 사회주의의 붕괴 원인을 ‘스탈린주의 중앙집중 계획’으로 보고, 분산화 된 계획, 민주적 계획을 주장하는 국가자본주의 진영을 비롯한 많은 사회주의자 진영 역시 마찬가지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적 계획, 노동자의 자주관리, 자치, 분권화 등을 사회주의 계획의 원리로 포장하는 세력들은 사실상 무정부주의와 수정주의를 은폐하는 기회주의에 불과하다.

사회주의 경제는 합리적, 과학적 계획 아래 기업 간,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고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켜 인민의 물질적, 정신적, 문화적 풍요로움을 만들어 내는 것을 근본법칙으로 한다. 그런데 유고 시장 사회주의는 중앙계획을 분산화 시키고, 생산과 분배 등에 있어서 기업에 광범위한 자치를 부여하여 자본주의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윤 중심으로 기업이 작동되었다. 이윤 중심의 노동자 자주관리는 생산과 분배의 불균형으로 침체를 낳고, 기업 간, 지역 간, 민족 간 이기주의와 분열주의를 낳았다. 또한 노동자들의 자기결정권은 구호와 다르게 노동의 소외와 참여의 배제를 낳았을 뿐이다.



영국 노동당처럼 전통적인 사민주의가 자본주의 내에서 시장과 계획을 조화롭게 하려는 수정주의를 추구한다면, 시장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내에서 시장과 계획의 조화를 추구하는 사회주의 내의 수정주의이다. 이러한 자본주의 수정주의와 사회주의 수정주의는 모두 수정주의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사회주의로 가는 ‘제3의 길’도 없지만, 사회주의 발전의 ‘제3의 길’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생산의 조직화는 각 나라의 문화적, 경제적, 역사적 발전수준에 따라 특수성을 갖지만 이 특수성은 사회주의 혁명과 법칙의 보편

성과 원칙을 확고하게 부여잡을 때만이 그 의미를 잃지 않는다.

“하나의 나라, 두 개의 알파벳, 세 개의 종교, 네 개의 언어, 다섯 개의 공화국”로 표현되는 유고 사회주의는 시장 사회주의의 내적 모순에 의해 산산조각 나 버렸다. 이러한 유고 시장 사회주의의 붕괴는 사회주의 원리의 강화에 의해서만 민족 내부의 모순을 해결하고 통합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유고 사회주의의 붕괴에서 우리는 전위당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사회주의 생산을 조직하는데 있어서도 여전히 전위당의 역할은 무엇 보다 중요하다. 전위당은 당과 국가, 당과 대중조직과의 결합방식을 제대로 찾아야 한다. 당은 국가와 대중조직과 강력하게 결합하되 여전히 전위적 생명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 전위당은 각종의 국가기구와 대중조직 속에서 지도력을 형성하고 전체 인민의 계급의식을 강화하고 지도력을 발휘하는 기관차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당과 국가, 당과 대중조직과의 결합이 확고하지 못하고, 분리된다면 당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고립되어 관료화 되거나 대중적 영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에서 국가는 소비에트형 대중국가이다. 당은 소비에트 국가기구와 노동조합, 당내의 관료주의와의 투쟁을 가차 없이 전개해야 한다. 관료주의와의 투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맑스와 레닌이 강조한 것처럼, 사상투쟁, 사회주의 문화혁명과 더불어 관료주의가 비집고 들어설 수 있는 물질적 근거를 없애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들의 계급의식의 상승과 기술적, 행정적 수준이 고양되어 국가 기구에서 인민들의 참여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져서 명실상부한 대중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 생산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대립을 극복하여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의 물질적 근거를 없애야 한다.

국가 기구 내에서 관료들은 소비에트의 근간인 노동자와 농민 대중들의 직접적인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며, 대중들 다수의 요구에

의해 언제든지 소환이 가능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소비에트에 대한 지도성의 발휘는 단지 당에 의해 위로부터 임명되는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이 소비에트 국가 기구나 노동조합 같은 대중기구 내에서 당은 전위적, 지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가기구와 대중기구 내에서 활동하는 전위당의 세포들은 오로지 생산을 조직하는 능력과 헌신성, 앞선 계급의식으로 지도력을 행사해야 한다. 이러한 지도력을 직책이나 당원증으로 대체하려 한다면 전위당은 관료주의 세력의 집결지로 타락하게 될 것이다. 전위당의 세포들은 노동자 계급 내에서 지도성을 인정받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당의 계급성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할 것이다.

생산력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은 사회주의에서도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임금 차등과 보상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사업장, 장시간 노동, 기술이 높은 노동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보다 높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에 반하지 않고 생산의 조직화에 있어서 탁월한 행정적, 생산적 능력을 발휘하는 경영자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나 기술, 경영자들이 당원인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야 한다. 전위당의 세포들이 특권화 되고 보수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위, 기술적 능력과 상관없이 노동자의 평균임금 이상에 대해서는 당에 반납하고 평균적인 삶의 수준 이상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당원은 노동자 계급과 인민들로부터의 사회적 존경이 아닌 다른 물질적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주의에서 노동조합은 국가의 경제적 조직화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자주적이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은 사회주의에서도 여전히 노동조합 내부의 조합원들의 물질적, 사회적 위치를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회주의에서 노동조합은 전체 사회의 발전을 위해 투쟁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개별적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협소한 이해에 사로잡힐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당은 노동조합 내에서 지도적 위치

를 차지하여 노동조합이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되 이것이 전체 사회의 이해와 대립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역시 결론은 전위당이다.

맑스주의 방법론과 원리를 포기한 사노련의 국가자본주의 비판 - 쏘련사회에 대한 전면 분석에 앞서

이 글은 쏘련사회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이 아니다. 우리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사노련과 국가자본주의론의 방법과 몰과학성, 종파주의적 입장을 비판하고, 우리가 쏘련 사회에 접근하는 다른 방식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역사를 관념적으로, 종파주의적으로 단순화 하지 않고 실사구시하는, 변증법적 지양(양)의 관점으로 쏘련 사회의 성과와 오류, 한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사노련은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의 <우리의 입장>을 논쟁적으로 해설한다!(4) 쏘련, 북한 등의 스탈린주의 국가 체제에 대한 태도”를 통해 주로 노정협(4)의 입장을 비판했다. 그런데 사노련은 직접 인용부호를 가지고 우리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자의적으로 문장을 구성했다. 사노련의 인용이 우리의 입장을 근본적으로 왜곡하지는 않았으나 이런 식의 자의적 구성은 우리 내용을 단순화 시킬 수 있다.

1. 변증법적 방법론을 통한 쏘련 사회 분석

우리는 쏘련 사회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맑스레닌주의의 변증법적 철학의 방법을 취하려고 한다. 레닌은 변증법적 부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의심의 여지없이 변증법은 부정의 요소를 그것도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포함하고 있지만, 변증법에서 특징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노골적인 부정, 무익한 부정, 회의적인 부정, 동요, 의혹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

을 보존하는, 즉 어떠한 동요도 없는, 어떠한 절충주의도 없는, 연관의 계기로서의, 발전의 계기로서의 부정인 것이다.(레닌, 철학노트)

레닌은 변증법적 부정은 핵심을 보존하면서 발전의 계기로서의 부정이라고 했다. 그것은 변증법적 지양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실 사회주의 분석에 있어서 전면 부정하는 태도는 자칫하면 청산주의를 낳을 수 있다. 국가자본주의론처럼 쏘련이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자본주의 사회의 대중들에게 새겨져 있는 사회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현실 사회주의를 있는 그대로 분석하면서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혁명의 현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때로 큰 퇴보를 겪지 않는, 항상 순조롭고 규칙적으로 전진해 가는 세계사를 생각하는 것은 비변증법적이고 비과학적이며 이론적으로도 옳지 않다.(레닌, 유니우스 팜플렛에 대하여)

역사는 발전한다. 하지만 일직선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역사는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면서 지그재그로 발전한다. 쏘련 사회주의의 패배는 역사에서 큰 퇴보지만 자본주의 모순이 해결되지 못하는 역사의 새로운 전진은 계속될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해야 하는 사회주의의 선구자들의 경험이나 시행착오를 통해 더욱 더 확실한 사회주의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순수’한 사회주의 혁명을 고대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기다려도 결코 혁명을 만나지 못할 것(레닌, 자결권에 관한 토론의 총괄)

‘순수’한 현상이라는 것은 자연계에도 사회에서 없으며, 또 있을 수도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름아닌 바로 맑스의 변증법이 가르치고 있다. 이 변증법은 순수한 개념 자체가 대상을 그 총체에서 구석구석

까지 파악하지 않는 인간의 인식이 얼마나 협소하고 일면적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레닌, 제2인터내셔널의 붕괴)

국가자본주의론자들은 가상으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혁명을 이야기 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순수한 혁명의 잣대를 가지고 현실이 이 잣대에 들어맞지 않으면 국가자본주의라고 한다. 지극히 관념적이다. 그러나 러시아 혁명은 진공 속에서 건설된 것이 아니라 러시아 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후진성, 낮은 교육수준, 내전과 생산력의 파괴, 제국주의의 포위 공격이라는 극단적인 조건 속에서 건설됐다. 러시아 혁명은 이러한 현실의 모순 속에서 건설되고 발전해 나갔다.

“러시아를 제외한 어느 나라에서도 노동자 권력이 수립되어 사회주의로 전진한 경우는 없다! 노동자 권력의 외피를 들렀던 사회 체제는 스탈린주의 체제의 소부르주아 판에 불과했다. 동양의 소부르주아 혁명정부는 국가자본주의 관료 체제로 전화해나갔다! (사노련, 사회주의 노동자연합의 <우리의 입장>을 논쟁적으로 해설한다!(4) 쏘련, 북한 등의 스탈린주의 국가 체제에 대한 태도)

모택동, 김일성 소부르주아 민족주의 정권의 운명은 소부르주아 계급의 역사적 운명을 반영했다. 급진적으로 반(反)봉건 농업 혁명과 민족 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즉 부르주아 혁명의 역사적 과제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이들 소부르주아 세력은 역사적 진보를 반영했다. 이들의 역사적 역할은 대단히 독특한 것이었다.(사노련, 같은 글)

국가자본주의 사노련에게는 중국, 북한, 베트남, 쿠바 등은 순수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다. 사노련은 농촌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로 진출하여 혁명을 한 중국이나 식민지 국가인 북한은 ‘순수’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쿠바나 베트남도 소부르주아 국가자본주의 정권의 수립에 불과한 것이다.

각 나라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할 때 어느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구체적인 역사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레닌, 각국 공산당. 노동자당 대표자회의 문서집)

레닌의 말처럼 이들 나라의 혁명이 '순수'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었던 것은, 저발전과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에서의 혁명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제 중국 혁명 과정에서 혁명노선을 둘러싸고 바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과 신민주주의 혁명을 거쳐서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노선들이 치열하게 대립했다. 혁명의 주축 세력도 처음에는 도시 노동자계급에서 출발해서 잇따른 봉기의 실패로 농촌으로 거점이 옮겨졌다가 혁명 직전에는 다시 도시로 거점이 옮겨지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제한된 조건 속에서 각 나라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혁명을 '순수'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부르주아 혁명에서 국가자본주의로 전화해갔다는 사노련의 주장은 역사를 단순화, 도식화하여 구체적 조건 속에서 구체적 분석을 회피하는 것이다.

사노련은 이들 국가들이 단지 소부르주아 정권이기 때문에 역사적 진보를 반영했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부르주아 혁명의 역사적 과제를 담당하면서 부르주아의 계급의 지위를 떠맡기 시작했다고 하고 있다.

그들은 부르주아 계급의 지위를 떠맡기 시작했다. 다만 이 사회 체제는 통상적인 부르주아 혁명을 통해 창출된 자본주의 체제와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마치 노동자 국가를 내부에서부터 타도하고 등장한 스탈린주의 반혁명이 창출한 체제가 그랬듯이 말이다.(사노련, 같은 글)

이것은 봉건 잔재를 철폐하는 것이기는 했지만, 노동해방 사회 건설의 첫걸음이 아니라 국가자본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였다.(사노련, 같은 글)

그런데 과연 역사상 부르주아 혁명의 역사적 과제를 담당하는 부르주아 계급이 중국, 북한, 쿠바, 베트남에서 이루어진 혁명적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가? 이들 국가들은 봉건적 소유관계를 철폐했을 뿐만 아니라 지주 토지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소작세의 폐지로부터 시작해서 집산화와 국유화로 나아갔다. 뿐만 아니라 무상의료, 무상주택, 무상교육 조치를 실시했다. 다만 역사적으로 제한된 생산력 발전의 낮은 수준 때문에 그 질이 그다지 높지 않았을 뿐이다.

역사에서 부르주아에 의한 부르주아 혁명은 봉건적 소유관계를 철폐했으나 이는 자본주의적 소유관계를 창출하기 위해서였다. 부르주아 혁명에서 가장 급진적이었던 자코뱅 정부조차도 사적 소유권은 철저히 보호했다. 부르주아 계급은 토지를 소농에게 무상분배 하기는커녕 공유지의 농민들을 강제로 내쫓고 농민들의 노동력을 공장에서 착취했다.

레닌 당시의 불세비키의 농민에 대한 정책도 바로 지주, 귀족, 교회 재산을 무상몰수해서 무상분배 하는 것이었다. 러시아에서 농민은 곧바로 집산화해야 한다는 로자의 주장에 대해 레닌은 농민과의 동맹을 파괴하는 모험주의라고 비판했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1930년대 이후 옛 소련, 동유럽, 북한, 중화인민공화국 등의 사회체제를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반(反)노동자계급적 사회체제로, 노동자계급이 타도해야 할 반동체제로 규정한다.(사노련, 같은 글)

1930년대 이후 중국, 북한, 쿠바 등이 타도해야 할 반동적 국가라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체제가 된다. 먼저 사노련의 이 주장은 이 사회가 노동자 국가가 아니지만 부르주아 혁명의 과제를 담당할 때는 진보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자신의 주장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진보적인 체제를 반동으로 규정하고 타도하겠다는 세력이야말로 역

사의 진보를 반대하는 반동세력인 것이다.

사노련은 역사적으로 진보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체제 또는 국가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반동체제로 전면 부정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이 어떠한 모순을 겪으면서 긍정성을 탈각해갔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부정적인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모순 속에 변화, 발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 발전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후퇴와 퇴보라는 부정적인 부분이 더욱 드러날 수도 있다.

이러한 역사발전의 변증법적 과정을 보지 못하고 이들 국가들을 일면적으로 반동체제로 규정해버리면 이 주장은 반공이데올로기로 무장하고 현실 사회주의를 포위해오던 제국주의의 입장과 같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IS(국제사회주의자)는 제국주의 미국이나 베트남이나 다 반동체제이기 때문에 베트남 전쟁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사노련의 입장대로라면 한국내전에서 사노련은 제국주의 반동과 북한 반동체제의 싸움에서 중립을 지킬 수밖에 없다. 지극히 우익적인 입장이다. 미제국주의에 맞서서 북이 자위권으로 핵무기를 소유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노련의 입장도 여기서 나왔다.

2. 경제적 토대 분석을 바탕으로 상부구조 분석하는 유물론적 방법론

맑스주의는 경제적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짓는다는 유물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물론 상부구조는 상대적 자립성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 토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하지만 근본적 규정력은 경제적 토대에 있다.

쏘련사회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쏘련사회 내에서 내부의 정치투쟁을 낳았던 사실들에 대해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경제분석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전시경제 체제에서 네프로의 이행, 농업과 중공업 발전을 둘러싼 논쟁, 농촌의 생산물과 도시 생산물의 가격격차

로 문제를 낳은 협상가격차 위기 등의 정책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을 중심으로 이러한 제한적 조건을 만든 내전과 제국주의의 포위 공격 등의 정치적 조건을 살펴보아야 한다.

전시경제 체제는 혁명 이후에 내전과 제국주의의 포위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강요되었다. 전시경제 체제는 말 그대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 사회의 생산과 분배가 이뤄지는 체제를 의미한다. 노동자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생산, 분배, 유통에 대한 극도의 국가통제가 진행된다. 당시 전시경제 체제는 농민으로부터 농업생산물을 공급받아서 군수품과 식량을 공급하는 전쟁을 수행하였고, 노동자에 대한 토요 무상노동이 고무되었다.

이러한 전시경제체제는 사회주의 이행의 고유한 법칙도 아니었고 오로지 내전에서의 승리를 위한 목표로 집중됐다. 내전으로 인해 산업시설은 파괴되고, 군대로의 집중으로 산업은 파행적으로 되었다. 기아와 궁핍이 전 사회에 만연했다. 노동자와 농민의 불만이 급속도로 늘어났다.

내전에서의 승리 이후 러시아는 신경제정책(네프)으로 전환했다. 신경제 정책은 은행, 대공업 및 해외무역은 국유화를 유지하면서 나머지 분야에서 개인 기업의 허용, 이윤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붕괴 직전인 농업과 공업을 성장시키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지주와 생산관료에 대한 일정 정도의 양보책이 취해졌다. 신경제정책은 붕괴된 러시아 산업을 부흥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 대가로 공업에 있어서 자본주의 소유관계가 부활되기 시작하고, 투기꾼, 브로커 같은 기생적인 세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농업에서는 자유시장의 부활로 부농층이(쿨락)이 생겨났다. 노동자계급 내부에서도 성과급제의 부활로 노동자 내부가 분열됐다. 특히 농업 생산물과 공업생산물 사이에 심각한 가격격차가 발생해서 협상가격차 위기가 만들어 졌다.

이러한 전시공산주의 경제정책의 향방을 둘러싸고 볼셰비키 내부는 노동조합의 군사화 문제로 레닌과 부하린, 트로츠키가 격심한 논쟁을 벌였다. 신경제 정책을 둘러싸고도 레닌과 트로츠키는 논란을 벌였다.

레닌 사후에는 생산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생산수단을 만들어내기 위한 중공업에 집중할 것인가? 농민과의 동맹을 염두에 두고 농업발전에 집중하느냐를 둘러싸고 격렬한 권력내부의 투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렇게 볼셰비키 내부는 개인의 권력욕 보다는 이러한 경제정책을 둘러싼 격렬한 내부 투쟁이 진행됐다.

트로츠키와 트로츠키 파인 프레오브라젠스키는 우선적으로 중공업에 집중을 해서 생산기반을 만들어 내고 이것을 통해 농촌에 공업제품을 제대로 공급하고 농촌으로부터 도시 노동자들은 식량을 공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부하린은 농촌의 우선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이 산업발전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농민과의 동맹을 통해 신경제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농민들에게 부자가 되라고 외쳤다. 이러한 논란에서 스탈린은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스탈린은 트로츠키를 권력투쟁에서 밀어낸 뒤 트로츠키와 트로츠키 파인 프레오브라젠스키가 주장하는 초공업화 정책, 농민 집산화 정책을 취하게 된다.

스탈린은 초공업화 정책과 농촌의 집산화에서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몰아갔다. 수치상으로 농촌에서의 집산화 정책은 성공을 거두는 듯 싶었다. 하지만 농민 내부에서의 강압적인 형태의 집산화에 대한 반발이 극심했다. 스탈린은 농민이 이제는 집산화를 원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집산화를 밀어붙였는데 이제 스스로도 '성공에 취하여'라는 글을 발표하여 이러한 정책의 모순을 인정하고 집산화 정책을 완화하고 자율적 조치를 취했다. 그러자 58%대에 이었던 집산화 비율이 23%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스탈린은 이후 계속적으로 집산화 정책을 강화하여 1937년에는 93.5%나 집산화 되었다.

지금까지의 대략적으로 서술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볼셰비키 내부의 투쟁의 전 과정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후르시 초프는 스탈린 사후 스탈린의 개인숭배를 비판했다. 그런데 이 비판은 스탈린 시대에 대한 온전한 비판과 평가가 아니라 개인의 권력욕 때문

에 모든 일이 빚어진 것이라는 식으로 역사를 단순화 한다. 이는 쏘련 사회 구성체에 대한 진지하고 올바른 접근을 막고 개인의 문제, 개인 간의 권력다툼이 독재의 원인이라는 부르주아 역사관이다.

그들 모두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은 10월 혁명이 수립된 노동자 국가와 스탈린주의 반혁명이 만들어낸 '관료 체제' 사이에는 '노동자계급의 피의 강물'이 흐른다는 사실이다. 이 '피의 강물' - 노동자 권력을 국가관료들의 권력으로 바꿔냈던 반혁명 - 을 진지하게 검토해야만 한다.

이것들은 노동자 국가를 파괴하고 국가 관료층의 지배를 수립했던 "명백한 반혁명"이다.

사노련은 1928년을 쏘련에서 반혁명이 이뤄져서 쏘련은 국가자본주의 사회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분석은 비약일뿐더러 과학적이지 못하다. 중공업의 집중적 발전과 농촌에서의 대대적인 집산화처럼 사회주의 형식이 훨씬 강화됐는데 국가자본주의 사회로 변모한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사노련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국유화 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국유화 자체가 사회주의 정책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한다.

물론 생산수단의 국유화는 사회주의의 형식이다. 그러나 그것은 주요한 사회주의 형식이다.

그런데 자본주의에서 국유화는 자본주의 초기에 독점자본이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국가가 주된 자본축적의 주체로 나설 때나, 공황으로 파산한 사기업을 국가가 매입해서 국유화하거나, 파시즘처럼 전시체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민주의 정부에 의해서 일부 산업에 대한 국유화가 이뤄지기도 한다. 파시즘 하에서 국유화 비율이 높지만 자본주의에서 모든 국유화는 사적소유 체제를 인정하면서 사적 독점자본을 위해서 존재한다. 국가는 사적자본이 성장하거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사유화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자본주의에서 국유화와 사회주의에서 국유화는 분명히 다르다. 다만 사회주의에서는 국유화 형식만 아니라 그 국가에서 노동자가 차지하는 위치, 노동자 참여(소비에

트 같은 국가기구, 산업생산 계획과 분배기구 등에서의 노동자 대표성)와 민주주의의 보장정도, 관료주의에 대한 제도적, 문화적 제한 정도(관료의 노동자평균임금, 직선제나 소환제 등 통제장치가 중요하다.)가 실질적으로 중요하다.

중공업 발전 정책과 농업 집산화는 혁명 이후 볼셰비키 내에서 끊임없이 그 방식을 둘러싸고 첨예한 논란을 벌이던 경제정책이었다. 물론 그러한 정책의 추구 과정에서의 조급성, 관료주의의 문제를 가지고 비판을 한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러시아 사회구성체가 국가자본주의로 변했다는 주장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러한 정책을 취하는데 노동자농민의 희생이 있었다면 누가 정책을 취하더라도 불가피한 조건이었는지, 아니면 관료들을 위해 노동자농민이 희생된 것인지를 정확하게 살펴야 한다. 후자라면 심각하게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사노련은 북한의 천리마 운동 같은 생산장려운동을 노동자에 대한 착취증대의 근거로 사용하는데 레닌도 내전 당시에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테일러주의와 공산주의적 토요노동, 성과급제를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의 생산장려운동도 그것의 추진방식이 어떠했든 당시 경제적 조건 속에서 강요받은 측면이 크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이 있다고 그것을 자본주의에서의 자본축적을 위한 착취라 할 수는 없다. 자본주의에서 착취는 자본 간 경쟁에서 승리하고 자본의 성장을 위한 것이다. 결국 사노련이 말하는 ‘노동자 계급의 피의 강물’이라는 문학적 수사, 분노가 쏘련사회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대체하지 못한다.



3. 자본론을 통해 인식하는 국가자본주의론

사노련은 쏘련이 국가자본주의라는 선협 하에 구체적이고 풍부한 현

실을 꿰어 맞추려 한다. 사노련은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쏘련이 국가자본주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노련은 쏘련사회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맑스주의의 방법론과 개념을 철저하게 무시한다.

맑스는 추상에서 구체로 상향하는 방법론을 통해 자본주의의 경제적 작동법칙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들어간다. 이를 위해 맑스는 자본주의 체제의 기본적인 세포인 상품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출발해서 가치, 교환가치 등의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해서 구체적인 자본주의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들어간다. 그런데 맑스주의 철학에서 추상은 과학적, 이론적 연구를 위해서 사물의 한 특성을 분리, 추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상은 현실과 무관한 순전히 가상의 분석이 아니라 실제적인 대상에 대한 사실의 분석이다. 따라서 자본론은 자본주의에 대한 원리적 분석인 동시에 구체적인 분석이기도 하다. 그런데 사노련은 쏘련이 국가자본주의라고 하면서 자본주의 분석에 필수적인 노동력, 상품, 시장, 자본 간 경쟁과 독점, 잉여가치, 특별잉여가치 등의 개념을 사용하지를 거부한다.

노정협을 비롯한 혁명적 진영의 일부는 “맑스의 ‘자본론’에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항의한다. 100% 엄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당연하다. 맑스의 “자본론”은 통상적인 자본주의 체제 말고는 존재하지 않았던 특정한 역사적 시기를 분석했다. 우리가 “자본론”으로부터 취해야 할 것은 “혁명적이고도 과학적인 방법론”,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다. 이것은 맑스가 연구할 수도, 분석할 수도, 경험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역사적 시기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맑스주의자들의 역사적이고도 구체적인 임무이다. 노정협이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점이다.

맑스주의에 충실하고자 하는 의도는 물론 좋은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맑스주의는 교조주의를 배격하고, 그 자리에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접근”을 대체시킨다. “자본론”을 쓰던 당시 맑스는 “관료집단의 반혁명과 그것을 통해 수립되는 국가 관료들의 지배 체제” 및 “소부르주아 혁명 정부와 이 정부의 부르주아 관료 체제로의 진화”를 경험할 수도, 예상할 수도 없었다. 이것은 맑스의 책임이 아니다. 이것은 아무리 뛰어난 이론가도 주어진 역사적 시기를 뛰어넘을 수 없음을, 그리고 이론이란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던져진 질문에 대한 대답임을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다.(사노련)

사노련은 자본론을 쓰던 당시 맑스는 관료지배체제의 성격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한다. 자본론은 자본주의 사회의 운동법칙에 대한 저술이다. 만약 사노련의 주장대로 쏘련이 자본주의 국가라면 자본론의 이론에 따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쏘련사회가 맑스가 “연구할 수도, 분석할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새로운 역사적 시기”라면 쏘련사회는 국가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괴물 같은 제3의 사회구성체가 될 것이다.

사노련은 국가자본주의라는 교조와 분파주의에 사로잡혀 맑스의 자본론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훼손하고 있다. 사노련은 맑스의 자본론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 외에는 분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초기 영국의 상황을 바탕으로 자본론을 작성한 맑스는 ‘역사적 시기를 뛰어넘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맑스주의 이론은 국가자본주의라는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던져진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단 말인가? 또한 독점이 존재하는 현대자본주의 즉 제국주의 시대의 자본주의에 대해서 맑스의 자본론을 가지고는 분석할 수 없다는 말인가? 이런 식의 사노련 주장대로라면 자본론은 영국의 초기 자본주의의 ‘역사적 시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불과한 것이 되고 맑스는 경험주의자로 전락하고 만다. 사노련의 의도와 상관없이 맑스주의에 대한 적대자들이 맑스를 산업혁명 초기의 극단적인 착취가 존재했던 시기에만 들어맞는 주장이라고 경험주의적으로 왜곡하는 것과 같게 된다.

맑스의 자본론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자본의 본질도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사노련의 주장대로라면 자본주의의 노동자에 대한 착취는 구체적인 현실에서 증명될 수 없는 단지 추상의 수준에서 ‘일반적인 규정’일 뿐이게 된다.

사노련의 이 주장은 맑스의 자본론 1권과 3권을 비교하면서 상품의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다, 총가치와 가격이 일치한다는 실증적 증명을 대라면서 노동가치론 또는 가치법칙을 전면 부정했던 부르주아 경제학자인 뵘 바베르크의 주장과 유사해진다. 베른슈타인 또한 맑스의 노동가치론이 ‘순전히 추상적인 개념’이라며 자본의 노동자에 대한 실제적인 착취를 거부하고 수정주의 이론을 전개했다. 사노련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일반적 규정’과 베른슈타인의 ‘순전히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규정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가?

사노련의 자본론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쏘련사회에 대해서 맑스의 관점대로 가치법칙이 과연 작동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려는 부정직한 태도에서 비롯됐다. 물론 쏘련사회에서 가치법칙은 완전히 사라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상품관계를 폐절했다고 해도, 농민이나 자영업자 등 소소유자가 생산하고 교환하는 상품이 완전히 없어지는 않았기 때문에 가치법칙이 완전히 사라지는 않았다. 하지만 쏘련에서는 자본주의처럼 가치법칙이 한 사회를 규정하는 지배적 법칙이 되지는 않는다.

쏘련에서의 상품의 생산은 전사회적 생산의 일부로 사전에 계획돼서 생산이 됐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의 상품생산은 한 기업에서는 계획이 이루어지지만 전체사회에서는 무정부적 생산이 이뤄지면서 가치법칙에 의해 생산이 조정된다. 가령 가치보다 가격이 높을 때는 다른 생산부분에서 더 자본투자를 해서 생산이 늘어나고 반대일 때는 생산이 줄어든다. 그런데 가치 보다 가격이 높아서 생산이 더 늘어나게 되면 수요 보다 생산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본은 또 다시 다른 생산분야로 옮겨가게 된다. 이러한 자본주의 생산

을 규제하는 법칙이 가치법칙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의 보이지 않는 힘인 가치법칙에 의한 생산의 조정은 조화로운 관계가 아니라 가치법칙의 작동 과정에서 무정부적 과잉생산과 과잉축적 자본주의 모순과 공황을 낳는다. 자본주의는 이러한 격렬한 모순을 통해 새로운 생산을 개시한다.

토니 클리프는 쏘련사회만을 놓고 본다면 가치법칙이 작동하지 않지만 제국주의 국가와의 무기경쟁에 의해 가치법칙이 작동한다고 한다. (토니 클리프의 국가자본주의론에 대한 전면적 비판은 여기서 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이 주장은 상품은 타인을 위한 사용가치 즉 교환가치를 위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맑스주의 상품법칙에 의해 간단히 부정된다. 쏘련에서 무기생산은 일부 판매되기도 하지만 주로 대부분 제국주의 국가로부터의 공격을 막기 위한 비생산적 소비였다.

자본주의 생산의 목적은 잉여가치를 위한 생산이다. 이를 위해 자본가는 노동자를 극심하게 착취하려 한다. 또한 자본가 간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새로운 생산방법과 자동화, 기계화된 혁신적인 방법을 도입한다. 왜냐하면 자본은 다른 자본가에 비해 혁신적인 생산방법과 생산력을 도입해서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 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생산물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만 들어지는 가치로 생산물을 판매한다. 여기서 자본가는 특별 잉여가치를 누린다. 자본가 간의 격렬한 경쟁을 추동하는 힘도 이러한 특별잉여가치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경제법칙 때문이다.

그렇다면 쏘련에서 무기생산을 가지고 가치법칙이 작동했다고 할 수 있는가?와 과연 쏘련에서 관료가 잉여가치와 특별 잉여가치를 추구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만일 관료가 자본가라면 관료간의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을 상실한 관료의 파산이 이뤄지고 독점적 관료가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자본주의론의 주장대로 쏘련 사회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공장이었다면 관료간의 경쟁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다. 또한 그리고 관료적 위치와 지배가 상속을 통해 자식에게 넘어 갔는가?

이처럼 국가자본주의론은 맑스의 자본론의 관점에서 어느 것 하나 들어맞는 게 없다.

사노련은 이렇게 쏘련 사회주의가 맑스의 자본론의 분석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간단하게 증명되자 파산한 국가자본주의론을 지켜내기 위해 맑스의 자본론을 가지고 쏘련 사회가 자본주의인지 아닌지를 분석할 수 없다고 한다. 더 나아가 맑스의 자본론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자본론을 가지고는 자본주의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고 하여 맑스를 왜곡한다. 우리는 맑스주의를 자처하는 사노련이 종파주의적인 국가자본주의론에 사로잡혀 맑스를 부정하게 된 현실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결국 사노련과 국가자본주의론자들은 맑스의 자본론인가 국가자본주의론인가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맑스주의는 자본주의의 원리적 이해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과학이다. 이것이 과연 교조주의인가? 이것을 교조주의라고 주장한다면 사노련은 이미 수정주의자가 된 것이다.

4. 쏘련사회 분석에 있어서의 좌편향적 무정부주의

유럽 프롤레타리아의 직접적이고 국가적인 지지가 없다면 러시아의 노동자 계급은 획득한 권력을 유지할 수도 없을 것이고, 또한 일시적인 지배권을 영속적인 사회주의적 독재로 전환시킬 수도 없을 것이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일순간도 의심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서구의 사회주의 혁명이 우리들로 하여금 노동자 계급의 일시적인 지배권을 직접 사회주의적 독재로 전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는 점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트로츠키, 평가와 전망)

유럽에서의 혁명의 전망은 구체적으로 독일이었다. 독일은 후발 자본주의 국가였지만 1920년대 당시에는 유럽에서 자본주의 산업이 가장 발전한 국가였다. 이러한 생산력이 가장 발전한 독일에서의 혁명은 유

럽 각국 자본주의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프롤레타리아를 격발시켜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전역으로 혁명의 불길을 전파했을 것이다.

그런데 유럽에서의 혁명의 기대가 송두리째 무너졌을 때 혁명권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독일혁명은 1919년 제3인터내셔널 1차 대회 개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패배한 뒤 21년 이후에는 완전히 혁명의 가능성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다면 가능성 없는 세계혁명에 기대면서 일국의 사회주의를 자본가들한테 넘겨줘야 하는가? 레닌이나 심지어 스탈린조차도 처음에는 유럽에서의 혁명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스탈린도 1924년 4월에는 후진 농업국인 러시아가 유럽에서의 혁명의 성공 없이 일국에서 사회주의의 최후의 승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0월에는 대규모적인 공업화와 농민과의 동맹을 통해 농업을 협동조합화 하는 것으로 일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론은 1925년 12월 제14차 당대회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당내에서 스탈린의 입지는 확고해지고 트로츠키는 급속히 영향력을 상실하고 카메네프, 지노비예프와 3각동맹을 맺게 된다. 세계혁명의 가능성이 물 건너 간 상황에서의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고, 당시 대중들의 정서는 전쟁과 내전으로 피로도가 겹쳐있었기 때문이었다.

가능성 없는 세계혁명에 기대어 러시아혁명은 산화해야 하는가? 아니면 일국에서의 사회주의를 일궈가야 했는가? 하는 갈림길에서 사노련은 이렇게 말한다.

가장 결정적인 패배는 바로 러시아 볼셰비키 노동자당이 스탈린 관료집단에게 장악당해 버린 것이다. 만일 비록 혁명은 좌초했을지라도, 이당이 관료집단을 숙청해내고 노동계급 혁명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했다면, 그래서 러시아 혁명의 교훈들이 이 당에 의해 전수되었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다. 단지 세계 혁명의 패배에 따른 역관계의 불리함 때문에 러시아 혁명 또한 패배를 면하지 못했을 뿐, 혁명의

전통, 사회주의 혁명당의 전통은 그대로 살아남았을 것이다.

사노련의 이 주장은 볼셰비키가 관료주의에 빠지지 않고 일국사회주의가 아닌 국제주의 정신을 사수했다면 세계 혁명의 패배에 따른 역관계의 불리함 때문에 러시아 혁명이 패배할지라도 혁명의 전통, 사회주의 혁명당의 전통은 그대로 살아남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 주장은 세계혁명이 실패하면 러시아 혁명의 패배는 필연적이라는 숙명주의, 패배주의를 안고 있다. 러시아 혁명의 패배는 혁명전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혁명에 대한 패배주의, 러시아에서의 자본주의 부활, 전 세계 자본주의의 기고만장한 승리를 낳는다.

쏘련이 일국에서 생존하고 뒤이어 중국혁명이 승리하면서 많은 식민지 국가가 해방되었다. 쏘련은 이후 엄청난 인민들이 희생되면서 독일 파시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혁명의 공포에 떨면서 쏘련을 무너뜨리기 위해 엄청난 반공주의 이데올로기와 선전을 하고 반소비에트 십자군 전쟁을 벌였다. 미국은 마셜플랜을 통해 유럽 지원도 유럽에서의 공산주의의 전파를 막고, 쏘련을 봉쇄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한편으로 제국주의 국가들은 자국 내에서의 혁명을 막기 위해서 복지국가 정책을 취했다. 반면 제국주의 국가들의 위협 앞에서 쏘련의 사회주의 건설은 심각하게 왜곡됐다.

일국에서의 사회주의는 스탈린이 대러시아 민족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세계혁명의 패배로 인해 강요된 것이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강요된 상황 속에서 만들어졌지만 일국사회주의는 일국사회주의다. 일국에서의 사회주의는 처음에는 승리할 수는 있지만 국제혁명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는 없다. 스탈린은 레닌도 일국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를 말했다고 하지만 레닌은 최종적인 승리를 말하지 않았다.

일국에서의 사회주의의 최종적인 승리를 더 나아가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건을 하나의 원칙으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각국에서의 사회주의자들은 일국에서의 사회주의의 존립과 강화를 위해 싸워

야 하지만 일국 사회주의는 세계혁명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투쟁해야 한다. 또한 자칫 일국으로의 고립조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민족주의 사상에 맞서 국제주의 사상과 국제적 노동자계급의 연대를 위해 부단하게 투쟁해야 한다. 그러나 세계혁명의 가능성이 당분간 없는 상황에서 일국에서의 사회주의는 필연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패배주의이자 청산주의다.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은 유행처럼 번지는 스탈린주의 비판이 물질적 조건을 중심으로 한 분석이 아니라 스탈린이 이러 저러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분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적 유물론을 거꾸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쏘련 사회주의의 승리와 패배의 경험으로부터 과학적 교훈을 얻지 못한다.

한국전쟁, 남북전쟁인가? 계급내전인가?

— 사노련 국가자본주의의 몰역사성과 몰계급성, 반동성

강요된 반공주의와 적극적으로 내면화된 반공주의

한국내전은 일본 제국주의의 폭압적인 식민지 통치와 이 식민지 통치로부터의 해방, 미제국주의 진주부터 시작된 새로운 지배 체제의 형성으로부터 출발한다. 일본 제국주의와 미국 제국주의에 의한 억압과 지배는 남한에서의 단독정부 수립, 한국내전과 분단을 낳았고, 이 분단체제는 이후 한국사회를 수십 년 동안 국가보안법과 각종 악법을 동원한 파시즘적, 병영적 군사독재와 반동체제로 만들었다. 군사독재가 물러난 지금에도 한국사회는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고, 반공주의가 여전히 전체 사회의 활력과 사상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다. 반공을 국시로 하는 한국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는 학문적 탄압뿐만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대중운동과 정치운동에 대한 악랄한 탄압, 조직 파괴, 반공교육 등 전 사회에 반공주의의 악령을 뒤집어씌웠다.

이러한 반공주의에 맞서서 수많은 민중들이 저항해 왔다. 그리고 수많은 진보적, 양심적 학자와 교사 등이 해방 이후 단절되고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로 세우려고 투쟁해 왔다. 이러한 투쟁의 성과로써 왜곡되고 굴절된 역사인식의 일부가 바로 세워졌다. 이 새로운 역사인식은 우익과 지배계급에 의해 날조된 역사 중 지극히 일부의 복원임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 조중동, 문화관광부 등 지배세력들은 좌편향된 교과서라고 난리를 치고 있다. 저들이 저렇게 난동을 피우는 것은, 지배계급의 학살에 의해 민중들의 피로 얼룩진 현대사가 단순히 흘러간 과거가 아니라 계급지배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훼손하고 국가권력의 폭압

적 본질을 폭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사의 왜곡은 지배계급에 의한 ‘계급투쟁의 연장’인 것이다.(노동자정치신문 제47호, 「4.3계주봉기, 여순봉기 60주년 과거사를 둘러싼 계급투쟁의 연장」)

그런데 이러한 왜곡된 역사인식과 반공주의가 지배계급에 의해 강요돼 왔다면 최근에는 운동진영 내에서 능동적으로 반공주의를 깊숙이 내면화하고 있다. 우익청산주의가 쏘련의 몰락 이후에 개량주의로 나타났다면 이들은 트로츠키주의라는 급진적 이름 뒤에 숨어 반소반공의 좌익 청산주의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우익 반공주의와 맞닿아 있다.

트로츠키주의 진영 특히 국가자본주의 세력들은 쏘련의 몰락에 대해 두 손을 들어 환영했다. 다함께, 사노련, 해방연대 등에서는 1930년대 이후 쏘련과 사회주의 체제를 표현상의 차이는 있어도 본질적으로 반동체제로 보고 있다. 사노련은 북핵문제(사실은 미제국주의의 북에 대한 고립말살 정책)에 대해 ‘지배자들 간 대결’이라며 중립적이거나 양비론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제국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반공주의자들의 핵확산금지본질의 본질은, 자국이 가진 핵 이외의 핵보유를 거부하는 핵독점의 패권적 논리에 다름 아니다. 사노련의 북핵실험에 대한 비난은 중립이 아니라 현실에서는 제국주의의 핵독점 논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 초기 IS(국제사회주의자들)의 입장 역시 지배자들 간의 전쟁이라는 이유로 중립을 취했다. 1930년 대 이후의 쏘련과 모든 사회주의 체제를 반동체제로 규정하는 사노련의 국가자본주의 입장에 의하면 한국전쟁은 ‘지배자들 간 전쟁’에 불과한 것이 된다.

현실의 치열한 쟁점과 역사적 격동기에 방관과 중립은 중립이 아니라 바로 제국주의와 지배계급의 편을 드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내전이라는 역사적 격동의 순간에 대해 국가자본주의자들이 취하는 기회주의적 중립의 입장이 어떻게 반소반공주의로 연결되면서 우익들의 주장과 일치하게 되는지를 밝힐 것이다. 우리는 한국내전의 기원과 계급적 성

격을 분석함으로써 제국주의와 한국사회 지배계급의 반동성, 야만성과 이들과 결과적으로 동조하게 되는 사노련 등 국가자본주의자들의 몰역사성, 몰계급성, 그리고 반동성을 폭로할 것이다.

한국내전의 기원과 계급적 성격

한국내전(조선반도 내전)은 6.25전쟁으로 통칭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반공우익적 논리(단순한 논리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지배하는 힘)는 한국내전의 성격을 수십 년 동안 은폐하고 한국내전의 본질을 과학적, 계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가로막아 왔다. 6.25전쟁으로 한국전쟁을 명명하는 것은 전쟁의 대규모 발발 시점을 기준으로 전쟁의 원인과 전쟁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남침 혹은 북침이냐 아니면 남의 유도에 의한 북의 남침설이냐는 논쟁이 오랫동안 진행됐다. 역사적 사실 그 자체를 밝힌다는 것이 그 자체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전쟁의 본질이 아니고 오히려 본질을 왜곡하고 은폐할 수 있다.

“전쟁은 계급투쟁의 연장”이라고 했다. 한국내전은 한반도 내에서 해방 이후에 치열하고 폭발적으로 진행됐던 계급투쟁의 가장 첨예하고 날카로운 연장선에 있다. 우리는 누가 먼저 전쟁을 일으켰는가가 아니라 전쟁의 계급적 성격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한국전쟁의 기원은 일본 제국주의 수탈과 압제, 착취체제인 식민지 지배로부터 시작된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악랄하고 야만적인 식민지 폭압통치는 조선에서 봉건체제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자본주의를 발전시켰다. 일본 제국주의는 1910년-1918년에 걸쳐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으



로 일제는 총독부 전체 세입의 45%를 토지세 명목으로 부과할 수 있었다. 이 사업은 토지에 대한 자유로운 저당.매매를 법률적으로 보장하여 지주의 토지에 대한 독점권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이 토지사업은 전통적 지주계급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이들의 토지보유 특권을 유지시켜줌으로써 이들을 친일세력의 강력한 보루로 삼았다.

사업 이전에 조선의 농민에게는 토지가격의 절반에 해당되는 영구소작권이 있어서 농민들이 이를 거래할 수 있었고, 지주가 마음대로 소작인을 갈아 치울 수 없었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강화된 새로운 지주-소작관계는 봉건시대의 지주-소작관계에 남아 있던 전통적 안정성, 약간의 온정주의마저도 무너뜨리고 더욱 극심한 고율의 소작료를 요구하기도 하고 심지어 소작관계 자체를 박탈하기도 했다. 소작농들은 일본 제국주의와 친일 지주들의 이중적 수탈로 인해 극심한 가난과 빈곤을 겪으면서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가고 심지어 수백만의 농민들은 일본과 만주 등지로 이주하기도 했다. 이로써 봉건적 지주-소작관계 모순으로부터 반(半)봉건적 형태로의 새로운 모순의 심화와 동시에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발전으로 인한 노자간의 모순이 제국주의 모순의 다양한 형태로 등장했다.

이기영은 소설 '고향'에서 여전히 농민이 지배적이었던 식민지 사회가 어떻게 변모해 가는지를 탁월하게 그리고 있다.

“그런지 저런지 무식한 박성녀는 자세히 모르나 어떻든지 세상은 만시대로 변하는 것 같다 그는 몇 천 년 전부터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농민의 아들이 아닌 것 같다. 그는 전고미문인 노동자란 이름을 가졌다. 수로는 몇 억만 해로는 몇 천 년 동안에 농민의 썩은 거름이 노동자를 탄생케 하였던가? 농민의 아들 노동자는 새로 깎아낸 병아리처럼 생기 있게 새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다. 그리고 이 병아리는 오히려 밤중으로 알고 늦잠이 고이든 농민에게 새벽을 알리는 것 같다”
(이기영 장편소설, '고향', 풀빛)

이처럼 노동자는 수 천년 동안 지배적이었던 농민의 갓 태어난 자식이었다. 농민의 자식으로서 노동자는 비록 갓 태어난 병아리처럼 작고 어리지만 생기 있게 농민을 각성시키고 변혁시키는 강력한 주체로서 서서히 성장해가고 있었다.

일제 통치 당시인 1930년대와 40년대 조선에서 노동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한일합방 당시 전체 인구의 84%가 농민이었고 0.18%만이 광산업과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였던 조선사회는 “1936년에는 중공업이 총산업생산의 28%를 차지했으며 50만 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공업부문에 고용되어 있었다. 이러한 수치는 1944년까지 급속도로 증가하여 한국인 노동자는 3배로 증가하였다”(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상, P.69).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에서 쌀과 원료를 수탈해 가고 식민지 노동력을 초과착취 했다. 그리고 조선을 일제국주의의 상품판매처로 전락시켰다. 일제가 만주를 침략하기 위해 조선을 병참기지화 하고, 조선에서 수탈한 쌀과 원료를 일본으로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철도가 전국에 걸쳐 부설되기도 했다. 식민지 조선의 자본주의 발전은 철저하게 수탈과 초과착취로 점철돼 있었다. 조선의 자본주의 발전은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기형적이고 왜곡된 형태로 발전하면서 국내자본은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다. 자본주의의 일반적 발전 과정 보다 식민지 자본주의는 수배의 고통을 노동자농민 등 민중들에게 강요했다. 지식인들 역시 민족차별과 억압에 적대적이었고 울분에 가득 차 있었다. 일부 친일세력들은 일제 경찰의 악랄한 앞잡이가 되어 조선 민중 수탈과 독립운동가 탄압에 앞장섰다.

일본 제국주의의 악랄한 통치 하에서 조선의 민중들은 농촌에서 소작쟁의를 통해 지주와 경찰, 일제 관리들에게 저항했고, 노동자들은 1930년대를 거치면서 파업투쟁으로 일제에 저항하기도 했다. 일제와의 투쟁 과정에서 각성하기 시작한 조선의 민중들은 그 누구도 일제로부

터의 해방 이후에 과거의 봉건적 억압으로 되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일제로부터의 해방 이후에 어떤 세상을 꿈꿀 것인가? 식민지 조선인들은 1945년 해방 이후에 해방된 조국을 어떤 세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 거대한 열망에 사로잡혔다. 이 조선민중들의 열망에 가장 부응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이었다. 이들 공산주의자들 다수는 국내 농촌과 공장에서 일제의 잔학한 탄압과 구속과 고문, 사상공작에도 굴하지 않고 살아남았다. 일부는 일제치하에서 학살당했다. 나머지 공산주의자들은 중국에서 일본 제국주의와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이들 공산주의자들은 일제의 감옥에서 해방을 맞았다. 이들이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보여준 자기희생적이고 목숨을 건 투쟁은 이들을 대중의 지도자로 받아들여지게 했다. 민족주의자들조차도 러시아 혁명과 쏘련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좌익적 요소를 상당부분 받아들였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 기간 동안에 약 400만 명의 조선인 노동자들과 만주 등지에서 200만 여명의 노동자들 대부분이 해방과 함께 귀향했다. 이들은 식민지 노동자로서의 억압과 설움, 분노를 안고서 대부분이 공산주의적 정치적 지향을 가지고 국내로 들어 왔다.

해방된 조국의 새로운 지도자들과 민중들의 거대한 요구와 열망은 빠르게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자주적 인민정부 수립의 열망으로 나타났다.

일제 치하에서도 대중파업과 소작쟁의 등으로 저항을 멈추지 않았던 노동조합과 농민조합과 청년, 여성 대중조직들이 해방과 더불어 다시 전국적으로 조직되었다. 노동조합은 일제가 남기고 간 공장들을 자주 관리하거나 통제하기 시작했고, 농민조합은 일본지주의 토지를 접수하고 지주들을 내쫓기도 하였다. 8월 15일 해방이 되고 일제가 미처 물러가기 이전 몇 주 사이에 전국적으로 건국준비위원회(건준)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해방 이후 조선공산당(조공)이 분파투쟁을 거치면서도 재건을 도모하면서 건준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이 건준에 의해 전국인민대표자들이 모여서 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6일 조선

인민공화국(인공) 수립을 선포했다.

압도적 다수의 인민들이 인민공화국을 해방 이후의 세상으로 건설하기 시작했을 때 일본 제국주의 시절의 친일 관리, 경찰, 지주, 자본가 등 우익 세력들은 자신들의 친일경력과 압도적 인민 다수의 해방 세상에 대한 열망에 눌러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한에서 조선 노동자민중들의 자주적 해방조국 건설의 열망은 미군정의 진주와 함께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미군정은 1945년 9월 7일 태평양 미육군 총사령부 포고 제1호를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미군정은 10월 10일에는 건준이 수립한 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군정은 우익과 손잡고 중앙과 지방의 인민위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친일 세력들은 미군정과 손잡고 발 빠르게 기회주의적 처신을 이어가면서 반공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미군정은 민중적 지지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 우익들과 손잡고 미군정이 원하는 정치체제를 남한에 수립하려 했다. 미군정과 손잡은 정치세력의 대표는 친미파인 이승만이었다. 이승만은 미국 내에서 외교로 해방을 구걸하던 자로, 미국 내에서는 독재적 행보로 독립운동세력을 분열시켰다. 해방 이후에는 대표적인 친미 반공주의자로 행세하며 반동 우익진영의 대표가 되었다.

이때부터 일제를 대신한 점령자인 미군정과 친미반소반공으로 변신한 우익들과 민중들의 계급투쟁이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미군정은 인민위원회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친일파 출신 경찰을 앞세워서 총칼로 위협하며 노동자농민이 접수한 공장과 토지를 다시 강탈해 갔다. 이때부터 미군정에 의한 대대적인 탄압과 민중학살이 시작됐다. 미군정은 45년 11월 초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 소속 노동자들이 관리하던 화순탄광을 강제로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대검과 폭격기까지 동원한 미군에 의해 화순탄광 노동자들은 체포되고 학살됐다. 이후 미군의 검거를 피한 화순탄광 광부들과 미군에게 아버지를 잃은 소년들을 중심으로 빨치산(구 빨치산)이 구성되었다. 화순탄광노동자들에 대한 학

살을 출발로 해서 미군정은 노동자들을 학살하고 전평을 박살낸 뒤에 전국의 공장을 강탈하였다.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소유한 토지를 강탈하고 소작료 인하 투쟁을 하던 농민들을 학살하기도 했다.

미군정을 반대하는 투쟁이 본격화된 이후부터는 수천 명의 민중들이 미군정과 경찰, 서북청년단 등 우익들에 의해 학살당했다. 그러나 이 모든 학살과 탄압은 미군정에 의한 인민위원회 제거 기도와 생존권 말살에 맞서는 47년 9월 총파업과 10월 민중항쟁, 미군정을 등에 업은 이승만의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기도에 맞서는 48년 4.3제주항쟁, 여순항쟁에서의 수만 명 민중학살과 이후 한국내전 직전과 발발 직후 국민보도연맹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이승만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최소 20만 명 이상의 핏빛 민중학살의 서막에 불과했다.

일제의 패망 이후 맞이한 조선의 해방열망은 자주적 통일정부를 세우려는 열화와 같은 투쟁으로 나타났다. 미군정과 우익은 민중들의 열망을 총칼로 짓밟고 민중들을 학살, 투옥하면서 남한에 친미 자본주의 정권을 세우려 했다. 남한에서의 미군정과 우익 정치세력이, 북에서는 쏘련의 진주와 더불어 쏘련사회주의 체제를 모방, 이식한 체제(이 쏘련 체제의 모방과 이식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언급한다)가 들어섰다. 북에서 쏘련체제에 대한 모방과 이식은 민중들의 요구와 열망과 일치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북의 친일 지주, 상인, 의사, 법조인 등 지배계급들은 이 과정에서 토지와 재산을 몰수당하고 남으로 이주해서 남의 우익세력의 강력한 기반 중의 하나가 되었다.

남한 내에서의 내전은 남한 내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 남한을 반소반공의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미군정과 이승만 우익정권의 기도와 맞물리면서 50년 6월 한국내전으로 전면화 되어 발생한 것이다. 한국전쟁은 남과 북의 전쟁이 아니라 내전인 동시에 전 세계 사회주의의 중심인 쏘련과 중국, 자본주의 체제의 중심인 미제국주의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세계적 차원의 계급전쟁이었다.

현대사 최대의 역사왜곡과 몰역사적 동조

당시 북조선에는 일제의 패망 이후 만주의 관동군을 격파하고 한반도에 남아 있던 일본군과 싸우면서 쏘련군이 진주했다. 그러나 쏘련군의 진주와 이후 남한에 등장한 미군정은 역사적, 계급적으로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조선인민에게! 조선인민이여! 쏘련군대와 동맹국 군대는 일본 약탈자를 조선으로부터 구축했다. 조선은 자유로운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조선역사의 첫장에 불과하다..... 일본통치하에서 살아온 고통의 나날을 잊지 말자! 토벽위에 얽혀져 있는 돌맹이마저도 조선인민의 괴로웠던 노력과 피와 땀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기억하라! 행복은 여러분의 손안에 있다. 반드시 조선인민 자체의 힘으로 자기의 행복을 창조할 수 있게 되지 않으면 안된다.... 조선노동자들이여! 노력에 의한 영웅심과 창조적 노력을 발휘하라! 조선인의 훌륭한 민족성의 하나인 노력에 대한 애착심을 발휘하라! 해방된 조선인민만세! 1945. 8.15 쏘련군 사령부”(민중운동사연구회, 「해방 후 한국 변혁운동사」, 녹진, P.141-142).

“남한민중에게 고향. 미군은 근일 중에 귀국에 상륙하게 된다. 상륙의 목적은 귀국을 민주주의 제도하에 두고 국민의 질서를 도모하는데 있다. 국가 조직의 개선은 일조일식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니 안녕 질서에 큰 혼란과 유혈이 따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떠한 개혁도 서서히 진행되어야 한다. 연합군 총사령관의 명령은 여러분을 원조하는 것을 취지로 삼고 있으므로 여러분은 이것을 엄숙히 준수하며 행동하기 바란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처벌될 것이다. 이기주의로 날뛰다든가 혹은 일본인 및 미상륙군에 대한 반란 행위, 재산 및 시설기관의 파괴 등 경거망동으로 치닫는 행동은 엄히 피해야 할 것이며.... 여러분이 충심으로 협력할 것을 요망한다. 1945. 9. 2. 조선주둔군 미군사령관 존리드 하지”(같은 책)

이 부분은 최근 뉴라이트에 의해 좌편향적 역사교과서라고 하는 금성교과서에서 실려 있는 부분이다. 금성교과서에서는 위의 쏘련군 사령관 치스차코프 포고문으로 알려진 포고문 외에 당시 태평양 방면 미육군 총 사령관 맥아더 포고령 1호가 실려 있다. 맥아더 포고문에는 조선 영토와 통치를 맥아더의 권한 하에 시행한다는 것과 주민의 재산권 존중, 정부 등 모든 공공사업 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과 고용인들이 종래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것, 군정 기간 동안 영어를 모든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공용어로 한다는 등 5개 조항이 담겨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뉴라이트조차도 이 상이한 포고문에 실린 역사적 진실이 두려웠는지 이를 두고 “미군은 점령군, 쏘련군은 해방군”이라는 세뇌 공작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포고문은 선전 선동을 통해 혁명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은 정치장교를 핵(核)으로 조직된 쏘련군 편성과 단순한 전투장교 위주로 편성된 미군 조직의 대민(對民) 선동술의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일 뿐이다.”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맥아더의 포고문은 인민위원회를 불법화하고, 친일 경찰과 관리 등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 인민위원회에 의해 운영되는 공장과 토지를 접수하겠다는 것을 외교적으로 표현한 것에 다름 아니다. 실제 역사는 맥아더의 포고문대로 진행됐다.

반면 “공장, 제조소 및 공작소 주인들과 상업가 또는 기업가들이여! 왜놈들이 파괴한 공작소 주인들과 상업가 또는 기업가들이여! 왜놈들이 파괴한 공장과 제조소를 회복시켜라! 새 생산 기업체를 개시하라! 붉은 군대 사령부는 모든 조선 기업소들의 재산을 보호하며 그 기업소들의 정상적 작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원조할 것이다.”라는 치스차코프 포고문에 실린 대로 북에서는 일제 잔재의 청산, 지주의 토지몰수와 일본인이 남기고 한 적산기업의 노동자 직접 운영 등이 실시됐다.

뉴라이트는 물론이고 트로츠키진영에서도 당시 북에 진주한 쏘련군

대의 강간과 약탈을 근거로 ‘스탈린 체제의 반동성’을 폭로한다. 쏘련군대에 의해 저질러진 강간과 약탈은 남한으로 도피한 일본인들에 의해 주로 소문이 퍼져나갔고 우익 신문과 이후 우익 역사가들이 강조했으므로 과장된 면이 없지 않고, 일본인과 지주에 대한 약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급적 성격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쏘련군 진주 초기 몇 주 동안 저질러진 강간과 약탈은 유럽에서의 파시즘과의 대규모 전투에서 선전적 전위의 대량사망과 피폐해진 쏘련의 상태로 인해 군인들에게 제복이나 식량도 지급하지 못한 점이 이러한 범죄를 부추겼다. 그러나 초기 몇 주 동안 아무런 통제도 없이 저질러진 강간과 약탈은 곧바로 근절됐다.

“1946년 2월 쏘련은 자신의 군대를 엄격히 통제할 헌병을 데려왔다. 그리하여 헌병은 한국여성을 강간하는 어떤 쏘련군들이든지 현장에서 사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러한 상황은 헌병이 파견되어 온 다음부터 없어졌고 그 이후로 쏘련군 장교들의 처신은 항상 정확했으며 군대는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그리고 쏘련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물자를 징발했지만 모든 것에 대해 보상해 주겠다는 영수증을 발부했다”(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하」, 청사, P.257).

트로츠키 진영에서는 쏘련군이 이북의 산업시설을 대규모로 약탈해갔다는 비판으로 ‘스탈린주의의 반동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미군 정보대는 군정 초기 몇 달 동안 쏘련군이 중요한 산업시설을 철거해 가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1946년 6월에 가서는, 이전의 보고들은 후퇴하는 일본인들이 파괴한 내용이 와전된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사실상 쏘련 기술자들은 파괴된 산업시설을 복구하는 데 최선을 다했음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1946년 중엽의 생산수준은 1945년의 수준을 초과했다”(같은 책 P.258).

쏘련군의 진주 이후에 벌어진 오류가 있다면 신랄하게 비판해야 한

다. 하지만 그것은 우익에 의해 재생산된 자료나 악의적인 왜곡, 부분적, 개별적 내용을 가지고 사회체제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쏘련군은 북에 진주하면서 초기의 그러한 오류를 시정하고 치스차코프 포고문대로 조선인의 자주적 권리와 인민위원회의 자발적인 정치적 활동을 보장했다. 쏘련군의 진주 동안에 이북의 인민위원회에 의해 취해진 일제 잔재 청산, 지주 토지와 친일파 재산 몰수, 공장 국유화, 노동자의 법적권리와 진보적 여성의 권리 등 당시의 급진적 조치는 반동적인 미군정과 우익정치세력에 의해 저질러진 대량 학살과 공장파토지에 대한 약탈(개인적 약탈이 아닌)과 대비되면서 남한 민중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남한에서의 미군정과 이승만 도당에 대한 분노와 항쟁은 북에서의 급진적 조치들에 의해 더욱 구체적인 정치적 전망을 가지고 진행됐다.

트로츠키 진영에서 ‘스탈린주의 반동체제’의 근거로 사용하는 역사적 사실 중에서 친탁, 반탁 논쟁에 대한 역사왜곡은 저들이 얼마나 몰역사적, 물계급적인 것이고 때로는 반동적이기 조차 한 것이지 잘 알 수 있게 한다.

“나는 이제 스탈린주의가 우리나라 혁명운동사에 해악을 끼친 구체적인 하나의 사례를 들어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핵심만 간략히 소개한다. 1945년 ‘해방’ 직후 김사임이라는 한 여성혁명가가 있었다 ...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신탁통치문제)이 외신을 타고 국내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 소식에 대한 조선민중들의 즉각적 반응은 말할 것도 없이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대한 반대였다. 당시 좌익 우익 할 것 없이, 특히 일제시대 건강성으로 인해 대중운동을 지도하며 주도해 나가고 있던 좌익은 지도부 대중 할 것 없이 모두가 반대하며 분노했다. 반대 항의집회도 열었다. 그것이 시대의 요구였고, 역사의 부름이었다. 며칠 뒤 지도자 ‘박’이 비밀리에 평양 가서 ‘김’과 쏘련군정 담당자를 만나고 와서 그의 태도는 바뀌어 있었다. 그도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설득을 당하고 온 것이다. 그렇

게 스탈린주의는 조선 혁명운동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고 중대한 시기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1946년 1월초 운동은 순식간에 친탁과 반탁으로 갈라졌고, 그 때까지 대중운동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던 좌익은 급속히 대중적 기반을 상실해 갔다. 일제시대부터 친일적 행위로 도덕성을 상실해 있던 우익은 ‘이때다’하고 날뛰기 시작했다. ‘순수’했던 김사임은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충실히 갓난아이를 등에 업고 친탁운동 조직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녔다. 그렇지만, 그녀는 속으로는 끝까지 친탁에 동의하지 않았다”(울프, 2009. 4.26, 스탈린주의 비판).

이 이야기는 저자가 출처를 밝히지 않았지만 ‘아리랑 고개의 여인’에 나오는 이야기를 자의적으로 재구성해서 인용한 것이다. 이것이 국가자본주의자들이 역사를 이해하는 천박한 방식이다. 우익 반공주의에 영향 받은 역사에 대한 철저한 무지와 왜곡, 국가자본주의라는 종파주의적 도그마가 결합해서 이 천박한 역사인식은 반동적, 반공적 역사인식으로 바뀐다. 이들은 반탁이 ‘시대의 요구’이자 ‘역사의 부름’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과연 ‘스탈린주의’가 끼친 해악 - 친탁 반탁논쟁이 해방 이후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해악은 국가자본주의자들의 인식대로라면 절대악일 것이다 -의 역사적 진실은 무엇인가?

그것은 친탁결정으로 대중적으로 알려진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사항이다. 이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사항은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철저하게 왜곡되어 있다. 심지어 맑스주의를 자처하는 국가자본주의자들도 해방 이후 60년 이상을 지배이데올로기로 작동해온 반공반소주의 이데올로기의 철저한 포로가 되어 춤추고 있다.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은 친탁결정이 아니다. 반공반소주의의 어릿광대들인 국가자본주의자들은 미.영.소 3개국 외상에 의해 국가 간 합의한 결정사항을 왜 미군정이 뒤집고 우익들의 반탁을 배후에서 이용하는지에 전혀 의구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제국주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파시즘 제국주의 국가가 지배했던 식민지 처리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했다. 미제국주의는 이를 통해 전쟁으로 인해 타격을 입고 제국주의 국가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격하된 영국과 프랑스에 대해 제국주의 국가의 핵심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려 했다. 그런데 미국 제국주의의 이러한 의도는 독일 파시즘을 격퇴하고 승리한 소련의 존재로 인해 강력하게 제한을 받아야 했다. 미국은 제국주의 핵심국가로서 전후 유럽과 일본을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두면서 재건하여 소련사회주의에 맞서려고 했다. 미국은 식민지 국가들이 해방된 이후 소련사회주의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되는 것을 막고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 국가에 대한 신탁통치를 주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신탁통치는 바로 이러한 미국의 새롭게 변화된 적극적이고 확대된 세계전략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었다..... 신탁통치의 핵심적 내용은 식민지에 대한 기존 제국주의 국가들의 배타적 식민통치를 다국적 신탁통치로 대체하고 종국적으로 독립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타적인 제국주의전략에서 개방적이고 다국적인 제국주의전략으로의 전환을 주도한 것은 소위 미국내 루즈벨트로 대표되는 국제주의노선이었다”(민중운동사연구회, 「해방 후 한국 변혁운동사」, 녹진, P.254-256).

이러한 미국의 신탁통치안은 식민지 해방투쟁의 영향으로 제국주의 국가들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군사적 방식의 식민지 직접 통치가 힘들어지자 식민지 해방국가들을 제국주의 국가들이 간접적으로 통치하고 군사적, 정치적, 자본의 힘에 비례해 신탁통치 국가에 대한 지배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안은 제국주의 국가 내부의 불균등한 힘에 의한 경쟁과 대립의 산물인 동시에 주요하게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공동이해인 반소반공의 전략적 기치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안에 대해 프랑스와 영국은 자신들의 식민지 지배가 무너질 것을 우려

하여 신탁통치의 적용대상은 한반도로 제한되게 되었다.

미국의 루스벨트는 1943년 3월 아시아국의 전후 처리를 논하는 자리에서 약 40년간 한국을 신탁통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5년 2월 8일 알타회담에서도 루스벨트는 20년 내지 30년의 신탁통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일본에 대한 원자폭탄 투하와 소련이 대일전 참전으로 일본이 항복하고 소련이 만주를 장악하고 한반도로 일본군을 격퇴하고 진군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미국은 38선 분할점령을 제안하게 되었다. 한반도에 미소군이 진주한 지 4개월이 되는 때에 미국, 영국, 소련의 외상들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스크바에서 회합하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도 미국은 여전히 신탁통치 주장을 계속했다. 이에 대해 당시 소련 측 외상이었던 몰로토프는 조선임시민주주의 정부의 수립과 주권행사의 시급함을 밝히고 4개국은 조선의 독립과 민주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원조를 하는 후견적 위치에 머물러야 하고 그 기간도 5년 이내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미소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가운데 소련이 입장이 주되게 반영된 합의한 모스크바 3상회의의 핵심 결정문은 다음과 같다.

1. 조선을 독립국가로 재건하고 장기간의 일본 지배로 인한 악독한 잔재를 신속히 청산하기 위하여 임시적인 조선민주정부를 수립한다.
2. 조선임시정부의 구성을 돕고 그를 위한 적절한 방책을 미리 만들기 위해 조선의 미, 소 사령부 대표로 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
3. 임시정부와 민주단체들의 참여 아래, 조선의 민주적인 자치정부의 발전과 민족적 독립의 달성을 위해 협력원조(후견)할 수 있는 방책을 작성하는 것이 공동위원회의 임무이다. 공동위는 조선임시정부와 협의를 거친 후에 5년 이내의 기한으로 하는, 조선에 대한 4개국 후견협정을 작성하기 위해 이 나라 정부들이 공동심의를 받을 것을 제안한다.
4. 2주일 내에 조선에 주둔하는 미, 소 양군사령부 대표회의를 소집한다.”(오연호, 「우리현대사의 숨은 그림찾기」, P.28)

이처럼 이 결정문의 핵심은 일제 식민지 압제의 결과를 하루 빨리 청산하고 조선에서 통일정부를 수립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은 조선에 대한 5년간의 신탁통치로 알려지면서 김구가 중심이 된 민족주의 우익세력들과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우익세력들은 격렬하게 반탁운동을 했다. 하지만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은 모스크바 협정 전까지 미국의 신탁통치안에 반대하다가 소련의 입장이 주로 반영된 모스크바 협정안을 지지했다. 그런데 이 모스크바 협정문이 신탁통치안이라는 악의적 왜곡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모스크바 3상회의가 진행중이던 1945년 12월 27일 『동아일보』는 워싱턴에서 지급(至急)으로 전송된 뉴스를 실었다.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3국회담을 계기로 조선독립 문제가 표면화하지 않는가 하는 관측이 농후해가고 있다. 즉 번스 미국무장관은 출발 당시에 소련의 신탁통치안에 반대하여 즉시 독립을 주장하도록 훈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3국간에 어떠한 협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불명하다. 그러나 미국의 태도는 카이로선언에 의하여 조선은 국민투표로써 그 정부의 형태를 결정할 것을 약속한 점에 있는데, 소련은 남북 양지역을 일괄한 신탁통치를 주장하여 38선에 의한 분할이 계속되는 한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1946년 1월에야 왜곡보도로 판명된 이 기사가 인쇄되고 있을 때 모스크바에서는 위와 정반대의 결정이 일어나고 있었다. 후일의 반탁.반소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이 기사는 정보 조작에 의한 민족분열의 시발점이었다는 데서 가히 현대사 최대의 왜곡보도라 할 수 있다”(같은 책, p.26-27).

동아일보는 연이어서 왜곡된 기사로 반소반공 운동을 부추겼다. 그러나 미군정과 미언론, 동아일보, 한국민주당(한민당) 등이 합작한 박헌영 인터뷰 왜곡기사는 공산당을 ‘나라를 팔아먹는 소련의 꼭두각시’로 조작했다.

“왜곡의 진상은 이러했다. 1월 5일 박헌영은 외신기자들과의 면담에서 『뉴욕타임스』 서울 특파원인 존스톤으로부터 신탁통치에 관한 질문을 받고 ‘조선인이 조선인을 위해 다스리는 조선’을 원한다고 답했다. 그런데 존스톤은 이를 ‘박헌영이 조선에 대한 소련의 일개국 신탁통치를 절대 지지하며 5년 후 조선은 소련의 일 연방으로 참가하기를 희망한다’고 기사화했다. 그것은 백주의 살인에 비유될 만했다. 미군정의 『G-2 주간보고서』 마저도 ‘박헌영의 말은 완전히 왜곡되어 보도되었다’고 기록했다”(같은 책, P.31)

소련 정부는 미국 정부가 모스크바 협정을 같이 체결해놓고도 미군정이 우익을 부추겨 반탁운동을 한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미국정부는 이에 대해 곤혹스러워 했지만 한반도에서의 자주적 통일정부 수립은 친소경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미군정은 반탁운동을 계속 지원했다. 소련은 이에 대해 자주적 통일정부 구성에 반탁세력들을 배제하자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미소 양군이 한반도에서 동시 철군하자고 주장했다. 이승만 도당은 반탁을 통해 자신들이 진정으로 민족주의 세력인 냥 위장하면서 이를 통해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려 하였다. 이때서야 반탁에 적극 나섰던 김구 같은 우익민족주의자들도 이 의도를 알아차리고 이승만과 결별하고 단정반대 투쟁에 나서게 되었다.

좌익이 소련의 지령 한마디로 반탁에서 친탁으로 돌아서고 이로 인해 우익 민족주의자들에 비해 급속히 대중적 영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승만 도당과 반공주의자들의 악선동에 불과하다. 그런데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여전히 미군정과 우익들에 의한 ‘현대사 최대의 왜곡’을 ‘스탈린주의 반동체제’라는 국가자본주의 종파주의에 빠져 앵무새마냥 반복하고 있다.

국가자본주의 도그마에 의한 역사왜곡

사노련은 “북한에 들어선 김일성 권력은 1917년 러시아의 소비에트나 1871년 프랑스의 파리로된 같은 노동자계급의 자주적이며 대중적인 권력이 아니라, 급진적 민족주의자의 권력에 지나지 않았다. 북한의 국유화 조치는 김일성 권력의 경제기반을 안정화하고, 노동자대중에 대한 착취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었다(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 말하는 ‘왜 사회주의인가?’)고 주장한다.

사노련의 악의적 주장과 달리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남한과 달리 자율성을 인정받으면서 혁명적 조치를 빠르게 취해나갔다. 또한 소련의 기술과 지원 하에 파괴된 생산시설을 복구하여 국유화의 기초를 다진 뒤 산업 국유화 조치를 취하고 노동자보호 법률과 여성에 대한 진보적 법률과 인민위원회 참여 보장, 복지정책 등 진보적 조치를 취해나갔다. 특히 3.7제 소작료 인하 투쟁에서부터 시작해서 곧바로 토지 국유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토지에 대한 빈농들의 열화와 같은 열망을 반영하여 지주 토지의 무상 몰수와 무상분배라는 혁명적 조치를 취해 나갔다. 물론 미군정과 달리 소련군은 자신들이 원하는 체제를 북 인민들이 만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인민위원회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지원했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소련이 원하는 체제와 대다수의 인민들이 원하는 세상이 일치했다는 점이다. 때문에 북의 공산당은 인민 대중들의 절대적 지지를 획득하면서 노동자농민의 대중적인 권력을 구축해나가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러한 과정이 “북한의 국유화 조치는 김일성 권력의 경제기반을 안정화하고, 노동자대중에 대한 착취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간단하게 폄하할 수 있는가? 물론 이러한 국유화 조치가 김일성 권력, 즉 공산당의 경제기반을 안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안정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미군정과 마찬가지로 억압과 학살, 총검으로 만들어졌는가? 인민의 광범위한 대중적 요구와 열망에 기초해서 만들어졌는가? 이러한 거대한 역사적 진보를 국가자본주의자들은 ‘스탈린주의 반동체제’라는 도

그마에 사로잡혀 “노동자 대중에 대한 착취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었다”라고 왜곡한다.

사노련은 당시 남북한 노동자민중의 거대한 열망과 요구에 반대하는 반동적인 입장에서 서 있다. 이는 반소반공에 기반을 둔 우익들의 역사 인식과 맞닿아 있다.

“북한은 세계 노동자혁명의 패배(독일 노동자혁명의 실패에서 시작해 소련에서 노동자권력이 파괴되고 스탈린 관료집단의 반혁명이 승리하는 데로까지 나아갔으며, 결국 코민테른을 집어삼킨 뒤 불가리아, 동유럽, 중국, 한반도로 퍼져나간 패배)의 직접적인 결과물이다. 북한은 이 패배의 불가피한 결과로 탄생한 세계적 관료체제의 한 부분이다”(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 말하는 ‘왜 사회주의인가?’)

이들은 스탈린주의 반동체제, 국가자본주의라는 악의적인 도그마에 사로잡혀 불가리아, 동유럽, 중국, 한반도로 퍼진 혁명의 물결을 패배의 산물이라고 인식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권력의 수립은 소련 사회주의와 독일 파시즘과의 전쟁에서 파시즘의 패배라는 거대한 역사적 진보를 바탕으로 해서 달성됐다. 파시즘의 패배와 소련 적군의 진격은 동독을 비롯한 동유럽 전반을 파시즘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켰다. 이러한 거대한 투쟁의 축을 바탕으로 해서 엄청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중국 공산당이 대장정을 성공리에 마치면서 마침내 半식민지 상태였던 중국을 해방시켰다. 국가자본주의의 단순하고 종파주의적인 눈으로 보면 중국과 조선의 해방은 소부르주아 혁명에 불과하지만 이들 국가의 혁명과 해방 이후 자리 잡은 체제는 식민지, 반식민지 등의 국가에서 인민민주주의 형태로 특수화된 사회주의 권력이 수립된 것이다.

사노련 국가자본주의자들은 북의 사회주의가 노동자 혁명이 없는 가운데 수립되었다고 비판한다. 물론 북의 식민지 해방과 혁명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전 세계적인 정세에서 파시즘과 일본 제국주의의 패배와 함께 성립되었다. 하지만 일본 제국주의는 중국혁명으로 가장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조선의 혁명가들의 압도적 다수는 중국 공산당에 조선 의용군으로 참여해서 중국 혁명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조선인 혁명가들은 중국의 혁명이 일본 제국주의의 패배로 이어질 것이고, 이것이 조선의 식민지 해방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선인들은 반식민지 상태였던 중국보다도 일본 제국주의의 수탈에 고통을 받았으므로 일본 제국주의와의 투쟁에서도 더 헌신적으로 목숨 바쳐 투쟁했다.

조선의 해방이 단순히 외세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주장은 비주체적이고, 사대주의적인 역사관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남한에서 수립된 반공 체제에 의해 혁명가들의 고난과 투쟁의 역사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단순히 북에서 혁명이 없이 체제가 수립되었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파시즘과의 투쟁, 중국의 일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과 조선인 혁명가들의 활약, 한반도 인근에서의 무력항쟁, 1930년대 원산 총파업 같은 노동자 대중파업 등을 무시하는 것이다. 북조선에서의 사회주의의 성립이 단순히 스탈린주의 체제의 이식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저 악랄한 국가자본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그것이 단순한 이식(移植)이라면 그 이식이 무리 없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조선인민들이 엄청난 열망과 의지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체제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조선인들은 1919년 기독교적 3.1만세 운동으로 일제국주의에 저항하던 것이 처절한 패배로 돌아가자 저항의 방식을 무장투쟁으로 변화했다. 조선에서의 3.1운동 이후에 1920년대부터는 수많은 민족해방운동가들이 사회주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들은 러시아에서의 1917년 10월 혁명 이후에 쏘련 사회를 조선을 해방시키고 나서 만들어야 할 사회체제로 받아들였다. 해방 이후에도 쏘련은 조선인들에게는 ‘해방조국’이었다. 조선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이식과정인 내선일체화와 해방 이후 미제국주의의 자본주의 체제의 이식과정과 북에서의 쏘련체제의 이식과정이 얼마나 거대한 차이가 있는지 종파주의자들이 아니라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몰역사성, 역사에 대한 가장 단순하고 악의적인 입장에 의하면, 조선 인민들과 혁명가들의 수십 년 동안의 고난과 투쟁, 해방 이후의 미제국주의에 맞서는 투쟁과 이승만 반동정권에 맞서는 투쟁, 4.3항쟁, 여순항쟁, 빨치산 투쟁, 수백만의 민중과 수십만의 혁명가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쟁취하려 했던 거대한 열망과 의지, 전망이 단지 스탈린주의의 산물이고, 국가자본주의를 수립하기 위한 소부르주아 투쟁인 것이다. 수천만 민중들의 열망과 의지, 요구가 단지 스탈린주의의 반동체제의 영향을 받은 결과물이고, 그것이 현실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타도해야 한다는 국가자본주의자들은 역사에 대한 얼마나 대담하고 가공할만한 모략적 악선전을 하고 있는 것인가?

사노련 같은 국가자본주의자들은 현대사의 거대한 계급투쟁, 또한 이러한 모순의 최대 결절점인 한국내전을 지배자간의 전쟁, 또는 미소 제국주의자들의 대리전으로 몰역사적이고 몰계급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역사적 격동의 시기, 노동자 민중과 제국주의, 지배계급간의 피를 부르는 거대한 항쟁에 대해 이들은 초연하거나 중립적이거나 애써 스탈린주의의 산물, 스탈린주의의 영향을 받은 국가자본주의 체제를 이식하기 위한 헛된 투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격동의 전 세계적인 계급투쟁과 그 한복판에서의 계급투쟁에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왜곡된 역사인식이고, 결과적으로 지배계급의 이해에 철저하게 복무하는 반동적인 입장인지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종파주의적인 국가자본주의는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청산주의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익 청산주의는 눈에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투쟁하기 쉬울 수 있으나 트로츠키주의라는 급진적 목소리로 울려 퍼지는 좌익 청산주의는 운동을 정치적 전망을 가로막고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더 위험할 수 있다. 한국내전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 역사인식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